

최종보고서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2년 9월



한국행정연구원 - KIP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통계청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9.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박응격

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요약문	ix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
제2장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개념 및 현황 분석	9
제1절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11
1. 정책지표와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개념 이해	11
2.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성요소	13
3.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17
제2절 국가정책지표체계 관련 국내 현황 분석	20
1. 현행 국가통계체계의 특징	20
2. e-나라지표의 구축 및 운영 현황	21
3.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구축 및 운영 현황	29
4.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34
제3장 주요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 사례 분석	39
제1절 미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	41
1. 구축배경 및 추진경과	41
2. 거버넌스 체계	43
3. 정보화 시스템	44
4. 지표분류체계	46
5. 개별 국가정책지표	47
6. 미국 주정부의 CitiStat & GMAP	49
제2절 영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	54
1. 영국의 국가통계행정체계 개요	54
2. 지속가능발전지표(SDI)의 개발 및 운영	61
제3절 호주의 국가정책지표체계	64

1. MAP의 구축 배경 및 추진 체계	64
2. MAP의 지표분류체계와 개별 정책지표	66
3. Essential Statistical Asset for Australia	71
제4절 스위스의 국가정책지표체계	76
1. 구축 배경 및 추진 체계	76
2. 정보화 시스템	77
3. 지표분류체계	80
4. 개별 정책지표	88
제5절 기타 국가의 국가정책지표체계	92
1. 뉴질랜드	92
2. 일본	95
3. 프랑스	95
제6절 주요국 사례분석의 시사점	97
1. 주요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 사례분석의 종합적 분석	97
2.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목적 및 기본방향	98
3.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성 영역별 시사점	100

제4장 국가정책지표체계 종합적 구축방향 105

제1절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의 방향설정	107
1. 현행 국가정책지표체계의 문제점	107
2.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109
3.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청사진	110
제2절 영역별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향	113
1.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113
2. 국가정책지표 정보시스템	115
3.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116
4. 개별 국가정책지표	117

제5장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방안 119

제1절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의 이론적 접근	121
1. 현행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및 쟁점 진단	121
2.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의 유형 분류	123
3.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설계 대안 선정 기준	126

제2절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의 대안 탐색	128
1.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대안 설계의 기준	128
2. 대안 (1) 대통령 소속의 범부처형 위원회 체계	128
3. 대안 (2)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형 위원회 체계	130
4. 대안 (3) 기획재정부 소속의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 체계	131
5. 대안 (4)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 형태의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 체계	132
6. 대안 (5) 통계청 직속의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 체계	133
제3절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의 대안 선택	135
1.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의 대안별 검토	135
2.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136

제6장 국가정책지표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방안 139

제1절 정보화 시스템 개발의 이론적 검토	141
제2절 국가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146
1. 제1안 : 개별 기관 연계 방식	146
2. 제2안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 방식	150
3. 제3안 : 현행 시스템 유지	152
4. 각 안의 구축방안 비교 및 예산 소요 비교	153
제3절 국가정책지표 웹사이트 운영 개선방안	156

제7장 국가정책지표 지표분류체계 구축방안 161

제1절 지표분류체계 설계의 주요 쟁점	163
1. 주요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지표분류체계 비교	163
2. 목적가치와 기여가치의 구분	165
3. 지표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	166
4. 분류체계 기준으로써 부문(field/topic)과 주제(theme)	167
5. 분류체계의 범위 설정 기준으로써 평면적 모델과 위계적 모델	168
제2절 국가정책지표 지표분류체계 설계원칙 및 절차	171
1. 부문별 분류와 주제별 분류의 혼합을 통한 지표분류체계 설계	171
2.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가치체계 모형의 수립	174
3.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설계의 절차	175
제3절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작성	177
1.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요약	177
2.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구성	178

제8장 국가정책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 185

제1절 국가정책지표 진단을 통한 개발 대상 선정 187

제2절 개별 국가정책지표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주요 쟁점 188

1. 주요국의 정책지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188

2. 우리나라 e-나라지표와 각 국가별 정책지표의 차이 분석 190

제3절 향후 개발이 필요한 국가정책지표 영역과 정책지표 구축논리 196

1. 향후 개발이 필요한 국가정책지표 196

2. 원칙에 기반한 정책지표 구축논리 198

3. 지표 구성 및 지표 설명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사례 200

제4절 국가정책지표 선정, 품질관리 및 진단 기준 202

1. 국가정책지표의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202

2.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국가정책지표 선정기준 및 내용, 평가수준 203

3. 국가정책지표의 개발 단계와 주요 착안사항 205

4. 국가정책지표 개발 방안 및 사례 206

5. 국가정책지표의 관리와 검증 207

제9장 결론 :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211

참고문헌 217

표 목 차

[표 2-1] 지표분류체계의 차원별 측정영역	16
[표 2-2] e-나라지표의 정책지표 분류체계-분야별 분류	27
[표 2-3] e-나라지표의 개별 지표 구성 - 고용부문 소분류 사례	29
[표 3-1] 미국 SUSA의 국가정책지표 및 관련 측정도구	48
[표 3-2] 영국 SDI의 20개 주요 핵심지표	63
[표 3-3] 호주 MAP의 지표분류체계에서 나타난 국가발전의 차원	67
[표 3-4] 호주 MAP의 주요 정책지표	68
[표 3-5] 호주 ESA의 지표분류체계	72
[표 3-6] 호주 ESA의 범주별 개별 정책지표 내용	74
[표 3-7] 스위스 MONET 지표분류체계의 stock-flow 모델 적용	83
[표 3-8] 스위스 MONET의 stock-flow 모델 적용을 통한 지표개발 사례	85
[표 3-9] 지속가능발전 핵심개념과 연계된 지표분류체계 개발	86
[표 3-10] 스위스 MONET의 16개 핵심지표	90
[표 3-11] 스위스 MONET의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	91
[표 3-12] 뉴질랜드 Tier1의 지표분류체계와 개별정책지표	94
[표 3-13] 주요국 국가정책지표체계 사례분석 종합	97
[표 5-1]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의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124
[표 5-2] 조직화 설정기준에 따른 거버넌스 대안별 비교	135
[표 7-1] 주요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지표분류 항목	163
[표 7-2] 주요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지표분류기준에 따른 분석	164
[표 7-3] 목적가치와 기여가치에 따른 영역별 지표분류	165
[표 7-4] 목적가치와 기여가치의 실용적 접근	166
[표 7-5] 스위스 MONET 분류체계에서의 주제별 분류 적용	168
[표 7-6] 지표분류체계의 주제별 분류와 부문별 분류 비교	168
[표 7-7] 호주 MAP에 나타난 지표분류체계의 위계적 모델 적용	169
[표 7-8] 위계적 모델과 평면적 모델에 따른 지표분류체계의 특징	170

[표 7-9]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요약	177
[표 7-10]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 사회 영역	179
[표 7-11]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 과학기술 영역	180
[표 7-12]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 환경자원 영역	181
[표 7-13]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 경제 영역	182
[표 7-14]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 외교안보행정 영역	183
[표 8-1] 주요국의 정책지표 관련 분야 현황 분석	189
[표 8-2] Monet 시스템과 e-나라지표의 지표구성 비교	191
[표 8-3]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지표품질관리 기준	202
[표 8-4] 국가정책지표 품질관리기준 항목과 내용	203
[표 8-5] 국가정책지표 선정기준의 자체 평가표 양식	204
[표 8-6] 측정가능성 차원의 지표 점검방법 사례	205
[표 8-7]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206
[표 8-8] 정책내용에 따른 지표 설정 사례 : 직업훈련학교 지원사업	206
[표 8-9] 효율성 지표 개발 사례	207
[표 8-10] 국가정책지표 주요 기재사항표 사례 : 문화 및 관광 분야	208
[표 8-11] 국가정책지표 주요 기재사항표 사례 : 보건 분야	209
[표 9-1]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로드맵	215

그림 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범위	5
[그림 2-2] e-나라지표 웹페이지 초기화면	23
[그림 2-3] e-나라지표 웹페이지의 개별 지표 제공 방식	24
[그림 2-4] e-나라지표 웹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메뉴	25
[그림 2-5] e-나라지표 웹페이지의 주요지표서비스	26
[그림 2-6] 국가통계포털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체계	30
[그림 2-7]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의 지표분류체계	31
[그림 2-8]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의 특집통계 서비스	32
[그림 2-9]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의 경기순환시계	33
[그림 2-10]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의 테마통계 서비스	34
[그림 2-11]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의 지역통계정보 서비스	34
[그림 2-12] 중앙행정기관별 통계정보시스템 구축현황	36
[그림 2-13] 환경부의 환경통계포털 웹페이지	36
[그림 2-14]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포털 웹페이지	37
[그림 2-15] 중소기업청의 조사통계시스템 웹페이지	38
[그림 2-16] 서울시의 희망서울 생활지표 웹페이지	38
[그림 3-1] 미국 SUSA 웹페이지의 지표제공 방식	45
[그림 3-2] 미국 SUSA 웹페이지의 SNS 서비스 제공	46
[그림 3-3] 미국 SUSA의 부문별 정책지표 선정 예시	47
[그림 3-4] 미국 GMAP의 경제활성화 관련 상황판	52
[그림 3-5] 미국 GMAP의 지표별 자료 제공 방식	52
[그림 3-6] 미국 GMAP의 경제활성화 관련 액션플랜	53
[그림 3-7] 영국통계기구와 통계청의 조직구조	56
[그림 3-8] 영국 GSS의 거버넌스 체계	57
[그림 3-9] 영국 통계청 웹페이지를 통한 통계지표 검색화면	58
[그림 3-10] 영국 통계청 웹페이지를 통한 통계지표 검색결과 화면	59

[그림 3-11] 영국 SDI의 지표 제공 웹페이지	62
[그림 3-12] 호주 MAP의 웹페이지 화면 구성	66
[그림 3-13] 호주 ESA의 조직적 구성틀	73
[그림 3-14] 호주 ESA 구축 로드맵	75
[그림 3-15] 스위스의 통계청 조직 및 MONET 담당부서	77
[그림 3-16] 스위스 MONET의 웹페이지 구성화면	78
[그림 3-17] 스위스 MONET 웹페이지에서의 지표제공방식(실업률 사례)	78
[그림 3-18] 스위스 MONET 웹페이지의 지표별 아이콘 범례	79
[그림 3-19] 스위스 MONET 웹페이지의 지표별 아이콘 적용 사례	79
[그림 3-20] 스위스 MONET의 지표분류체계	80
[그림 3-21] 스위스 MONET의 핵심개념과 지표분류체계	81
[그림 3-22] 스위스 MONET 지표분류체계의 stock-flow 모델	83
[그림 3-23] 지속가능발전 주제의 파악을 통한 스위스 MONET의 지표분류 개발	86
[그림 3-24] 스위스 MONET의 핵심개념별 주요 정책명제	87
[그림 3-25] 뉴질랜드 Tier1의 웹페이지	93
[그림 4-1] 국가통계정보시스템의 발전과정과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의 필요성	109
[그림 4-2]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로의 전환	111
[그림 4-3]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모형	112
[그림 4-4]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	113
[그림 5-1] 우리나라의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 현황	121
[그림 5-2] 대통령 소속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130
[그림 5-3] 국무총리 소속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131
[그림 5-4] 기획재정부 소속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132
[그림 5-5]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 형태의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133
[그림 5-6] 통계청 소속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134
[그림 6-1] 개별기간 연계방식의 정보화 시스템 설계도	147
[그림 6-2]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방식의 정보화 시스템 설계도	151
[그림 7-1]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설계원칙	172

[그림 7-2]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설계의 모의적 사례	173
[그림 7-3]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가치체계 모형 수립	175
[그림 8-1] 정책지표 상의 목적가치 정립에 있어서 3가지 핵심축 : 스위스 사례	193

〈보고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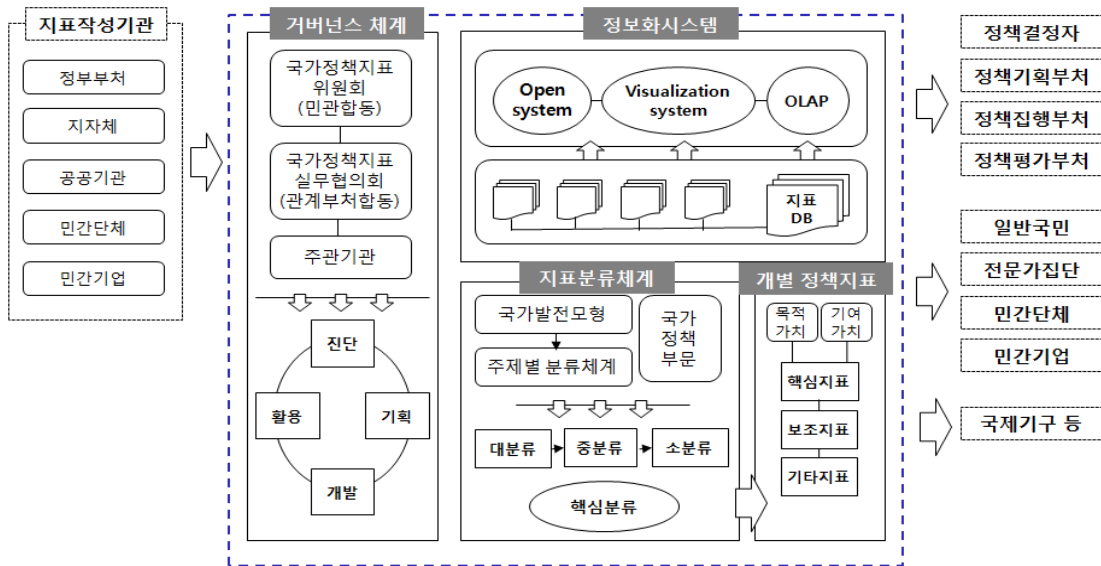
1. 개념 및 구성 요소

- 국가정책지표체계(National Policy Indicators System)의 개념
 - 국가 발전 목적을 전제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지표들을 조합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적 노력
 - 정책지표(Policy Indicator) : 정책적 가치 및 소망성에 비추어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지표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성 요소
 -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정보화 시스템, 지표분류체계 및 개별 정책지표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

- ① 거버넌스 체계 : 국가정책지표의 작성·관리·활용에 대한 역할 및 책임설정
- ② 정보화 시스템 : 지표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기술
- ③ 지표 분류체계 :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들의 위계적 구성방식 및 항목
- ④ 개별 정책지표 : 지표분류체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측정도구

〈국가정책지표체계 개념도〉



2. 필요성

- 기존 e-나라지표를 중심으로 한 국가정책지표체계의 한계
 - (지표 포괄범위 한계) 새롭게 등장한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제기
 - (지표 활용상 한계) 공급자 중심의 지표 개발·관리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부족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기 보다는 개발 및 관리가 용이한 지표에 집중
 - (지표 관리체계상 한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부재하며, 정책적 필요에 따른 지표의 기획·활용에 비해 작성·관리에 초점

- 근거기반정책관리(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의 확산에 따른 정책과정에서 통계지표의 활용 강화
 - 현재의 정책만족도 조사와 같이 각 부처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정책문제의 인식 및 대안의 선택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

- 급격히 변화되는 정책환경, 녹색성장이나 공정사회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복합적 정책영역, 미래정책수요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

- 광우병 피담, FTA 효과, 상수도 민영화 등 각종 정책사안과 관련한 정책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한 정책소통 필요성 확대

- 주요 선진국은 포괄적이고 목적성을 반영한 국가정책지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지표체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

<주요국 국가정책지표 구축 사례>

	미국	영국	호주	스위스
명칭	SUSA (the State of the USA)	UK SDI (UK Gover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MAP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ESA (Essential Statistical Asset for Australia)	MONET (Monitoring Nachhaltiger Entwicklung: Monitoring Lasting Development)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발전 방향에 따른 역량집중 국가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및 정부의사결정 책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기초한 종합적 국가발전 상황 조망 지속가능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로 대표되는 기존 통계지표의 정책대응성 한계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정책지표 요구 국가발전방향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지표의 정립 관련 정책의 진단 및 모니터링 기능 수행
구축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년 회계감사원과 국립과학원 주도 '07년 비영리단체로 추진체계 설립 '08년 해당 법률안 제출 후 '10년 법률안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년 최초 SDI 발간 지속적 수정을 통해 '07년 삶의 질에 대한 측정지표를 포함한 지표보완 '07년 국가통계 관련 법령 제정 및 '08년 통계당국(SA)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년 MAP 보고서 최초 발표 통계청 주도로 광범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12년 새로운 정책지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ESA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년 통계청 주도로 국토부와 환경부가 참여하여 지표체계 구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의 비정치적 독립기구를 통한 지표개발 및 관리 11개 핵심지표와 66개 당면과제 수록 인터랙티브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68개 지표분류에 따른 126개 상세지표 포함 신호등 체계 및 각종 차트 등을 통한 시각화 강조 1400명에 달하는 범정부 통계책임자의 독립적 협의체로서 GSS 운영을 통한 기획·조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shboard 방식을 통한 현황분석 및 국가발전상태의 시각적 제시 주요영역 및 보조영역 등의 구분을 통한 위계적 지표체계 17개 핵심지표에 대해 지표모음의 방식에 따른 제공 통계자원관리의 개념에서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표발굴 및 진단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 통계청의 국토환경 담당부서에서 해당 지표 전담 관리 사회통합, 환경적 책무성,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체계적 분류체계 전체 12개 범주에 대한 73개 지표 지표의 정책적 중요성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내용 제시
주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 강조 과학적이고 통계적 방식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의 검증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산형 국가통계체계 한계 극복을 위한 기획·조정 기구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종합적 국가발전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통계지표의 한계 및 삶의 질에 대한 정책 요구 대응 시각적 효과가 우수한 지표제시방법 위계적 지표 구성을 통한 활용가능성 정책지표의 체계적 진단 및 발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의 고려 목적성과 체계성이 명확한 지표체계의 개발 지표분류체계의 정책주제 및 정책자치 반영

3.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기본 방향

① 정책지표의 본질적 속성인 정책연계성 강화

- 국가정책지표가 갖고 있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지표의 목적성을 강화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에 대응되는 정책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지표체계의 정책 포괄범위를 확대
- 일반적 정책영역의 분류를 넘어 현안 쟁점들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지표의 개발 및 관리

②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 과정에 민간참여 확대

- 정부 내 정책결정자나 관계자 외에 일반 국민들의 정책지표 수요에 대한 반영
- 정책지표 작성 및 관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보장
- 정책지표가 갖는 정책적 의미에 대해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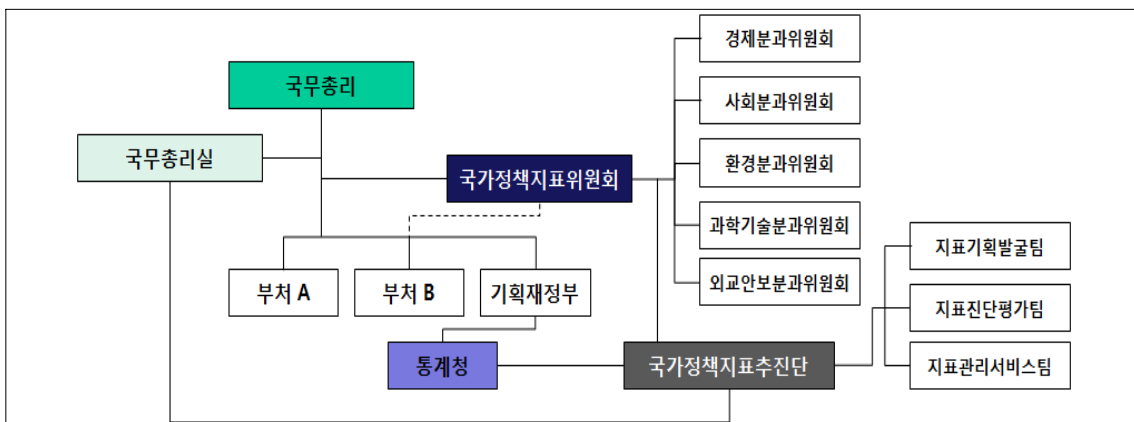
③ 분산형 통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리 효율성 제고

- 국가통계기관 외에 각 통계작성기관 및 관계집단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책지표 관리 효율성 제고
- 통계청의 정책지표 기획·발굴 및 진단 활동과 개별 통계작성기관의 정책지표 작성 및 관리 활동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
- 개별 정책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과 관련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

4. 거버넌스 구축

◇ 단기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범정부위원회로 위상을 강화

- 현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가칭 “국가정책지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통계의 정책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통계활용 목적이 강조되고, 통계지표와 정책지표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효율성을 제고
 - 국가정책지표 관련 실무적 지원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 최소화를 통해 관련 입법추진이 용이하여 정책요구를 원활하게 추진
 - 한정적인 법적 통제력과 행정력 밖에 행사할 수 없어 국가정책지표 관련 업무 수행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가 관건
- “국가정책지표 분과위원회”의 업무영역 확장에 따라 강한 법적 구속력과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 조정을 담당
 - 총리실 소속 범정부위원회를 통해 국가정책지표를 총괄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
 - 특정부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조정이 유리하고 국가정책지표관련 업무 수행의 법적통제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과 안정성이 제고



5. 정보화 시스템 구축

◇ 단기적으로 현 e-나라지표 시스템을 진단·개선하여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공공·정부 기관의 DB 연계를 통한 통합 국가정책지표 DB 구축

- 현 e-나라지표 시스템의 진단 및 개선을 통해 국가정책지표 시스템으로 활용
 - 웹페이지 개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메뉴 및 기능의 추가

<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방향 >

- ▷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초기 화면 변경, 국가정책지표가 주요 영역별로 한눈에 보이도록 변경
- ▷ SNS 활용을 통한 사용자와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 직관적 설계를 통해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매뉴얼 없이도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설계
- ▷ 한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만 제공하고, 그래픽·도표·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한 눈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픽 위주로 설계

- 각 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의 국가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한 통합 국가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규모 예산 소요 및 각 부처 협력 확보가 관건

< 국가정책지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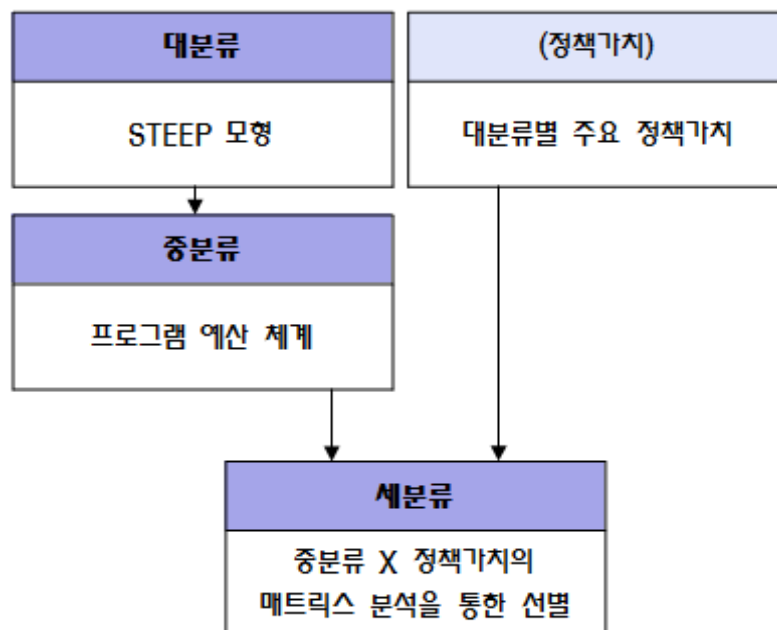
- ▷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해당 부처의 담당자가 한번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통계청의 시스템이 갱신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 표준화 필요
- ▷ 민간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정부내 정책결정지원과 대국민 정보공개를 위한 이원적 서비스 제공(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방식과 동일)

6. 분류체계 구축

- ◇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모형에 기반한 주제별 분류 방식을 국가정책 지표 분류체계에 도입하여 정책적 함의 강조
- ◇ 정책환경 및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른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분류체계의 점검 및 개선 도모

- 부문별 분류에 따른 지표체계 이해 용이성과 주제별 분류에 따른 정책적 가치 및 방향성 제시를 고려하여 두 분류를 혼합
 - 부문별 분류는 대·중분류 수준에서 적용, 대분류는 정책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STEEP*모형, 중분류는 현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적용
 - * Society, Technology, Ecology, Economy, Politics
 - 주제별 분류는 세분류 수준에서 반영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가치들을 대분류 수준에서 추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세분류 구성
 - * 국가발전의 정책가치로 공공성 강화, 창조적 성장, 사회적 안정, 미래 사회 대응의 네 가지 방향성을 설정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설계 모형>



<국가정책지표 분류 체계>

	대 분류	중 분류	세 분류
부문별 분류	사회 (중분류 4, 세분류 121)	교육	32
		문화 및 관광	27
		사회복지	39
		보건	23
	과학기술 (중분류 2, 세분류 42)	통신	19
		과학기술	23
	환경자원 (중분류 3, 세분류 52)	환경	24
		국토 및 지역개발	14
		에너지	14
	경제 (중분류 3, 세분류 66)	농림수산식품	16
		교통 및 물류	13
		산업 및 중소기업	37
	외교안보행정 (중분류 4, 세분류 73)	통일외교	14
		국방	12
		공공행정	27
		공공질서안전	20
	합계	16	354
주제별 분류	공공성 강화 (세분류 39)	공공성	39
	창조적 성장 (세분류 127)	성장/발전	37
		사회적 기반	39
		효율성	51
	사회적 안정 (세분류 107)	공정성	43
		사회통합	13
		사회적 보호	51
미래사회 대응 (세분류 81)	지속가능성	59	
	국제협력	22	
	합계	16	354

- 각 정책역역별 정책전문가 조사를 통한 주요 핵심 정책가치와 핵심 정책 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
 - 사회·과학기술·환경자원·경제·외교안보행정 관련 정책전문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영역별 주요 정책가치 확인
 - 향후 현안핵심통계 개발을 위한 착안기준으로 고려 가능

- 현행 e-나라지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국가정책지표 新분류체계를 적용하여 현행 국가정책지표 수준과 개발 필요성 진단
 - e-나라지표에 포함된 709개의 정책지표들을 新분류체계에 따라 매칭함으로써 지표분포현황 및 개발 필요영역 판단
 - 향후 긴급통계 개발을 위한 착안기준으로 고려 가능

- 현안핵심통계 및 긴급통계 개발을 위한 정책지표 진단
 - 현안핵심통계 개발 대상 영역
 - 사회정책 : 공공성(공교육내실화 등), 공정성(의료정보공개 등), 지속가능성(지속가능관광 등), 인간적 삶(생명윤리 등)
 - 과학기술정책 : 공공성(과학기술인프라 등), 산업기반(원천기술개발 등), 미래사회(스마트사회 등)
 - 환경자원정책 : 자원관리(폐기물관리 등), 지속가능성(전력수급관리 등), 환경보존(대기환경개선 등)
 - 경제정책 : 지속가능성(농업생산기반 등), 효율성(생산성향상 등), 형평성(정책금융지원 등)
 - 외교안보행정 : 지속가능성(한반도평화 등), 효율성(행정서비스만족도 등)
 - 긴급통계 개발 대상 영역
 - 사회정책 : 학교폭력, 관광안전, 의료정보공개, 문화다양성 등
 - 과학기술정책 : 통신서비스만족, 과학기술위험, 국제기술협력 등
 - 환경자원정책 : 친환경건축, 바이오에너지, 에너지목표관리 등
 - 경제정책 : 농식품수급관리, 지식기반산업, 개인파산/회생 등
 - 외교안보행정 : 국제분쟁대응, 병무행정공정성, 민관인력교류 등

7. 국가정책지표 개발

◇ 정책분야별 필요 통계지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지표가 국가정책지표로 적합한지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통계지표를 개발·개선

- 국가정책지표 新분류체계에 따라 정책분야별 필요 통계지표 진단을 실시하여 통계지표를 발굴
- 발굴된 통계지표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지표로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통계지표 개발·개선 추진

<국가정책지표 선정기준>

선정기준	내 용
국정현안 관련성	정책지표의 내용이 국정현안이나 시의적인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지
부서 기능의 연계성	각 부서의 핵심적·총괄적인 기능과의 연계성을 의미하고 있는지(부서별 지표 선정과정에서 해당부서의 핵심기능과 필수적으로 연계된 항목을 선정했는지)
국민 관심도	정책지표의 내용이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크고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 대한 적합성
정책개입 가능성	해당 소관부서의 정책/사업 수행을 통해 통계지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정책환경변화 대응성	정책지표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환경의 변화가 수시로 정책지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지
결과중심성 (결과지향성)	정책지표가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고, 정책의 성과 수준 파악이 용이하며, 과제의 난이도를 반영하고 있는지
정책의 대표성	정책 성과목표의 핵심내용이 포함되고 있는지
측정가능성 (객관성)	목표 달성 여부를 쉽게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객관화하기 위해 가급적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달성가능성	노력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해당조직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지

8.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로드맵

◇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은 단기 '국가정책지표체계 기반 구축', 중기 '국가정책지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장기 '국가정책지표체계 활성화'의 3단계로 나누어 접근

	단기 (기반구축)	중기 (체계구축)	장기 (체계활성화)
추진목표	국가정책지표체계 필요성 공유를 통한 기반자원 확보	이해관계집단의 적극적 협력과 국가정책지표 서비스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커버리지 확대 및 정책과정에서의 제도적 활용 강화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책지표 추진위원회 발족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통계위원회 산하 국가정책지표위원회 구성 및 지원기구 마련 관계 정부 부처와의 공식적 공조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정책지표위원회의 위상 강화 국가정책지표체계 운영을 위한 법제화
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e-나라지표 시스템 진단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나라지표의 전면적 개선을 통한 정책지표 웹페이지로의 전환 SNS, GIS, OLAP 서비스의 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간 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한 자동적 지표관리 및 지표활용 방식 적용 사용자 평가를 통한 신규 서비스 제공
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기본방향 논의 분류체계 초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확정 e-나라지표와의 분류체계 통합 및 조정 지표 분류체계 점검 기준 및 주기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적합성 진단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지표 분류체계 개발 및 보완
정책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분야별 필요 통계지표 진단 정책지표 수요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분류별 핵심지표, 보조지표 등 발굴 개별 지표의 측정과 분석방법, 정책적 함의에 대한 상세설명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정책지표 진단을 통한 관리의 제도화 정책지표 작성 및 관리, 활용을 위한 연구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책지표체계 필요성에 대한 논리 및 구체적 사례개발을 통한 공감 확보 전문가집단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지원그룹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선제적 서비스 개시 및 대국민·대정부 홍보를 통한 관심 증대 지표개발 및 관리를 위한 부처간 실무협의회의 구성을 통한 긴밀한 공조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지표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확보 제도화 및 정보화 수준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표체계의 구축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성과주의 행정의 강조와 함께 정부 정책의 수립 및 관리,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지표의 중요성 확대
 - 성과주의 행정개혁에서는 정부 정책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평가결과에 기반한 피드백이 강조(이광희, 2008)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통해 성과주의 행정의 근간을 구축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7조의 정부업무평가의 원칙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을 규정
 - 이와 함께 2007년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신규 정책 및 제도 마련 시 정책과정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및 개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정책 및 제도 도입 시 정책과정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통계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 정부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규범으로서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 역시 실증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 정부 정책과정에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정책 성공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투명성 강화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강조(박희봉, 2011)
 - 급변하는 정책환경과 부족한 정책자원의 한계로 인해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중요한 정책 성공요인으로 작용
 -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통치자를 위한 통계정보가 아닌 정책의 수요자이자 대상자인 국민을 위한 통계지표의 발굴 및 공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표통계 및 생활지표 등과 같이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 개발과 확산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 급증

- 현행 국정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e-나라지표 시스템의 지표체계가 현재의 정책 수요에 충실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과 함께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 체계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
 - 2006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e-나라지표 시스템은 현재 709개에 달하는 통계지표 목록을 바탕으로 국정 전 분야에 걸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정운영상황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 그러나 현행 국가정책지표 체계가 실질적인 국정운영 점검지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과 같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충분히 대표하는 정책지표가 포함되지 못함
 - 개별 통계지표들이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국가정책지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지적(이재형,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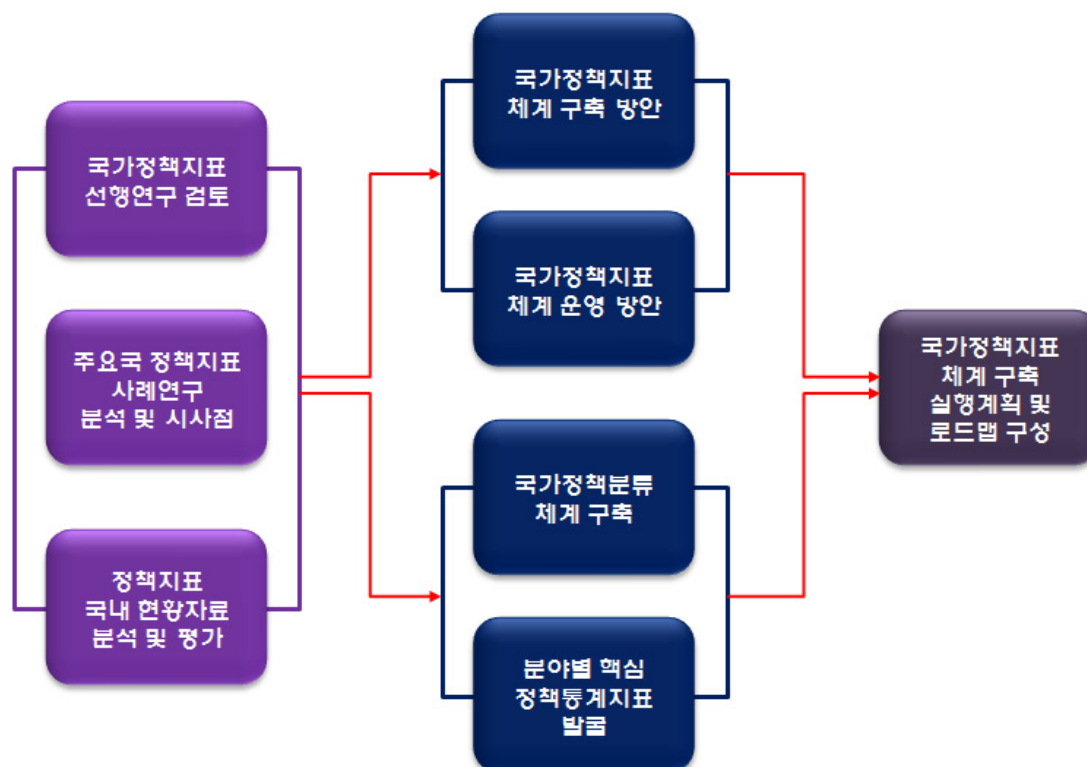
-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과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에서도 급변하는 사회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양한 정책지표의 개발을 강조
 - 미국의 SUSA(the State of the USA)나 호주의 MAP(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와 같이 단편적인 사항에 대한 통계수치의 제공이라는 차원을 넘어 거시적인 정책비전의 달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 차원의 국가정책지표의 개발이 강조
 - OECD, UN Statistics Division, EURO STAT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글로벌 통계지표 개발의 쟁점이 사회복지, 사회안전, 환경, 삶의 질 등과 같은 사회지표 중심으로 전환 (OECD, 1998; OECD, 2005)
 - 단순 통계지표보다는 사회복지 및 삶의 질과 같은 정책적 소망성이 반영된 정책 지표 개발에 대한 강조점이 확대

-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현재 국정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정책수요를 확인하여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며, 국가정책지표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축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
 - 국가정책지표 체계는 국가통계관리를 위한 부분을 넘어 국정운영방향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시적 정책비전과 연계하여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 정부적 차원의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의 마련이 요구
 - 국가정책지표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정책지표를 포괄할 수 있는 국가정책에 대한 분류체계를 재설계
 - 이를 기초로 하여 국정운영상황의 점검에 필요한 분야와 지표를 선정하여 국가 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음

[그림 1-1] 본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의 부분과 구체적인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 작성의 부분, 그리고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의 작성 부분으로 구성

-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는 국가정책지표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주요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에 대한 사례연구, 그리고 국가정책지표체계에 대한 국내 현황 분석의 부분으로 구성

① 국가정책지표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 등의 검토를 통해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의 필요성의 논리 제공
-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기준 제시

- 국가정책지표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정책지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링 수행

② 주요국 정책지표 사례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미국(The State of the USA), 호주(Measure of Australia's Progress), 스위스(MONET Indicator System), 영국(United Kingdom Gover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등 선진 해외사례 연구 및 시사점 제시
-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지표 외에도 OECD나 UN, Euro Stat에서 최근 개발하여 작성되고 있는 정책지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및 국가정책지표 개발의 시사점 확인
- 미국 볼티모어 시의 CitiStat이나 워싱턴 주의 GMAP과 같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지표 운영체계의 사례조사를 통한 Dashboard로서의 국가정책지표 체계 활용 시사점 도출

③ 정책지표 국내 현황자료 분석 및 평가

- 기존의 국정모니터링시스템으로서 e-나라지표의 운영 현황 및 각 정부부처 및 기관별 정책지표 운영체계에 대한 현황자료 분석
- 현행 국가정책지표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국가정책지표 구축 방안의 원칙을 제시
- 국내 정책지표 발굴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향후 국가정책지표 체계의 재설계 과정에서 포함될 개별 정책지표의 추가 발굴 필요성 및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 구체적인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작성은 조직적 차원에서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및 운영의 부분과 국가정책분류를 통한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작성과 개별 국가정책지표의 개발의 부분으로 구성

① 국가정책지표 체계 구축방안 연구

- 새로운 국가정책지표 체계 구축과 관련해 정부기관 간의 협업시스템의 구축 필요성과 민관협의체를 통한 공동관리의 방안들이 제안
- 향후 국가정책지표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설계 방안의 마련을 수행하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범위, 협력체계의 구성방식, 민간부문의 포함 범위 및 방안 등을 제시

- 통계정보시스템의 차원에서 기존의 e-나라지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및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설계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② 국가정책지표 체계 운영방안 연구
- 국가정책지표 체계 구축방안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체계 운영방안을 조직적 측면과 정보시스템 측면에서 제안
 - 상대적으로 앞선 구축방안 연구에 비해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예상 쟁점들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정책지표 체계 운영과 관련한 인적자원 관리나 시스템 상의 데이터 관리 등이 포함
- ③ 국가정책분류 체계 구축
- 국정의 전반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국가정책분류 체계를 구축
 - 기존의 국정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정부기능분류모델(BRM), 국정운영목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정책분류의 방향성 제시
 -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영역별 우선순위의 검토를 통한 국가정책 분류 체계의 설정
- ④ 분야별 핵심 정책통계지표 발굴
- 앞서 마련된 국가정책분류 체계에 기초하여 각 분야별 핵심 정책통계지표를 발굴하며,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개발이 필요한 통계지표의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이 필요한 통계지표의 경우 개발 방안 제시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조사를 통해 분야별 핵심 정책통계지표로서 적합성 수준을 파악하여 대표 정책통계지표를 발굴
 - 개별 국가정책지표의 진단, 발굴, 관리 및 활용방안 제시
-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로드맵을 작성하여 단기 및 중장기 구축 계획을 검토
- 국가정책지표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핵심과제의 제시 및 소요 자원 및 예상 장애요인 등에 대한 파악
 -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정책지표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및 로드맵 내용 협의와 구성안 제시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국가정책지표체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리 제공과 함께 구축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논의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범정부적인 공감 및 지원 확보
 - 2011년 국정감사 및 2012년 예산안 심사과정 등에서 사회변화를 반영한 중요 정책통계를 체계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지표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
 - 그러나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동일한 문제의 지적과 단기적인 대응 위주의 활동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함
 - 본 연구를 통해 국가정책지표체계의 명확한 개념 및 기능, 구성요소 등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청사진을 제시
 -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정책협의 및 공감대 형성, 지원의 확보 등을 달성

-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될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로드맵은 향후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며, 구축방안에 대한 내용은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과정에서의 준거기준으로 활용
 -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며, 이를 통해 향후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
 -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국가정책지표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준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의 실질적인 기초를 제공

제2장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개념 및 현황 분석



제2장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개념 및 현황 분석

제1절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정책지표와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개념 이해

1) 정책지표의 개념 정의

- 특정 체제의 현재 상황 및 환경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지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별 체제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및 환경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영역별 지표 분류의 개념을 활용
 - 지표(indicator)는 한 체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황(condition) 변화에 대한 계량적 측정 방법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흔히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 체제의 경제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지표의 강조 경향이 1960년대 이후 사회지표(social indicator) 운동을 통해 경제적 측면 외의 사회복지 및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이나 문화, 정보통신 등 특정 영역별 지표 분류가 세분화되는 추세(남궁근, 2001)
- 영역별 지표분류의 기준과 달리 정책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정책적 소망성을 강조하는 목적성에 기초하여 정책지표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음
 - 정책지표(policy indicator)는 영역별 지표체계와 달리 지표 구성에 있어서 가치 판단과 정책관련성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제시되며, 윤리적 가치에 비추어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대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지표로 정의될 수 있음(남궁근, 2001; Duncan, 1985)
 - 정책지표는 공공정책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지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 지표가 정책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
 - 내용적으로 볼 때 기존의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별 지표 가운데 정책적 의사결정에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들을 정책지표로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통계지표에 비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지표의 정의가 상당히 유동적일 수 밖에 없으며,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지표 관리가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정책지표의 속성에 기인

2)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개념 및 주요 기능

- 국가적 차원의 정책지표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적 노력의 산물로서 국가정책지표체계를 정의 (GAO, 2011)
 - 개별 지표와 달리 지표체계(indicator system)는 특정 목적이나 이용자를 전제로 하여 지표들을 조직화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적 노력으로 정의
 - 따라서 국가정책지표체계(National Policy Indicator System)는 국가발전이나 투명성 확보, 시민참여 등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일반국민, 최고정책결정자, 일선 정책담당자 등 관련 이용자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지표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적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개념 이해를 위해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주요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정책분류에 따른 기존 통계지표 등 관련 자료를 재분류하며, 일반적인 통계지표를 정책목적에 비추어 정책지표로서 정의하고 이를 별도의 관리체계를 통해 관리
 - 둘째, 국가적 차원의 정책지표 수요 분석 및 지표개발을 기획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지표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지표의 탐색 및 개발을 기획
 - 셋째, 정부부처 및 정책부문 간 정책지표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를 수행하며, 개별 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책지표의 중복여부 및 정합성을 검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넷째, 정책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주기적 진단과 개선을 추진하며, 일반적인 통계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관련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지표의 선택 및 해당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한 주기적 점검 활동 수행
 - 다섯째, 온라인 포털을 통한 정책지표 관련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수행하며, 정책지표의 수요자로서 국민의 관심과 필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로서 기능
 - 여섯째, 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정책분석 및 미래예측을 통해 정책담당자의 적절한 정책문제 인식 및 효과적인 정책대안 선정 과정에 중요한 근거자료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지원

2.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성요소

- 국가정책지표체계는 크게 국가정책지표를 조직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형식적 측면과 함께 실제 국가정책지표를 정의하고 분류하며, 측정하기 위한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 가능
 - 거버넌스 체계 : 개별 국가정책지표의 작성과 관리, 활용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및 책임 설정 방식
 - 정보화 시스템 : 정보기술을 활용한 국가정책지표의 전산화된 관리 및 대외적 공개, 확산의 방식
 - 지표분류체계 : 국가정책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위계적 구성방식과 구성항목
 - 개별 정책지표 : 지표분류체계의 목적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정도구의 집합

1) 거버넌스 체계

- 국가정책지표의 작성 및 관리, 활용에 대한 행위자와 역할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상호 유기적 연계성이 강조된 국가정책지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관건(이재형, 2004)
 - 개별 국가정책지표의 작성 및 관리, 활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 운영 차원의 청사진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이해
 - 기존의 일반적 통계지표를 대상으로 한 국가통계체계에 대한 논의와 연계하여 국가정책지표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정책지표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들 간의 상호 모순이 없도록 유기적 연계성이 강조된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노력이 요구
 - 기존의 국가통계체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기준으로서 집중형과 분산형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체제(National Statistical System)에 속한 모든 통계생산기관들을 조정하는 국가통계 중심기관(National Statistical Organization)으로서 통계청의 역할 정의 필요
- 융합행정체계로서 국가정책지표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융합행정 수행을 위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쟁점을 검토
 - 최근 행정업무의 발전방향으로서 융합행정(integrated administration) 강조(업무

협력 + 자원 공동활용)

- 융합행정은 복수의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민간주체들 사이의 협의와 역할분담·협업을 통해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정보 등의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낮추는 업무수행방식
- 국가정책지표의 경우, 기존의 국가통계지표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융합행정의 속성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정책지표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정에서 융합행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검토 필요

2) 정보화 시스템

- 국가정책지표의 실질적인 조직화 및 확산 활동을 정보화 기술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을 통해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의 구현(강동석·유시형, 2009)
 -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및 정보 공동활용의 원칙 : 각 공공기관들이 업무수행 목적상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한 차원 높은 대민 서비스를 위해 기관 내 혹은 기관간, 기관과 기업, 기관과 개인 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
 - 국가정책지표체계 역시 개별 국가정책지표를 작성하여 수집하고, 조직화하며, 이를 정책지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정보화 시스템의 활용이 중요하며, 국가정책지표의 활용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방안 마련이 요구
- 전통적인 정보시스템의 활용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채택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정책지표의 관리 및 활용이 필요
 - Web 2.0을 국가정책지표 정보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포털 중심의 web 1.0에서 진화된 차세대 웹으로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열린 인터넷
 -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미항공우주국(NASA)의 사례에서처럼 정부 서비스의 기획 및 개발, 정책 제안 등의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과의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정부 서비스의 만족도와 질을 제고
 - Big Data의 개념 등장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 가능

성, 결과 중심적인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지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

-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12년 3월, 6개 연방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big data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Data-Driven Government를 만들기로 결정

3) 지표분류체계

- 개별 국가정책지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지표분류체계의 구축 필요
 - 일반적으로 지표의 개념은 측정을 하고자 하는 개념과 측정도구, 그리고 측정결과로 나타난 통계치의 종합으로서 정의될 수 있음
 - 지표분류체계는 국가정책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체계화하여 상위의 추상적 개념을 하위의 구체적 개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가정책지표가 의도하고 있는 측정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측정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
 - 결과적으로 지표분류체계의 구축은 국가정책지표가 의도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최상위 측정 개념으로서 국가발전과 국가역량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목적을 전제로 적절한 대상 영역의 선정이 필요
 -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지표의 대상영역과 관련해, 국가발전, 국가역량, 정부역량, 행정부역량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으며, 각 차원에 따라 차별화된 지표의 측정 영역을 예상할 수 있음
 -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의 차원에서는 국가경쟁력 및 삶의 질 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 발전 방향성이 중요한 지표 측정 영역으로 고려
 - 국가역량(state capacity)의 차원에서는 시장 및 사회와 구별되는 의미로서의 국가, 정책 영역별로 조정·통제 메커니즘의 제도화 수준, 제도의 구비 여부와 함께 제도의 효율적 운영 여부가 중요한 지표 측정 영역으로 고려
 - 정부역량(government capacity)의 차원에서는 집권세력의 국정운영능력평가, 국가발전 및 국가역량 제고와의 연관성이 중요한 지표 측정 영역으로 고려
 - 행정부역량(administration capacity)의 차원에서는 부처가 수행한 개별 정책과제의 성과 수준 및 효율성 수준의 고려가 중요

[표 2-1] 지표분류체계의 차원별 측정영역

평가 유형	차원	측정영역	사례
국정 평가	국가발전 (National Progress)	국가경쟁력, 삶의 질	국가경쟁력지표, Canada's Performance,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국가역량 (State Capacity)	국가의 자율성 (조정, 통제의 제도화 및 제도의 효율성)	-
집권 정부 평가	정부역량 (Government Capacity)	집권 세력의 공약, 주요 국정추진 과제	OMB의 대통령 국정과제 평가, 참여정부 평가 등
정부 업무 평가	행정부 역량 (Administration Capacity)	부처가 수행한 개별 정책과제	통합정부업무평가 등

4) 개별 국가정책지표

- 국가정책지표의 지표분류체계에 따라 해당 개념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와 그 측정치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들을 포함하여 개별 정책지표로 정의
 -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지표의 개념은 측정을 하고자 하는 개념과 측정 도구, 그리고 측정결과로 나타난 통계치의 종합으로서 정의될 수 있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측정도구의 선택 결과가 바로 개별 국가정책지표로 이해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개별 국가정책지표를 통한 측정결과가 효과적으로 지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내용과 정보제공방식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개별 국가정책지표를 정의
 - 현행 e-나라지표의 경우, 5개 영역에 대한 대분류와 42개 부문에 대한 중분류, 167개에 대한 세분류를 통해 지표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분류체계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는 708개의 개별 지표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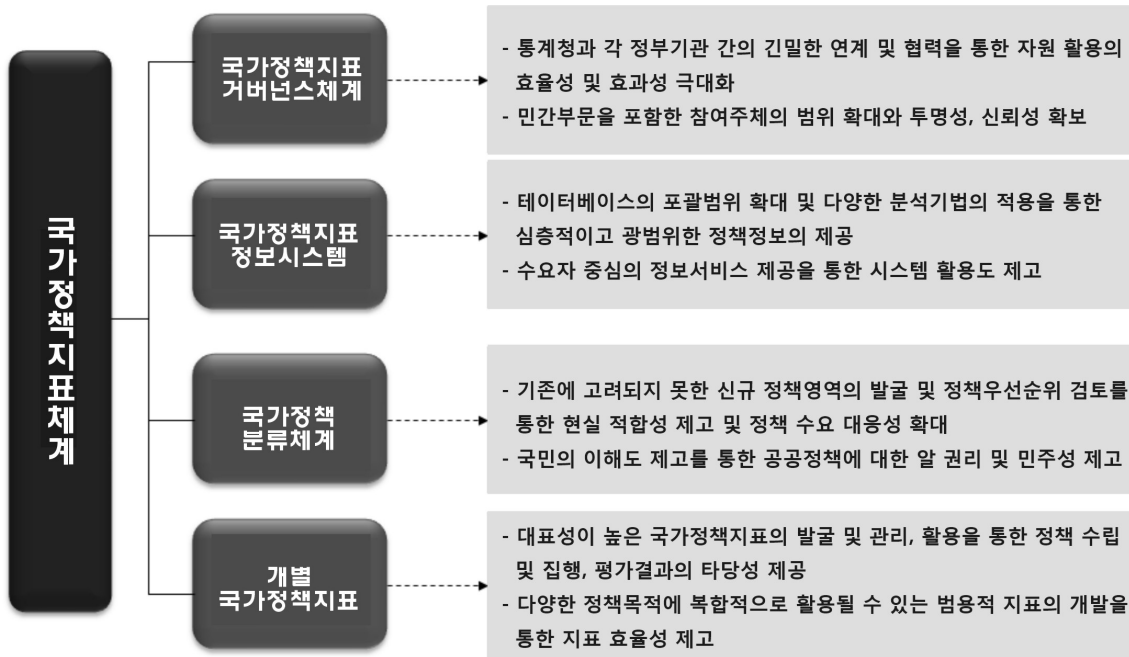
- 일반 통계지표와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정책지표의 통계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계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정책지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진단 및 선정, 개발, 관리 과정에서의 추가적 활동과 이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
 - 1985년 캐나다의 '통계품질 가이드라인' 발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통계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for Statistics)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통계품질진단의 여섯 가지 차원으로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을 제시 (Canada Statistics, 1998)
 - OECD 역시 2001년 T/F를 통해 OECD 품질관리체계의 구축을 착수하였으며, 8대 품질평가의 차원으로서 정확성, 관련성, 신뢰성, 시의성, 정시성, 접근가능성, 해석용이성, 일관성을 제시(OECD, 2001)
 - 일반적인 통계지표의 품질관리에 대해 국가정책지표가 갖고 있는 정책연계성의 고려를 반영하여 정책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관리 노력이 요구되며, 개별 지표의 진단 및 선정, 개발, 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지표 품질관리 노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박성현·박진우, 2004)

3.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 머니 볼(Money Ball)과 data-driven government의 효과성
 - 지난 제6차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화 “머니 볼”을 언급하면서 통계분석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부처가 시의적절한 통계의 개발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
 - 데이터 중심의 정부 운영(data-driven government)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미국 볼티모어 시의 CitiStat의 경우, 만성적 재정적자, 높은 범죄율, 주민과 단절된 행정 등 시정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결정적으로 기여(Perez and Rushing, 2007)
 - 실제로 CitiStat 도입 3년 만에 폭력 범죄 발생률이 40% 가까이 감소하였고, 재정적자 감소 규모는 총 3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국가통계포털과 국정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정책지표체계의 구축 효과

- 기존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e-나라지표(www.index.go.kr) 모두 국정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정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 위치를 점검하며, 향후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을 공유
 - 향후 국가정책지표는 국가승인통계 및 정부통계자료를 포함해 공공기관, 민간부문 등의 광범위한 정책지표들을 포괄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지표로서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
- 결과적으로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를 국가정책관리의 효과성 제고 측면과 국가정책지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제고 측면으로 예상
- ① 국가정책관리의 효과성 제고
 - 국가정책활동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통한 성과 제고
 - 국가발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미래 예측을 통한 정책 대응
 - 국가정책지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
 - ②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제고
 - 일반 국민 : 국가정책 추진 및 성과 정보에 대한 알 권리 충족,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여 확대
 - 개별 정책담당자 : 관련 정책지표 활용 수준 제고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 정책실패 완화 및 정책효과 극대화
 - 최고 정책결정자 : 종합적인 국가정책 방향 진단 및 점검을 통한 국정운영방향 수립의 타당성 제고
-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를 국가정책지표체계를 구성하는 네 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상

[그림 2-1]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제2절 국가정책지표체계 관련 국내 현황 분석

- 국가정책지표체계와 관련한 국내의 제도 및 지표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모색
-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 및 조정 능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정책지표의 조합 및 확산 활동이 부족한 편이며, 특히 e-나라지표를 중심으로 한 국정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과 활용이 정체되고 있는데 비해 개별 부처나 기관을 중심으로 파편화된 국가정책지표의 작성과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1. 현행 국가통계체제의 특징

- 국가통계체제의 유형 구분으로서 집중형 국가통계체제와 분산형 국가통계체제의 특징과 장단점(김기환 외, 2009)
 - 집중형 국가통계체제는 국가기본통계를 단일화된 통계전문기관에서 작성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부처 간 통계연락기구의 설치를 통해 국가통계관리를 수행
 - 집중형 체제의 장점으로는 통계의 균형적 개발과 유기적 체계 확보, 통계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통계전문 인력의 집중적인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관련 행정분야별로 전문지식의 활용이 미흡하며,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지적
 - 분산형 국가통계체제는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대신에 별도의 통계조정기관의 설치를 통한 업무 연계를 달성
 - 분산형 체제의 장점으로는 분야별 전문지식을 관련 통계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통계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통계 작성상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 체계적인 통계개발의 제약, 통계전문요원의 집중적 활용의 어려움, 통계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 발생 가능성이 분산형 체제에서의 단점으로 지적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절충형의 국가통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기관으로서 통계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정능력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파악

- 우리나라의 경우 분산형 성격이 강한 절충형의 국가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전체의 통계업무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통계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통폐합 등 국가통계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국가통계 중심기관인 통계청을 중심으로 국가통계생산기관의 관계 유지 및 국가통계생산의 조정·관리 활동이 수행
- 절충형의 국가통계체제 하에서 과거 각 부처의 통계업무는 통계수요 발굴 및 기획기능에 국한하여 기본통계 조직을 확충하고, 조사 및 처리는 통계청과 각 정부부처가 기능적으로 협조하는 업무연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
- 그러나 전문조사원을 통한 조사기능 중심의 집중형 방식은 국가통계자료의 통계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였을지 몰라도 내용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조사의 숙련도와 기획·분석·관리기능의 강화는 별개의 개념
- 현재 우리 통계청의 실질적인 통계조정기능이 미약한 편이며, 중복통계, 부실통계의 조사공표 제한 등 소극적 의미의 조정기능은 있으나 국가통계의 전체적 기획 및 조정기능이 크게 부족
- 2008년 도입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2009년 11월의 제1차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정책부처와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필요한 통계수요 조기 파악을 위해 통계청장의 관계부처 정책회의 참석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

2. e-나라지표의 구축 및 운영 현황

1) e-나라지표 시스템의 구축 배경 및 추진 경과

- 국정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e-나라지표의 구축 배경
 - 정부부처 및 정책담당자들의 정책수립·평가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여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지원하며, 정책관련 주요 통계지표를 한 곳에 종합하여 쉽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
 - 기존 시스템은 통계작성 기관별로 통계를 제공하는 등 정책담당자들이 소관업무와 관련된 통계검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국가통계는 KOSIS 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통계가 아닌 그 외의 정책관련 지표는 제외
 - 통계청 내부적으로는 국가통계로 관리되지 못하는 정책관련 지표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우려 제기
 - 기존 통계정보는 통계수치만 제공하여 정책담당자들이 각 부처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표 및 통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곤란

□ e-나라지표 시스템의 구축 경과

- 2005년 8월, 국무회의시 노무현 대통령의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한 국정점검 및 국정평가의 필요성 강조
- 2005년 9월, 통계지표를 모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정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시
- 2005년 10월, 정부관계자 협의를 통해 국정통계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결정
- 2005년 11월~12월, 통계지표 발굴, 자료작성 및 통계체계도 작성
- 2006년 1월~5월, 전산검색시스템 구축 : DB구축 및 자료 입력, 검색시스템 구축
- 2006년 6월, 행정부내에서 서비스를 시작
- 2006년 9월, 일반국민들에 대해 서비스 확대
- 2007년 3월,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187호) 제정

2) e-나라지표의 거버넌스 체계

□ 2007년 3월,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훈령으로 제정

□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의 주관기관은 통계청이 되며 주관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총괄 운영 및 보완·개선
- 나라지표의 추가·삭제 및 나라지표 분류체계의 관리
- 나라지표의 관리실태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대한 교육 및 협의

□ 정부기관의 장은 소관 나라지표 전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담당자 1인과 나라지표별 담당자를 지정

- 해당 기관의 나라지표담당자에 대한 교육
- 해당 기관의 나라지표담당자의 변동사항 정리
- 소관나라지표의 관리실태 점검 등
- 소관나라지표의 작성 및 관리 : 담당자는 통계의 작성 및 공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입력
- 소관나라지표에 관한 이용자들의 질문·의견 및 토론 등 관리
- 주관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나라지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정부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점검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관계 정부기관장에게 요구, 1월 이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

3) e-나라지표의 정보화 시스템

- e-나라지표의 초기화면에서, 별도 절차 없이 인터넷 사이트(www.index.go.kr)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각 부처 홈페이지에 e-나라지표 배너 설치
 - e-나라지표의 소개와 함께 지표분류체계, 주요지표서비스, 고객센터, 마이페이지 서비스를 제공
 - ① 분야별 및 부처별 지표 중심의 브라우징 서비스와 직접 검색 서비스 제공
 - ②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 ③ 주요 정책지표에 대한 제시 목적에서 '지표로 본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
 - ④ 새로 바뀐 자료와 많이 본 자료에 대한 검색순위 제공을 통한 관심지표의 이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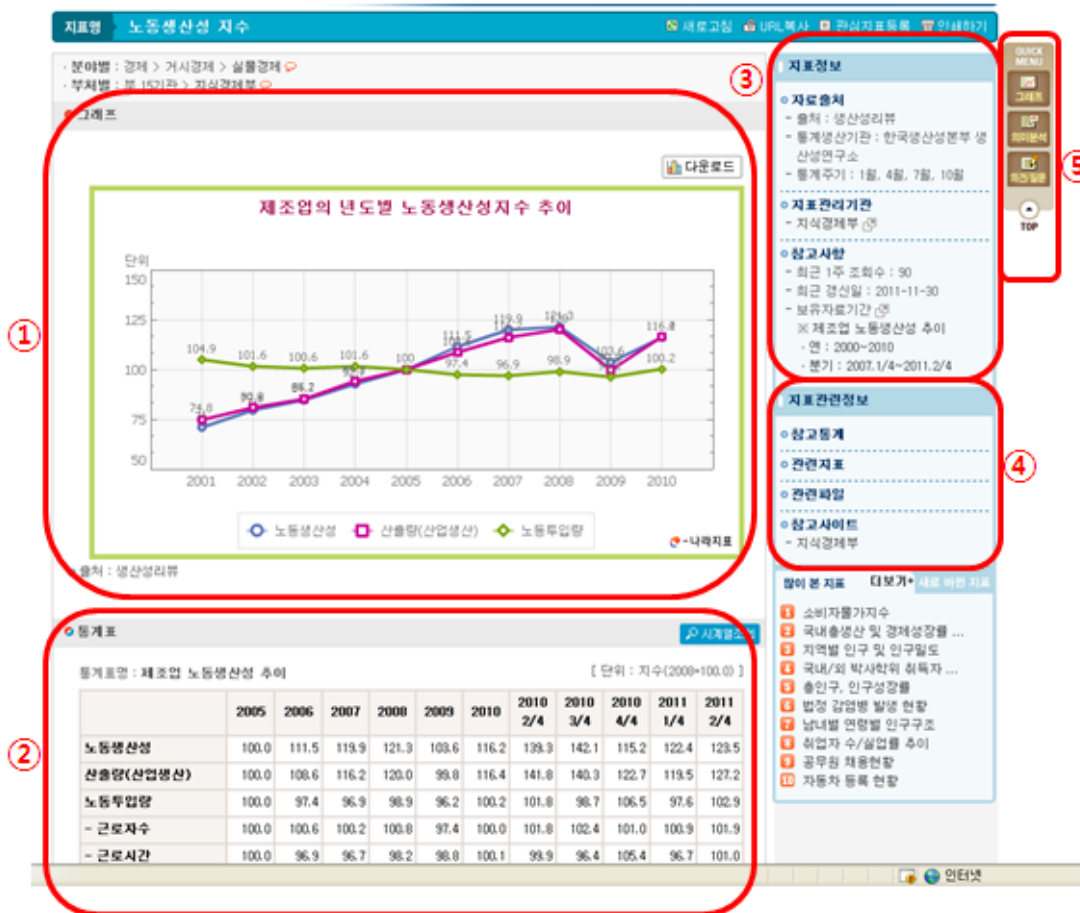
[그림 2-2] e-나라지표 웹페이지 초기화면



- e-나라지표에서 개별지표의 내용을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해, 통계표보다 시각적인 그래프를 통한 지표 변화 경향의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각 지표별로 그래프, 통계표, 의미분석, 이용상의 유의점, 관련 용어,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표정보 및 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

- ① 해당 지표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를 제공하며, 파일의 다운로드 허용
- ② 해당 지표에 대한 통계표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시계열 자료의 확인 및 시계열 범위 변경을 통한 그래프 작성 기능 포함, 엑셀 파일 형태의 다운로드
- ③ 지표관리 차원에서 자료의 출처 및 통계생산기관, 통계주기, 최근 갱신일 등에 대한 자료 확인
- ④ 해당 지표 관련 정책 동향 및 관련 통계 및 추가 자료를 제공
- ⑤ 주요 항목별 Quick Menu 제공

[그림 2-3] e-나라지표 웹사이트의 개별 지표 제공 방식



□ e-나라지표에서는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해 단순 검색 기능 외에 나만의 관리지표 기능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근 검색어 확인, 제시의견 목록 및 답변 현황 파악, 관심지표 등록을 통한 용이한 검색 기능 제공

- ① 나의 관심지표 : 관심지표로 등록한 지표항목을 대상으로 개인 목적에 따른 분류그룹 생성과 관리,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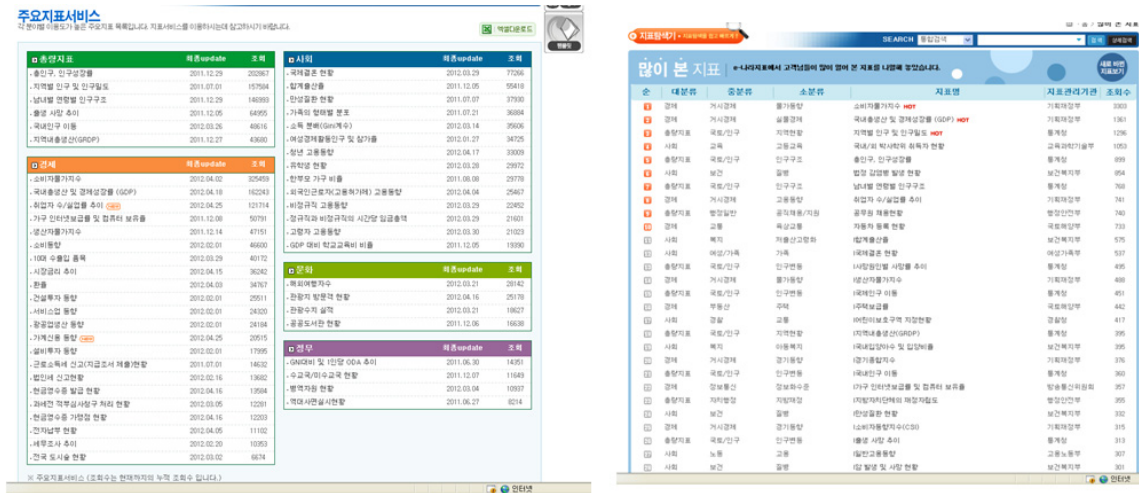
- ② 참여내역 : 기존에 등록된 의견 및 질문사항에 대한 내역 제공
- ③ 최근 검색어목록 : 브라우저가 아닌 직접입력 방식을 사용한 경우 해당 목록 내역만 제시
- 단순히 웹사이트 이용활동에 대한 내역만을 리스트화하는 수준에서의 서비스 제공 한계
- 개인의 취향 및 특성에 따른 관심지표의 추천이나 업데이트된 지표의 제공 등은 미흡

[그림 2-4] e-나라지표 웹사이트의 마이페이지 메뉴



- e-나라지표 웹페이지에서는 주요지표서비스를 통해, 각 분야별로 이용도가 높은 주요 지표목록을 제공하여 주요 관심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 가능
- 주요지표서비스가 누적 이용건수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많이 본 지표 서비스는 주간 조회건수를 통해 최근 관심 동향을 확인

[그림 2-5] e-나라지표 웹사이트의 주요지표서비스



4) e-나라지표의 정책분류체계

- 정책분류와 관련한 e-나라지표의 기본적인 분류기준은 분야별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량지표와 경제, 사회, 문화, 정부의 5개 대분류를 기초로 그에 따른 각각의 중분류와 소분류를 통해 정책을 분류
 - 2012년 4월 기준, 41개의 중분류 가운데 총량지표에 해당하는 영역이 4개, 경제지표에 해당하는 영역이 18개, 사회지표에 해당하는 영역이 11개, 문화지표에 해당하는 것이 4개, 정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5개로 확인되며, 지표 규모에 있어서도 경제지표의 비중이 전체 지표 중 44.9%인 318개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음
 - 중분류로서 재정부문에 대한 지표수가 54개로 가장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법무 46개, 교육 41개, 노동 33개, 금융 32개, 산업동향 30개 등으로 경제지표에 대한 집중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25개, 청소년 8개, 관광 7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지표분류에 대한 지표 비중 낮음
 - 최초 서비스 개시 이후 총량지표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중분류가 추가되었으며, 소분류는 169개에서 167개로 변동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음
- 분야별 지표 분류체계 외에 부처별 지표 분류체계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 용자는 정책분야 및 정책담당부처의 선택을 통한 브라우징을 통해 원하는 통계지표를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정책분야별 분류체계가 부처별 분류체계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지표분류체계의 차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e-나라지표 서비스 초기에 성격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정책수립기초, 정책상황

점검, 정책성과측정이라고 하는 정책과정별 분류체계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현재는 성격별 분류체계를 폐지

- 개별 지표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정에서 중복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격별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지표 발굴 과정에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책과정에 따른 성격별 분류의 필요성도 지표관리 차원에서 고려 가능

[표 2-2] e-나라지표의 정책지표 분류체계-분야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수
5개 부문	42개 부문	167개 부문	708개
총량지표	국토/인구	국토현황/이용, 수도권현황, 지역현황, 인구구조, 인구변동	11
	행정일반	정부조직, 공직채용/지원, 전자정부, 고충민원, 청렴/부패, 정보공개	18
	자치행정	자치행정일반, 지방재정	12
	공동체	사회참여	1
경제	거시경제	실물경제, 경기동향, 물가동향, 고용동향, 대외거래, 외환, 대외신인도	23
	금융	금융일반, 대출시장, 자본시장, 보험시장, 금융건전성	32
	재정	재정일반, 분야별재정규모, 기금/공적연금, 민간투자, 국세, 관세	54
	산업동향	무역투자일반, 산업일반동향, 개별산업동향, 에너지/자원	30
	공정거래	경쟁정책, 대기업정책, 중소기업보호정책, 소비자보호정책	7
	중소기업	중소기업일반, 혁신형 중소기업현황, 창업벤처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소상공인/재래시장	12
	건설	도시, 도로, 수자원, 건설경제/기술	24
	부동산	건축, 주택, 토지	20
	교통	교통/물류, 철도, 항공, 육상교통	15
	해양	해운일반, 해운물류, 항만시설, 해양환경안전	14
	농업	농업일반, 농산물생산소비, 농업생산기반, 농산물위생/안전성, 농촌생활/지원	18
	임업	산림일반, 산림조성, 산림관리·이용, 산림재해	12
	어업	수산물생산/소비, 어업인지원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일반,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성과	14

	정보통신	정보화수준, IT산업, 정보보호, 우정사업	16
	조달	조달사업, 원자재비축, 시설사업	8
	특허	출원/등록, 심사, 심판	6
	기상	예보/관측, 지구대기, 기후	9
사회	복지	복지일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연금/건강보험, 저출산고령화	28
	보건	보건일반, 식품, 질병, 건강증진, 보건산업	18
	환경	환경일반,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폐기물, 상하수도, 토지오염	25
	노동	사업체, 임금, 고용, 노동보험, 노사관계, 산업재해	33
	교육	교육/인적자원일반, 교육경쟁력,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수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41
	보훈	보훈일반, 보훈복지	16
	여성/가족	여성일반, 가족, 보육, 양성평등, 여성권익	22
	청소년	청소년일반, 청소년보호, 청소년활동	8
	경찰	경찰일반/수사, 생활안전/경비, 교통, 외사	13
	해양경찰	해양경비, 해상안전, 해상범죄, 해양환경	6
재난안전	재난, 소방	9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일반, 문화예술인프라, 문화산업, 문화미디어	16
	관광	관광일반, 관광산업	7
	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7
	문화재	문화재일반, 문화재보존	8
정부	외교	외교일반, 통상협력, 재외국민/영사, 국제협력, 국제교류	16
	통일(남북)	통일일반, 남북교류	7
	국방	국방일반, 방산/군수, 군인복지, 국제협력	17
	병무	병무일반, 입영	5
	법무	송무/공판, 법조인력, 보호/관찰/교정, 범죄, 출입국	46

5) e-나라지표의 개별 정책지표 구성

- 2012년 4월 기준, e-나라지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별 정책지표의 개수는 708개이며, 서비스가 개시된 직후인 2007년 9월에 총 823개의 정책지표 개수와 비교하면 약 14.0%의 정책지표가 축소된 것을 확인
- 고용부문에 대한 소분류의 사례에서 총 12개의 정책지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통계자료 외에 추가적인 행정자료의 활용 및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확인되고 있음
 - 개별지표의 대표성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으나, 고용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이 포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소분류와 개별 지표 수준 간의 간격이 다소 있음

[표 2-3] e-나라지표의 개별 지표 구성 - 고용부문 소분류 사례

중분류	소분류	개별 지표	자료출처	통계주기	최근 갱신일
노동	고용 (12개)	고령자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	2012.03.30
		고용지원센터 구인, 구직 및 취업현황	고용안정정보망과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 DB	매월/매년	2012.01.31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현황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매년	2011.06.30
		비정규직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반기	2012.03.29
		여성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	2012.03.16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매월	2012.04.04
		일반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	2012.04.13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정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민간)	매년	2011.12.0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매년	2012.03.29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	노동부 고용보험 DB	매년	2011.05.16
		청년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	2012.04.17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노동부 고용보험 DB	매년	2012.02.03

3.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구축 및 운영 현황

1) 구축 배경 및 추진 경과

- 국가통계포털 구축 배경
- 2012년 4월 기준, 국가통계는 통계청을 포함해 378개 국가통계 작성승인기관에

서 852여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조사·집계한 통계자료는 기관 단위로 각각 관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여 서비스

- 그러나 통계정보는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어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고, 통계 서비스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하는 기관은 일부이고 나머지 기관은 엑셀, 워드문서 등에 의한 단순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아예 서비스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정보공유를 통한 윈스톱 통계정보서비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작성 기관의 모든 승인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구축하고 통계수요자에게 통합된 국가통계자료에 대한 포털서비스가 절실히 요구

□ 국가통계포털 추진 경과

- 2005년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방안」에서는 현 국가통계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한 대응이 저조하고, 통계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가 미흡하며, 통계자료의 소극적 공유 및 활용 지적
- 2005년, 국가통계통합DB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추진
- 2006년, 국가통계통합DB 구축사업 제1차년도 시작
- 2007년, 2006년도 구축통계정보(38개 기관, 217종)를 KOSIS에서 서비스 실시

2) 국가통계포털 거버넌스 및 지표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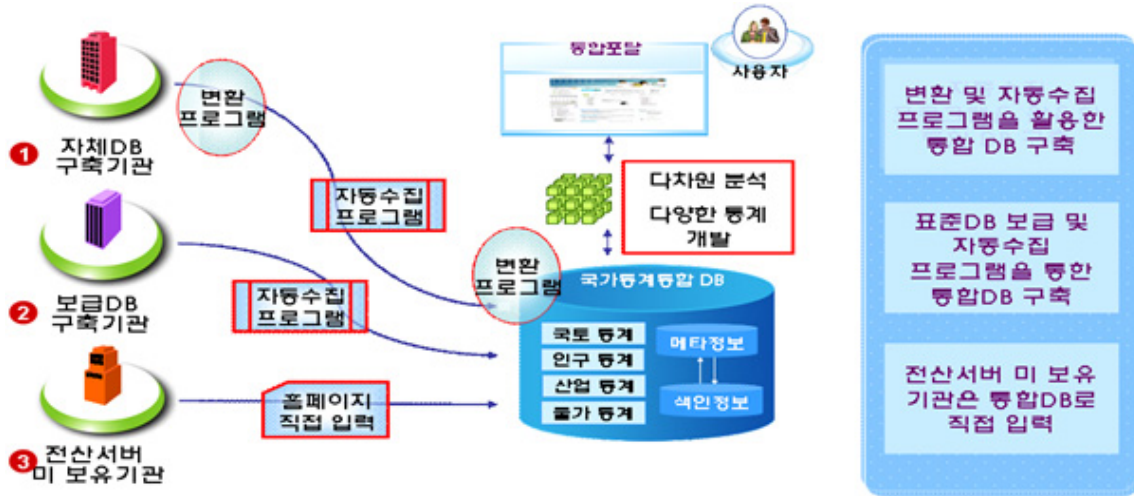
□ 국가통계포털 거버넌스

- 통계DB구축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통계청의 참여 및 행정정보DB사업 총괄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참여, 통계작성기관의 연계
- 통계법에“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DB 구축을 의무화하고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구

□ 국가통계포털 지표분류체계

- 국가승인통계를 주제별, 기관별, 명칭별세가지기준에따라분류
- 인구·가구, 고용·노동·임금, 물가·가계, 보건·사회·복지, 환경, 농림어업, 광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 경기·기업경영(사업체), 국민계정·지역계정·국가자산(국부), 재정·금융·보험, 무역·외환·국제수지, 교육·문화·과학, 행정의 16개 주제별 분류를 통해 통계지표를 제공

[그림 2-6] 국가통계포털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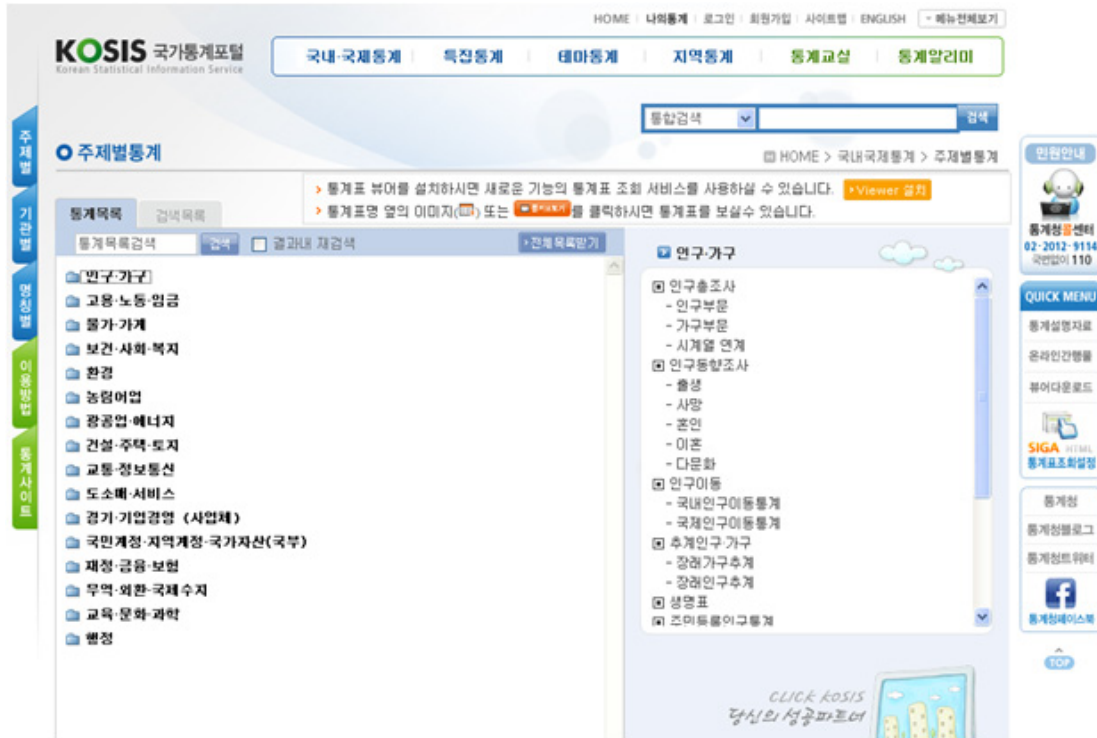


3) 국가통계포털 정보화 시스템

- 2006년 최초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에 비해 단순한 통계표만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통계자료의 분석 및 지역별·글로벌비교, 특정 이슈와 연관된 통계정보의 제공 등 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제공방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최상위 메뉴로 국내·국제통계, 특집통계, 테마통계, 지역통계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 국내·국제통계는 기존의 주제별 혹은 기관별 통계표 제공 방식으로 구성
 - 각 분류항목에 따라 트리구조를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통계지표의 체계적 분류를 확인 가능

- 특집통계 서비스를 통해 국가승인통계 가운데 일부지표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주요지표 및 글로벌 비교, 경기순환분석 등의 방식을 통해 심층적 정보 제공
 - ① 한국의 주요지표 : 각 주제별 주요 통계지표값을 요약적으로 제시
 - ② G20통계상황관 :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G20 국가들의 비교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
 - ③ 경기순환시계 : 각 경기지표의 통계값을 분석하여 경기순환 단계별로 제시

[그림 2-7]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의 지표분류체계



[그림 2-8]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의 특집통계 서비스



□ 경기순환시계 서비스를 통해 광공업생산지수, 수출액, 취업자 수 등 10가지 주요 경제지표들을 대상으로 해당 경제지표를 통한 현 시점의 경기수준을 분석 가능

[그림 2-9]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의 경기순환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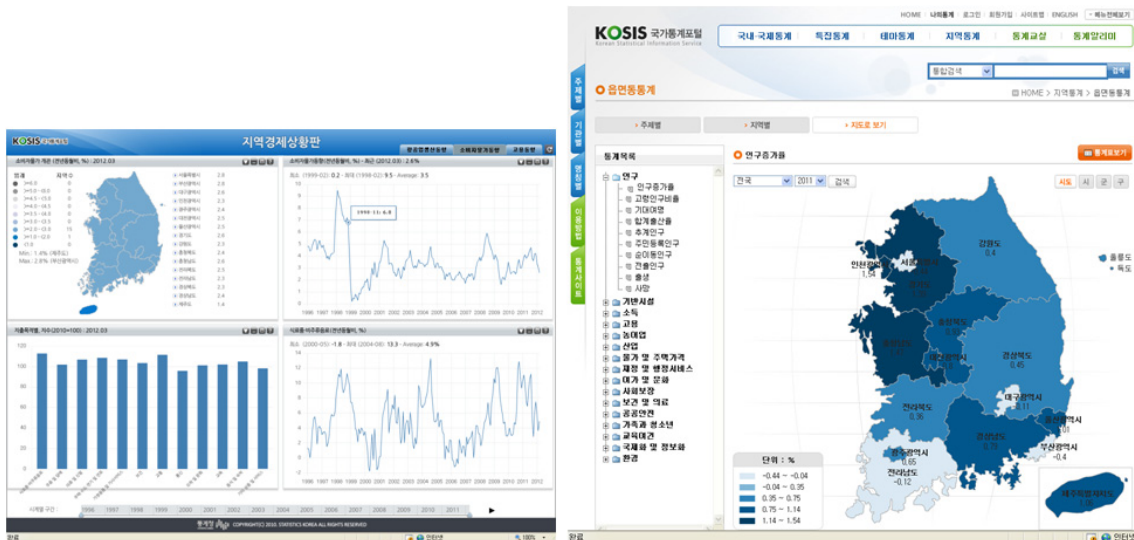
- 테마통계 서비스를 통해, 승인통계지표 가운데 신규통계, 관심통계, 대상별 통계, 이슈별 통계 등의 제공을 통해 사회현안에 즉시적으로 부합하는 지표제공
 - ① 최신통계 : 최근 업데이트된 통계지표와 그 변화 경향을 게시판 형태를 통해 제공
 - ② 인기통계 : 누적 조회건수를 중심으로 관심도 높은 통계지표를 목록화
 - ③ 대상별 통계 :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학생, 노인, 여성, 환자, 장애인, 외국인 등 주요 고객집단별 관심 통계 분류
 - ④ 이슈별 통계 : 사회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통계정보 제공
 - ⑤ 통계로 보는 자화상 : 개인신상정보의 입력을 통해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그림 2-10]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의 테마통계 서비스



□ 국가통계포털의 경우 e-나라지표에 비해 지역별 통계정보에 대한 제공이 두드러지며, GIS 서비스를 통한 통계지표의 확인 및 지역경제 상황판과 같이 지역별 통계지표 값의 차이 및 특성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 제공

[그림 2-11]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의 지역통계정보 서비스



4.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1) 주요 행정기관별 통계정보시스템

- 중앙행정부처 및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통계포털 및 통계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및 집행, 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지표들을 보유

- 그러나 각 기관에 따라 이러한 통계포털이나 통계정보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고 서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조차 사용되지 못하는 정책지표들이 상당 규모인 것으로 예상

[그림 2-12] 중앙행정기관별 통계정보시스템 구축현황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정보마당통계자료실	고용노동부 노동통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관세청 무역통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	국가보훈처 통계·기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
	기상청 기상재해통계	기획재정부 통계
	농림수산식품부 최근통계자료	대검찰청 통계분석
	문화재청 통계정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
	방송통신위원회 통계포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실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산림청 통계자료
	소방방재청 통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자료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조달청 통계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통계포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경찰청 e-자료바다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2)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 환경분야와 관련한 전문 정책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환경관리일 반, 환경보건·화학물질, 자연환경, 대기환경, 물환경, 상하수도·토양·지하수, 자원 순환의 7개 분야로 구분

- 지역별 통계 메뉴를 통해 지역별로 도식화된 통계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환경정책 정보에 대한 용이한 이해 가능, 환경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함께 제공
- 환경관련 e-나라지표 목록을 별도의 메뉴로 제시

[그림 2-13] 환경부의 환경통계포털 웹페이지



3)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 보건통계와 복지통계의 상위분류 아래 각각 보건의료, 건강보험, 한의약, 건강정책, 질병정책, 보건산업과 복지정책, 연금, 사회서비스, 인구이동, 노인, 보육, 장애인의 하위분류를 통해 각종 보건복지 정책지표를 분류
- 보건복지분야 100대 통계지표의 제공을 통해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건강상태 및 행태, 질병·장애, 보건의료,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일반,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 등 8대 주제별 분류기준을 적용

[그림 2-14]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포털 웹페이지



4)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 조사별 통계와 주제별 통계의 두 가지 분류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관련 통계지표를 제시
- 주제별로 중소기업 기본통계, 종합실태, 인력실태, 경영지표, 기술실태, 임금실태, 경기전망지수, 생산 및 가동률, 설비투자, 수출부문, 창업 및 부도, 혁신형 기업, 금융부문, 해외통계 등 14개 부문에 대한 통계지표를 제공

[그림 2-15] 중소기업청의 조사통계시스템 웹페이지



5) 서울특별시의 희망서울 생활지표

- 서울시민의 요구사항 및 시정 주요사업 성과지표, 시정 재무지표 등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지표체계 구축
- 시민복지, 주거안정, 시민건강, 여성가족, 경제, 문화관광, 교육, 도시재생, 환경, 교통, 안전, 마을공동체, 참여행정, 재정, 시민일반의 15개 주제별로 정책지표 분류
 -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수, 저상버스 도입대수,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등 생활체감적인 30개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서비스
 - 개별 정책지표에 대해 통계치의 변화와 함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국제수준의 비교 및 관련 행정자료 및 정책내용에 대한 소개 등을 지표와 함께 제공

[그림 2-16] 서울시의 희망서울 생활지표 웹페이지



제3장

주요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 사례 분석



제3장 주요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 사례 분석

제1절 미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

- 미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와 관련해 SUSA(the State of the USA)를 살펴볼 수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지표체계로 CitiStat 및 GMAP의 사례를 검토

1. 구축배경 및 추진경과

□ 구축배경

- 과학적, 통계적으로 선택된 지표를 통해 미국의 현 상황 및 발전 정도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국가의 주요 핵심 이슈들에 대한 사실 파악과 이해를 돕는 자료 제공이 주 목적
- 비영리, 비정치적, 독립기구로서 12개 이상의 주요 영역에 대한 국정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영역의 데이터 수집
- 정부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의식 제고, 국민의 참여 유도 및 협력, 국가발전상황 모니터링, 의사결정 지원, 책임성 제고의 목적

□ 추진경과

- 1990년대부터 국가핵심지표체계 개발을 위한 논의 제기
- 2003년 2월 회계감사원(GAO)과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이 국가지표체계 개발을 위해 토론회 개최
- 6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 핵심국가지표체계(KNIS: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를 개발(2003년 5월)
- 미 상원의원 Brownback, R-Kan (상원 과학기술소위원회 의장)이 GAO에 핵심지표체계를 현실에 적용하여 연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4년 11월 GAO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 (Informing Our Nation - Improving How to Assess the Position and Progress of the United States)
- 국립과학원(NAS), 국립기술원(NAE), 의학연구원이 2005년 이후 약 2년간 국가핵심지표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위험평가, 가능성 분석, 기술 및 조직 관련 이슈 등과 관련된 지표 추가
- 2006년 국가핵심지표체계를 의회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선정

- 2007년 3월 The State of the USA 설립, 면세기구로 지정
- 2008년 Edward Kennedy 상원의원이 SUSA 관련 법률안(The Key National Indicator Act)을 제출하여 2009년 상원의결
- 2010년 SUSA 웹 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자료 수집
- 2010년 3월 Barak Obama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하여 P.L. 11-148 로 입법

□ The Key National Indicator Act

- 목적
 - 국가의 현 상황에 대한 측정 및 이를 통한 적절한 국가의 방향 제시
 - 의회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 핵심국가지표체제의 발전 및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 평가
 - 연방정부공무원들이 핵심국가지표체제에 협력할 것을 규정
- 구성
 - 국가의 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계지표로 구성
 - 국가의 발전상태 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즉시 이용가능한 지표로 구성
- 거버넌스
 - 정부 또는 민간 단독으로는 종합적이고, 신뢰할만한 지표를 개발할 수 없음을 강조
 - 정부-민간 간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 (public-private partnership)
 - 국립과학원이 주요 핵심국가지표체제의 기획, 연구, 발전, 그리고 자문활동 까지 할 것을 규정
 - 핵심국가지표체제의 결과를 의회입법 및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권고
 - 국립과학원이 핵심국가지표체제를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개발 (자문 및 기능 통제 등)
 - 국립과학원이 핵심국가지표체제의 수정 및 변화를 주도
 - 핵심국가지표위원회의 구성
 - 총 8명으로 구성
 - 국회 상원의 다수당 리더가 2명의 위원 임명
 - 국회 상원의 소수당 리더가 2명의 위원 임명
 - 국회 하원의 대변인이 2명의 위원 임명
 - 국회 하원의 소수당 리더가 2명의 위원 임명

- 주요 내용

· 핵심국가지표위원회의 의무에 관한 규정

- i) 핵심국가지표체계가 목표에 부합하도록, 국립과학원과 협력하도록, 그리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및 국립과학원에 제출하고, 공중에 공개하도록 규정
- ii) 국립과학원과 협력하여 핵심지표체제를 분석 및 지표 선정, 민간기업 및 비영리 조직과 협력하여 핵심지표개발

· 핵심국가지표체제 구축에 관한 규정

- i) 국립과학원이 핵심국가지표체제를 구축하고 민간기업 및 비영리 조직과 협력할 것을 규정
 - 정부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이며, 교육기능 수행
 - 지표에 반영될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도록 규정
 - 선정된 이슈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도록 규정
 - 연구설계 및 필요한 데이터 수집
 - SUSA 웹페이지 관리하도록 규정
 - 핵심국가지표체제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안을 만들도록 규정

2. 거버넌스 체계

- 지표체계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가기금과 개인기부에 주로 의존하며, 비영리단체, 기금, 기업, 학계, 언론, 정부 등으로부터 재원 확보
 - 설립시 \$1000만불, 이후 매년 750만불을 국립과학원을 통해 지원
 - 대표적인 재원출연 기관으로 The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The Rockefeller Foundation, 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The F.B. Heron Foundation, Charles H. Revson Foundation 등이 참여
- SUSA의 경우 민간비영리단체로 구성되어 재원은 물론 지표체계의 운영과 관련해 적극적인 외부로부터의 협력과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최고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외부과학자 및 통계자료 공급자와 협력
 - 연방, 주, 지역의 통계기관, 국가기금, 국제기구, 언론, 비영리기구, 학계와 협력
 - 현존하는 측정지표체제에 대한 개별적, 독립적 연구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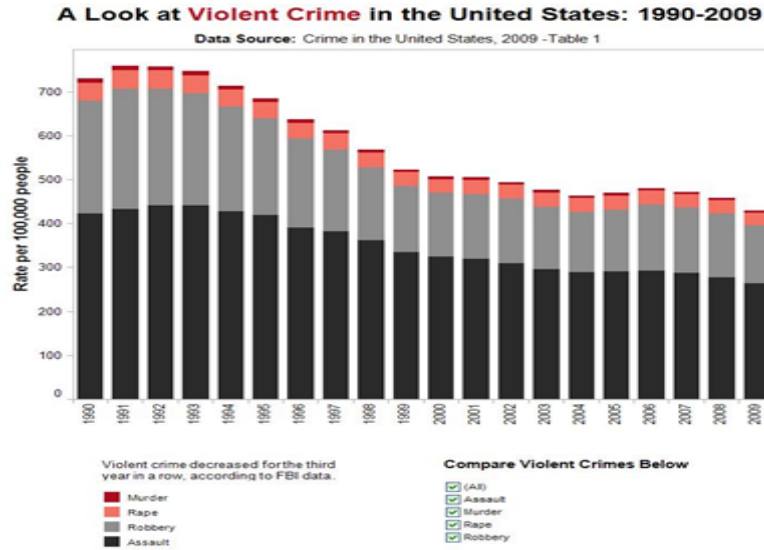
-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National Academy of Science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국정지표를 개발
- SUSAs의 운영과 관련한 자문단으로 국립학회들과 함께 SUSAs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정책 이슈에 대한 자료 및 측정도구의 지원, 그리고 지표품질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
 - 국립학회(The National Academies)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자료와 측정틀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를 비롯해 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Institute of Medicine 참여
 - State of the USA 자문위원회는 내용설계, 자료발간, 기술, 우수지표사례, 품질보장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국가자문단(National Advisory Group) 총 11명, 국가자문단 정부감시자(Government Observer for the National Advisory Group) 1명, 전략 및 기술자문단(Strategic and Technical Advisory Group) 총 26명으로 구성
- 지표개발 및 관리를 위한 조직체제로 정부기관, 학회, 연구기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국가정책지표(Key National Indicator System)를 개발
 - 회계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을 비롯해, 상원의원 (U.S. Senate), 국립과학원(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국립기술원(NA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의학연구원(IOM: Institute of Medicine), 국립연구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 지표체계의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 조직으로서 간사회(Board of Governor)는 비영리조직, 교육, 미디어, 정부, 기업 부문에서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출
 - 현재 3명의 이사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표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비정치적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목적에서 체계를 운영

3. 정보화 시스템

- 시스템의 구성특징으로 경제, 교육 등 각 분야별 분류에 따라 해당분야의 현황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각적 제시를 강조
 - 예컨대, 경제분야의 경우 핵심지표로 GDP, 실업률, 빈곤층 비율, 부채현황 등을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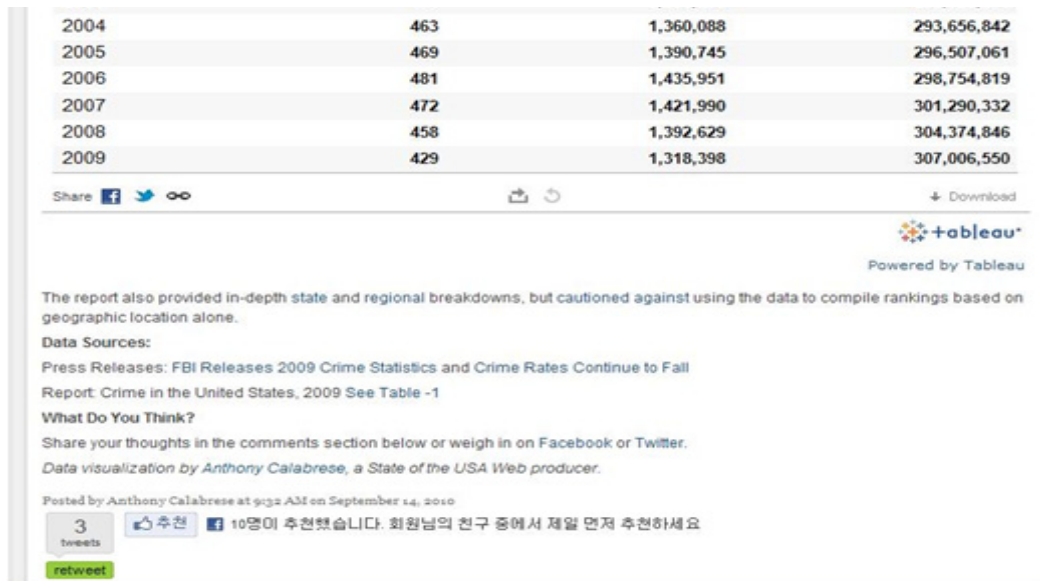
- 웹사이트의 구성과 관련해,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 도표, 그림 등을 적극 활용하여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제시
- 단순한 자료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자료에 대한 해석 및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

[그림 3-1] 미국 SUSA 웹사이트의 지표제공 방식



- 개별지표의 다운로드와 함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
 - 해당 자료를 즉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함과 동시에, 특정 자료를 클릭 시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을 팝업 윈도우로 제공
 - 자료의 근거와 관련해, 해당 정부기관, 보고서명, 연도 등을 링크로 제시
 -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Facebook, Twitter에 남길 수 있도록 링크 제시

[그림 3-2] 미국 SUSA 웹사이트의 SNS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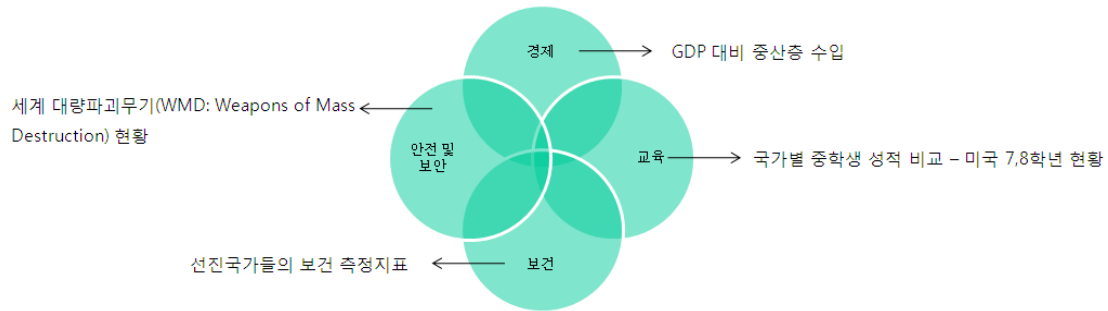


4. 지표분류체계

- 미국의 SUSA는 부문별 혹은 영역별로 하위 영역의 분류 없이 지표를 제시하는 평면적 지표분류체계를 채택하여 단순하고 압축적이며 간결한 분류체계를 채택
 - SUSA는 경제(Economy), 교육(Education), 보건(Health), 안전 및 보안(Safety and Security), 사법(Crime and Justice), 노령화(Aging), 가족 및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예술 및 문화(Arts and Culture), 에너지(Energy), 주택(Housing), 환경(Environment) 등 11가지 지표에 대한 통계를 제공

- 평면적 지표분류체계를 통해 일반국민과 국정최고관리자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소규모 지표 위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통해 개별 정책지표(indicators)에 대응하는 측정도구(measures)를 선정
 - 각 지표 별로 미국의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자료 제시
 - 각 지표 별로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통계자료 제시
 - 각 지표 별로 통계자료 제공 시 관련 있는 다른 통계자료 제시

[그림 3-3] 미국 SUSA의 부문별 정책지표 선정 예시



5. 개별 국가정책지표

- SUSA의 전체 지표(indicators)는 경제, 교육, 보건 등 총 11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각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도구(measures)들을 제시
 - SUSA의 지표체계는 일반적인 통계지표의 지표관리체계와 달리 11개의 지표부문만 결정
 - 정책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지표부문에 대해 적절한 측정도구들을 유연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핵심지표에 대해 지속적인 진단과 발굴이 진행

- 개별 지표에 대한 설명과 주요 측정도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표 3-1] 미국 SUSA의 국가정책지표 및 관련 측정도구

지 표	설 명
경제(Economy)	가구당 소득차이, GDP, 실업률, 빈곤층 비율, 부채현황 등 미국의 경제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교육(Education)	이민 2세 교육현황, 교육수준 별 결혼비율, 교육수준별 소득차이 등 미국민의 교육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보건(Health)	당뇨환자 비율, 흡연인구비율, 비만인구비율 등 미국민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안전 및 보안 (Safety & Security)	세계 대량파괴무기 현황, 국가 핵무기 생산 및 배치 현황 등 국가의 안전 및 보안을 나타내는 지표
사법 (Crime & Justice)	연도별 폭력사건발생건수, 강도사건통계, 마약밀매 현황 등 범죄와 관련된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노령화(Aging)	노령인구비율, 연령별 및 성별 행복지수 측정, 노령인구 웰빙지수 등 노령인구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가족 및 아동 (Families & Children)	아동독서관련 통계(시간, 집중능력 등), 아동웰빙지수 등 아동 관련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예술 및 문화 (Arts & Culture)	예술활동 참여비율(발레, 오페라, 뮤지컬...) 등 미국민의 예술 및 문화활동과 관련된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에너지 (Energy)	에너지절약활동 참여비율 등 미국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주택 (Housing)	미혼인구의 동거비율 등 미국민의 주택과 관련된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환경 (Environment)	1인당 CO2 배출량 등 환경과 관련된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6. 미국 주정부의 CitiStat & GMAP

1) CitiStat의 구축배경 및 주요 특징

- 1999년 볼티모어시가 도입한 통계기반 관리체도로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주기적 성과 측정과 함께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여, 도입 이후 총 3억5천만 달러의 재정 절감 달성 (Perez and Rushing, 2007)
 - 1999년 이후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통계기반 관리체도로 시정부의 반응성, 책임성, 효과성 제고 향상을 위해 뉴욕시 경찰청의 CompStat(Computerized Statistics)을 참고하여 볼티모어시 경찰청에서 시작
 - 범죄예방의 효율성 제고가 당초 목적이었으나, CompStat의 기본원리를 볼티모어시의 관리 및 기능에 응용하여, 매월·격월 회의를 통해 시의 각 부서가 성과를 측정하고 해결책을 모색
 - 제도 도입 1년차에 약 13.2백만불의 재정절감이 이루어졌으며, 도입 4년차에는 약 100백만불의 재정절감 달성, 재정적자, 범죄율, 단절된 행정 등 많은 문제해결에 기여했으며, 제도 도입 3년만에 폭력범죄 발생률은 40% 감소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억5천만불 규모의 재정절감 성과 파악

- 제도 운영과 관련해 뉴욕시 경찰청의 '통계기반 서비스향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CitiStat 운영의 4가지 원칙을 제시
 - ① 제1원칙 :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 획득 및 공유
 - 311 서비스요청시스템 : 도로, 상하수도, 교통문제 등의 해결을 요청
 - 시 정부 각 부서의 통계보고서 (각 분야의 지표 포함)
 - 현장조사 : 분석관이 각 지역 공동체 연락책이 제공하는 모니터링 정보 수집 분석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비효율적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증거 수집
 - ② 제2원칙 : 자원의 신속한 배치
 - 시장 및 각료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포럼 제공
 - 서비스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 2주마다 주요 문제 및 대응능력에 대해 논의
 - CitiStat의 주요 지표를 목표에 맞게 재설정
 - ③ 제3원칙 :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
 - 자료 수집, 분석, 결과 보고 등이 기본적인 절차
 - 전략개발을 위해 모든 관계자 참석
 -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완비

- 각 부서의 성과측정을 책임지는 분석관
- 실행중인 모든 전략의 모니터링 및 효과측정
- ④ 제4원칙 : 엄격한 추적 및 평가
 - 개발된 지표에 대한 추적 및 평가
 - 각 부서는 계획된 보고일정에 따라 매달 또는 격월로 경과 보고
 - 비상시 매주 회의
 - 분석관들이 이전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와 약속을 기록
 - 매 회의시 각 부서장에게 완료된 성과의 보고 및 다음 회기까지 진행상황보고서 작성을 요구

□ CitiStat 관련 데이터는 CitiStat 템플릿과 CitiTrack 보고서, 시각적 증거, 진행상황 추적의 네 가지로 구성

- CitiStat 템플릿 : 각 부서가 측정한 지표로 구성, 주요 성과지표(PKI) 포함하며, 2주마다 현재의 성과를 과거의 성과와 비교
- CitiTrack 보고서 : 비 응급 서비스 요청을 위한 311 call center 운영(가로등 조명 교체 등), 요청이 접수되면 완료될 때까지 추적하여 각 요구가 적시에,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 가시적 증거 :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현장 상태를 파악하며, CitiStat 팀은 현장에 파견되는 조사원과 분석가를 보유
- 진행상황 추적 : 매 회의 이후 각 부서는 권고사항 및 다음 회의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목록을 받으며, CitiStat은 회의마다 지속적으로 결과가 추적되는 시스템

□ 폭넓은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지표를 상호 점검하며, GIS 서비스 및 다양한 시각적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

- CitiStat 회의 과정에서 집단 사고과정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시의회 의원, 부서장, 각 부서 및 노조 공무원 참여와 함께 일반시민, 언론인, 기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의사소통이 진행
- GIS 서비스를 활용하여, CitiStat 데이터를 행정구역별 지도와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시각적 기술 및 통계분석적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로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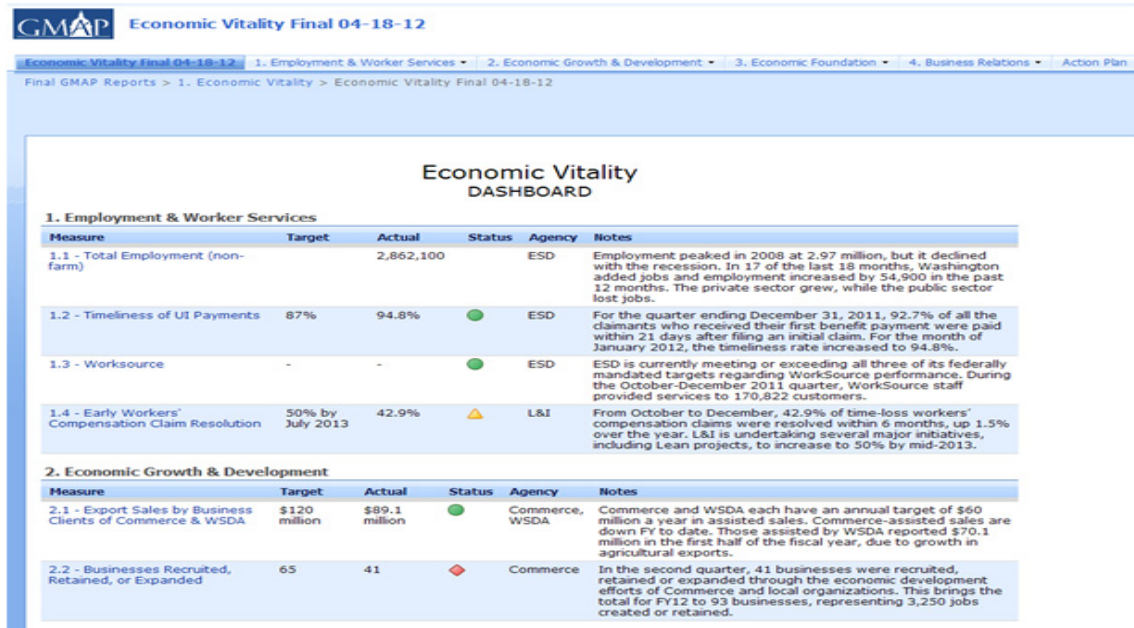
2) GMAP의 구축배경 및 주요 특징

- GMAP(Government Management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은 2005년 미국 워싱턴주에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주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주정부 차원의 정책지표체계
 - 워싱턴 주정부의 성과측정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효율성 향상, 주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도입
 - 2005년 GMA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quality improvement 활동을 대체
 - 제도도입을 통해 서비스 전달 속도 개선, 부서 간 협력 촉진, 주민이 기대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성과를 어떤 부서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관한 정보제공, 시민의 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에 기여

- GMAP의 운영과 관련해 다음의 7가지 원칙 강조
 - ① 고위 관료의 참여 : 고위관리자 및 의사결정권자의 참여 강조
 - ② 측정을 위한 측정금지 : 지표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연관성 강조, 지표와 관리 부서의 연계, 부서의 지표 측정 결과 활용 강조
 - ③ 목표설정과 지표의 연계
 - ④ 의사결정과 지표의 연계
 - 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데이터 개발 및 사용
 - 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조사 : 장애요인의 발견 및 대책 마련, 목표 미달성 시 원인, 장애요인, 해결책 마련
 - ⑦ 지속적인 학습 : 과거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과정, 업무처리과정 개선 도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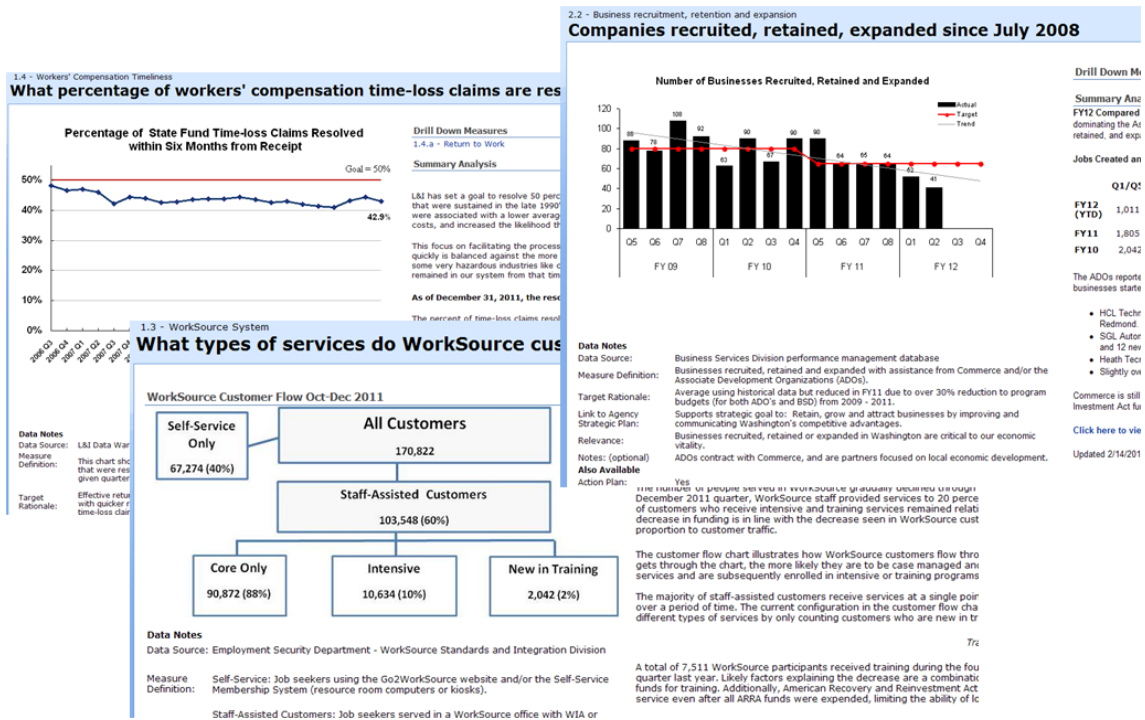
- 각 분야별 성과보고서를 통해 측정항목, 목표, 결과, 상태, 담당부서, 분석을 도표로 제공하며, 지표별 기준, 이행지침, 이행상황의 정보를 제공
 - 각 지표별로 상황판(dashboard)를 구성하여 현재 해당 정책지표의 성과달성 수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장치를 포함
 - 해당 정책지표에 대한 관리부서와 지표관련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여 해당 정책지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충분히 제시

[그림 3-4] 미국 GMAP의 경제활성화 관련 상황판



□ 각 지표항목별 데이터의 경우, 모형 및 그래프 등의 시각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표의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

[그림 3-5] 미국 GMAP의 지표별 자료 제공 방식



- 주정부의 성과향상을 위해 해당 정책지표와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특징적

[그림 3-6] 미국 GMAP의 경제활성화 관련 액션플랜

The screenshot shows the 'Action Plan Rollup' section of the GMAP Economic Vitality Final 04-18-12 website. The table lists various performance measures, priority areas, titles, agencies, and staff members, along with forum dates, statuses, and due dates.

Performance Measure	Priority Area	Title	Agency	Who	Forum Date	Status	Due Date
1.2.a - Unemployment Insurance Call Wait Time	Economic Vitality	EUC Call Center	ESD	Don Albright	2011-02-16	Completed	12/1/2010
1.4 - Workers' Compensation Timeliness	Economic Vitality	Review our training program for more on-the-job opportunities	L&I	Janet Morris, Chief of Claims	2010-03-17	Completed	8/31/2010
1.4 - Workers' Compensation Timeliness	Economic Vitality	Early claim review	L&I	Janet Morris, Chief of Claims	2010-03-17	Completed	3/31/2010
1.4 - Workers' Compensation Timeliness	Economic Vitality	Alert systems being implemented	L&I	Janet Morris, Chief of Claims	2010-03-17	Completed	9/1/2010
1.4 - Workers' Compensation Timeliness	Economic Vitality	c.Standardize Claims Management Process	L&I	Cheri Ward, Chief of Claims	2010-10-27	In Progress	3/31/2012
1.4 - Workers' Compensation Timeliness	Economic Vitality	d.Early Return to Work Lean Initiative	L&I	AnnaLisa Gellermann	2010-10-27	In Progress	3/31/2012
1.4 - Workers' Compensation Timeliness	Economic Vitality	g.Provider Network (2011 Legislation)	L&I	Janet Peterson, HSA	2010-10-27	In Progress	1/1/2013
1.4 - Workers' Compensation Timeliness	Economic Vitality	f.Expand COHEs (Centers of Occupational Health & Education)	L&I	Janet Peterson, HSA	2010-10-27	In Progress	6/30/2013
1.4 - Workers' Compensation Timeliness	Economic Vitality	h.Washington Stay at Work Program	L&I	Doug Stewart, Employer Services Manager	2010-10-27	In Progress	9/30/2011

제2절 영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

- 영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로 환경식품농무부(Defra)가 주도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U.K. Gover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최근 영국의 국가통계행정체계의 변화를 통해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의 시사점을 모색

1. 영국의 국가통계행정체계 개요

1) 배경과 취지

- 1968년 들어서면서 국가통계서비스가 창설되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통계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은 지난 1996년 중앙통계사무소(CSO)와 인구조사국(OPCS)의 합병을 통해 창설
- 2000년에는 통계시스템의 독립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통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통계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National Statistics)'를 발표해 '국가통계' 승인제도를 도입
 -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적 내용들은 지난 2007년도 제정된 '통계와 등록서비스법'에 국가통계책임관(National Statistician)의 위상, 업무수행지침(code of practice)과 함께 규정
- 영국 통계관리 시스템은 정책결정, 기대, 예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뢰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관한 일관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 경제에 초점을 맞춰 적시에 접근 가능한 영향력 있는 통계분석을 제공하는 국가 정부통계조사의 주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
 - 이를 통해 민간에서는 기업조사 수집 비용을 감축할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 효율성 및 정책순응성을 제고

2) 국가통계행정 조직체계

- 영국의 통계제도는 집중과 분산이 공존하는 혼합형으로 정부통계 정책 및 총괄

조정은 집중형으로 영국의 중앙통계집행기구인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서 담당하는 반면, 통계생산은 각 정부부처에 생산하는 분산형 체계로 정부통계기구(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GSS)에서 대부분의 통계제도를 제공

- 국가통계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영국통계기구(UK Statistical Authority: UKSA),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 정부통계서비스(Government Service System: GSS)로 구성

- 영국통계기구(UKSA)의 구성 및 주요 기능 (김기환 외, 2009)

- 우선 정부행정조직이 아닌 독립기구인 UKSA는 런던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책임관(National Statistician)이 수장이고, 국가통계정책을 입안하고, 통계관련 정부기구들이 업무수행에서 지켜야할 “업무수행지침(Code of Practice)”을 제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근(Pre-Release Access)”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
- 모든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가 양질의 질을 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국가통계관련 실질적 집행기관인 통계청을 감독
- UKSA에 속한 ‘국가통계책임관(National Statistician)’인 질 매더슨(Jill Matheson)은 장관급(Permanent Secretary)이기 때문에 내각회의(Cabinet Office Meeting)에 참석해 국가통계관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통계청(ONS)과 정부통계서비스(GSS)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음
- 또한 국가통계전문가는 국가정보의 ‘투명성 아젠더(Transparency Agenda)’ 원칙을 토대로 국가통계관련정책에 관한 고문단의 장(principal adviser)이고, UKSA의 최고 책임자(Chief Executive)이며, 또한 ONS의 설립을 관장하고 정부통계서비스(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의 수장으로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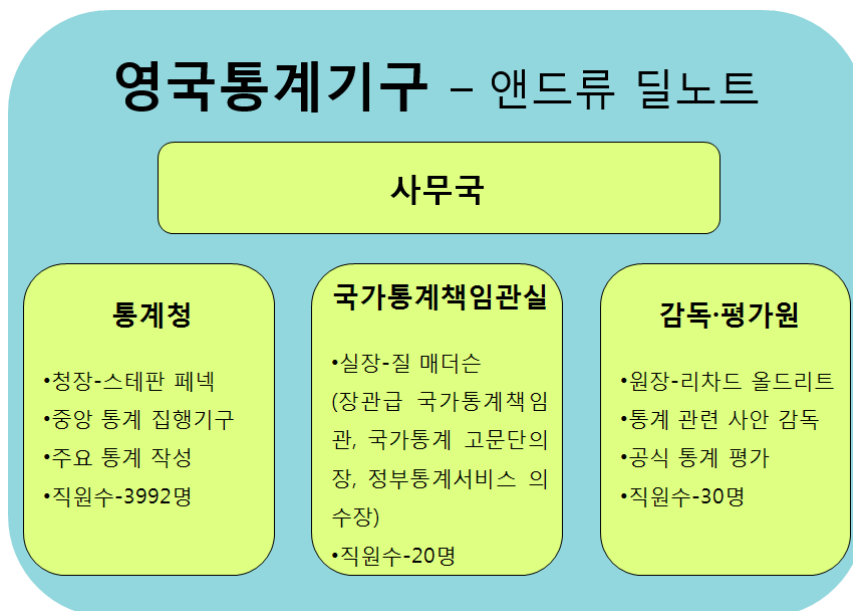
- 영국통계청(ONS)의 구성 및 주요 기능

-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은 현재 스테판 페넥(Stephen Penneck)이 청장(Director General)을 맡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 통계생산처라고 할 수 있고, 2012년 5월 현재 총 3992명의 직원으로 구성
- ONS 본부(Headquarter)는 웨일즈 뉴포트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주로 국가시장경제와 관련한 단기적 경제관련 통계를 생산하며, 정치, 사회, 지리통계,

인구조사(Census 조사)는 런던 남부 도시인 티치필드(Titchfield) 사무소에서 생산하며, 이 두 곳 이외에 런던사무소에서는 50여명의 통계전문가들이 국가통계 방법 관련 업무에 종사

- ONS에서는 모든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공식(Official)” 통계와 비승인 통계까지 포함해 모든 “국가통계”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며, 2012년 현재 통계청 승인 국가통계는 총 900개
- ONS의 주요 역할은 국가차원에서 경제 및 사회 통계의 생산을 책임지고, GSS를 위한 업무조정, 통계정책, 전문적인 통계표준을 설정하고, GSS 전체의 업무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영국 시스템 내에서 통계의 생산에 대한 협력, 유럽 통계 시스템(ESS)에서 영국을 대표
- ONS의 주요 권한과 업무에 따라 조직구성은 크게 아래와 같다.
 - 수집 및 생산 부서(Collection and production directorate)
 - 분석 및 배포 부서(Analysis and Dissemination Directorate)
 - 인구 통계 부서(Population and Demography Directorate)
 - 전략 및 표준 부서(Strategy and Standards Directorate)
 - 조직 역량 및 성과 부서(Organizational Capability and Performance Directorate)

[그림 3-7] 영국통계기구와 통계청의 조직구조



□ 정부통계서비스(GSS)의 구성 및 주요 기능

- 정부통계서비스(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GSS)는 각 정부 부처의 통계책임자들이 국가통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학습하는 일종의 전문가 포럼

내지 협의체

- 각 정부부처는 통계책임자(Statistical Head of Profession: HoP)의 지시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며, 스코틀랜드 집행부(Scottish Executive)와 웨일즈 정부(Welsh Government)의 통계전문가들 역시 정부통계서비스에 소속되어 있으며 통계책임관(Chief Statistician)의 지시에 따름
- GSS 구성원은 정부 공식통계의 생산에 책임을 지고 있는 통계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UKSA와 ONS에 통계분석 및 해석자료 제공과 국가통계관련 각종 정책과 이슈에 대해 통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물적인 지원과 운영지침은 국가통계책임관실(National Statistician's Office)에서 제공

[그림 3-8] 영국 GSS의 거버넌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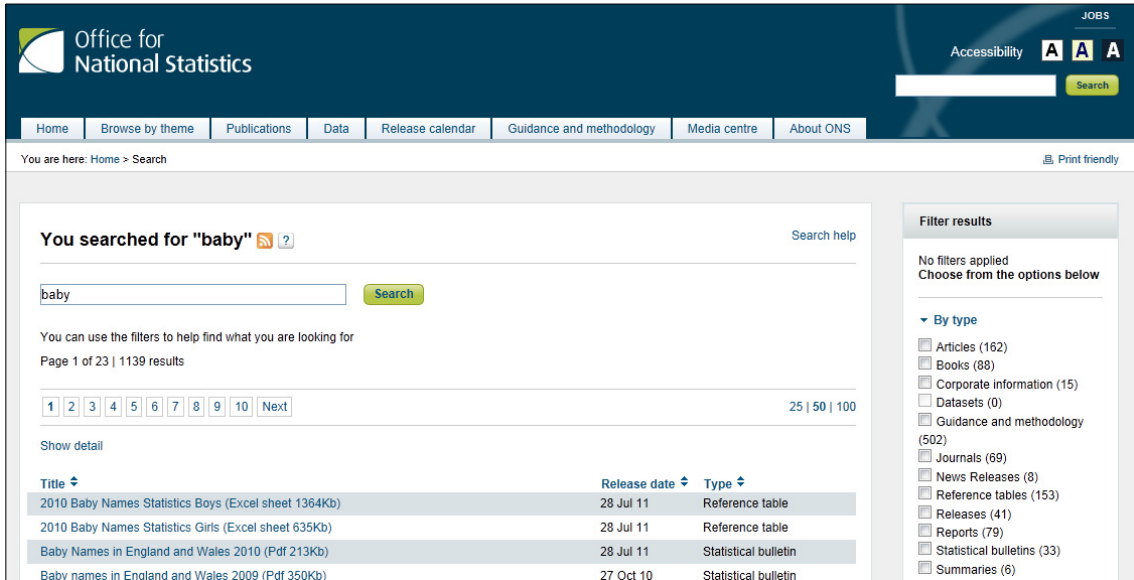
3) 통계지표체계와 통계서비스

- 영국 통계청의 통계자료는 행정통계와 함께 인구조사, 일반통계자료를 모두 제공하며, 최신자료의 경우에는 보도자료(News Release) 형식으로 거의 실시간 업데이트 되고, 관심이 집중되는 통계의 경우에는 ‘하이라이트(highlights)’로 메인화면에서 제공
- 모든 통계자료는 주제별, 부처별, 통계조사대상 지역별(coverage), 지역단위별, 통

계승인 유형별에 따라 분류되어 대표 게이트웨이인 “통계서비스 허브(Publication Hub)(<http://www.statistics.gov.uk/hub/index.html>)”를 통해 제공

- 날짜별, 키워드 입력을 통한 자료검색이 가능하며, 인증절차 없이 다운로드 가능

[그림 3-9] 영국 통계청 웹페이지를 통한 통계지표 검색화면



- 주제별 범주는 총 11개로, ‘농업과 환경’, ‘기업과 에너지’, ‘아동, 교육, 학교’, ‘범죄와 정의’, ‘경제’, ‘정부’, ‘건강과 사회복지’, ‘노동시장’, ‘사람과 장소’, ‘인구’, ‘여행과 교통’으로 분류

- 조사대상지역별 범주는 UK, GB(Great Britain), 잉글랜드와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국제통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리적 단위에 따른 범주(Geographical Breakdown)는 통계 데이터를 행정구역별 지도 및 위치정보와 결합시켜 보다 시각적인 인포그래픽(Infographic)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

- 통계승인유형에 따른 검색은 시험적 공식통계(Experimental Official Statistics),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공식통계이지만 비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 not as designated as National Statistics)로 구분

- 범부처 공통 통계자료는 ‘형평성 & 다양성(Equality & Diversity)’과 ‘이민(Migration)’을 포함
- 검색한 통계자료에는 제목, 생산날짜, 발표일, 주제, 생산부처, 커버리지, 지리적 단위, 국가승인유형, 통계자료에 대한 요약설명이 제공되고, 국가승인통계의 경우 오른쪽 상단에 승인마크가 표시

[그림 3-10] 영국 통계청 웹페이지를 통한 통계지표 검색결과 화면

<p>Title: UK Overseas Trade Statistics - UK Trade with Countries outside the European Union - March 2012</p> <p>Release date: 10 May 2012 at 9:30am</p> <p>Theme: Business and Energy Department: HM Revenue and Customs Coverage: UK</p> <p>Geographic breakdown: Country Designation: National Statistics</p> <p>Summary: This publication provides details of the overseas trade in goods statistics (OTS) of the United Kingdom (UK) which are published as National Statistics by HM Revenue and Customs. The OTS are a detailed dataset covering the UK's trade in goods at a disaggregated country and product level. These are published separately for Non-EU and EU trade and provide access to both aggregated and detailed data for over 9,000 commodities and 250 partner countries.</p>	
---	---

- 영국의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연관성, 정확성, 적시성, 일관성, 공통성, 접근성 등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고 통계자료 생산과정에서 UKSA의 '업무수행규칙(code of practice)을 이행해야 함
 - 범정부 차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센서스, 각종 서베이, 행정정보 데이터 자료의 입력, 처리, 결과 과정에서 표준화된 방식의 조사방식(예를 들면, 동일한 어휘, 정의, 질문형식 등)을 따르게 하여, 상이한 기관들이 생산한 통계자료 및 데이터 간 비교분석이 용이한 환경을 만드는 '조화(Harmonization)' 프로그램을 범부처로 확산
 - 이 프로그램은 강제성이 아닌 권고성 프로그램이며, 영국 내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EU, UN, EUROSTAT의 통계가이드라인 및 지난 2007년 제정된 '통계와 등록 서비스법(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s Act)'의 요건들에 적용
 - 이러한 '조화'를 통해 부처는 국가통계승인평가를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으며 공식통계 데이터셋들간 자료호환, 공유 및 연계도 용이해지며, 통계조사의 중복을 막고 통일된 조사방식을 따름에 따라 불명확한 통계조사의 위험을 줄이고, 조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 정치, 사회,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지표들을 민간기업 및 연구소, 대학은 물론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개발해 제공
 -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통계조사를 비롯해, 최근 변화된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정책지표로 급증하는 다문화가정을 반영한 '사회통합과 참여', 2000년대부터 시작한 '사회적 웰빙(Societal Wellbeing)', '노숙자 증가와 주택수급 지표', '건강불평등 지표', '생활스타일과 행동양식', '연료 빈곤(Fuel Poverty)', '창의', '여가활동 지표' 등이 대표적 사례

4) 영국 국가통계체계의 주요 특징

- UKSA와 통계청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다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책임을 지므로 정치적인 독립성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어 각 부처 통계업무에 대해 객관적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통계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공표가 가능
 - 실제로 통계청에서 제시한 "업무수행지침"을 어긴 통계자료는 대시보드(dashboard)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
 - 국가통계책임관이 통계내각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Permanent Secretary)이기 때문에 UKSA와 통계청이 정부기관은 물론 비정부기관(non-crown bodies)에서 생산되는 모든 통계생산업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계의 품질(quality)을 평가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통계생산과 관련한 부처 간 이해 조정도 용이하고 범정부적 통계생산과 관련해 통제가 용이

- UKSA와 통계청은 '업무수행규칙(Code of Practices)'을 잘 이행하고 수준 높은 통계자료에 통계청 승인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통계'라는 브랜드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이 지정제도를 통해 범국가차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통계의 품질(quality)를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계, 데이터제공전문업체, 민간통계전문가 등 12명의 각계 통계전문가들이 각 부처에서 생산한 통계의 품질을 평가

- 정부통계서비스(GSS)를 중심으로 한 개별 정부 부처별 통계생산의 분산화(Decentralization)이며, 통계청이 모든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에서 통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정책기반의 통계를 단기간에 생산할 수 있고 정책입안과 집행에 기여
 -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의 4/5가 통계청이 아닌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생산된 것이며, 동시에 분산화된 통계생산이 가져올 수 있는 통계자료중복수집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화(Harmonisation)' 표준화를 도입해 활용

- UK 정부 이외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정부에 따른 통계관리의 분권화(Devolution)
 - 이러한 분권화는 2001년 UK 정부와 이들 지역행정부와의 '통계협약(Statistics

Concordat)'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정부는 해당 지역과 관련한 통계 생산하는 책임을 부여

- 이를 통해 지역 환경과 지역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기반의 통계검색이 용이하도록 지리정보(GIS)와 지도정보(GPS)를 적극 활용

□ 국제 통계자료들과 호환 내지 비교될 수 있도록 국제적 통계표준을 공유하고 공동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과 협력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지표를 개발

- 영국은 1973년 이미 유럽통계시스템(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회원이며, 다수의 GSS 회원들이 EU의 국제개발통계분과에 소속되어 활동
- 자국에서 생산된 통계자료가 다른 나라는 물론 국제 통계자료들과 호환 내지 비교될 수 있도록 EU, UN, EUROSTAT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의 7개 국가들과 협력사업을 통해 통계표준을 공유하고 함께 공통의 통계를 생산
- 이와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를 통계수치를 통해 빠르게 읽어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와 함께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현안과 밀접한 시의성 있는 정책지표를 대학,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해 개발해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

2. 지속가능발전지표(SDI)의 개발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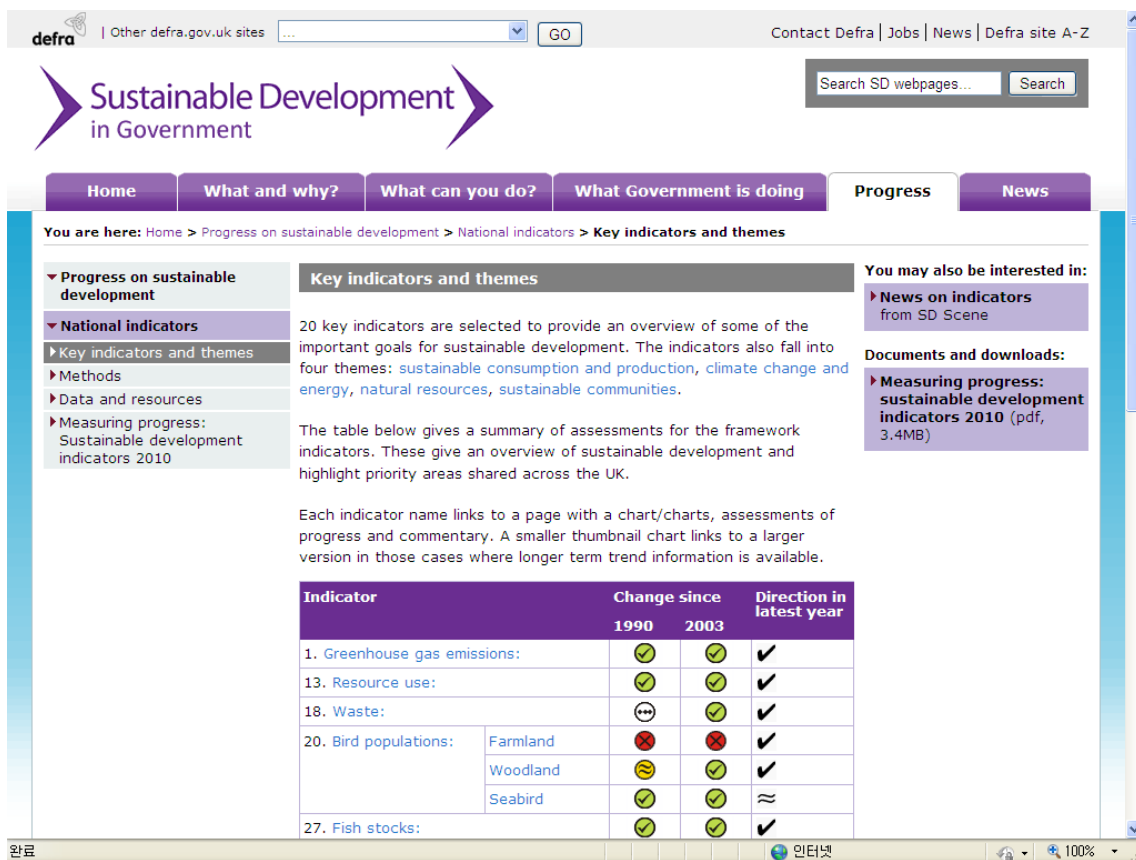
□ 영국은 지난 1999년에 발표된 '생활의 질 측정(Quality of life counts)'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주요과제 및 실천지침과 관련하여 15개의 핵심지표와 135개의 국가지표 등 2개 종류로 구성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Gover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를 제시

□ 영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15개 주요 지수는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어떤 발전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개발

- 지속가능 발전 지수는 경제성장(economic growth), 사회발달(social progress) 및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등 3개 축(pillar)으로 구성
- 경제성장 분야는 경제성과(economic output), 투자(investment) 및 고용(employment) 등 3개 지수로, 사회발달(social progress) 분야는 빈곤층 타파(poverty & social exclusion), 교육, 보건, 주택 및 범죄 등 5개 지수로, 환경보호 분야는 기후변화, 대기질, 교통, 수질, 야생동식물, 토지이용 및 폐기물 등 7개 분야로 각각 구성

- 영국의 통계기구(SA)와 통계청(ONS)을 통해 개별 지표들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함께 최종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나, 기본적으로 영국의 환경식품농무부(Defra)가 지속가능지표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매년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출판함
 - 20개의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1990년 이후 지표값의 변화를 간단한 시각적 기호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국가발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

[그림 3-11] 영국 SDI의 지표 제공 웹페이지



- 1999년 지표개발 당시 15개에 달하던 주요 핵심지표가 2012년 현재 20개로 확장 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주요한 핵심지표로서 지속가능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및 에너지, 천연자원, 지속가능사회의 네 가지 영역을 대표
 - 20개 핵심지표에 대한 개괄적 제시와 함께 각 지표별로 차트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표의 개선 여부 및 관련 설명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작은 썸네일 형태의 차트를 통해 개괄적인 지표결과의 제시와 함께 해당 썸네일을 클릭하면 해당 지표에 대한 장기적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표 3-2] 영국 SDI의 20개 주요 핵심지표

Indicator		Change since		Direction in latest year
		1990	2003	
1. <u>Greenhouse gas emissions:</u>		✓	✓	✓
13. <u>Resource use:</u>		✓	✓	✓
18. <u>Waste:</u>		⊙	✓	✓
20. <u>Bird populations:</u>	Farmland	✗	✗	✓
	Woodland	≈	✓	✓
	Seabird	✓	✓	≈
27. <u>Fish stocks:</u>		✓	✓	✓
28. <u>Ecological impacts of air pollution:</u>	Acidity	⊙	≈	...
	Nitrogen	⊙	≈	...
30. <u>River quality:</u>	Biological	✓	≈	≈
	Chemical	✓	✓	✓
32. <u>Economic growth:</u>		✓	✓	✗
37. <u>Active community participation:</u>		⊙	✗	✗
38. <u>Crime:</u>	Vehicle	✓ ₁₉₉₁	✓	✓
	Burglary	✓ ₁₉₉₁	✓	✓
	Violent crime	✓ ₁₉₉₁	✓	✓
40. <u>Employment:</u>		≈	≈	✗
41. <u>Workless households:</u>		⊙	≈	✗
43. <u>Childhood poverty:</u>	Before housing cost	✓	≈	✓
	After housing cost	≈	≈	✓
45. <u>Pensioner poverty:</u>	Before housing cost	✓	≈	✓
	After housing cost	✓	✓	✓
47. <u>Education:</u>		✓	✓ ₂₀₀₄	✓
49. <u>Health inequality:</u>	Infant mortality	✗ ₁₉₉₄	✓	✓
	Life expectancy	✗ ₁₉₉₁	✗	✗
55. <u>Mobility:</u>	Walking/cycling	✗ ₁₉₉₅	✗	✓
	Public transport	✓ ₁₉₉₄	✓	✓
59. <u>Social justice:</u>		⊙	⊙	⊙
60. <u>Environmental equality:</u>		⊙	⊙	⊙
68. <u>Wellbeing:</u>		⊙	⊙	⊙

제3절 호주의 국가정책지표체계

- 호주의 국가정책지표체계와 관련해 MAP(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최근 국가정책지표 개발과 관련한 ESA(Essential Statistical Asset for Australia)의 부분도 함께 검토

1. MAP의 구축 배경 및 추진 체계

1) MAP의 구축 배경

- 호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삶의 질 수준이 지속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부터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cs, ABS)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2002년 MAP이라는 불리는 보고서를 격년 단위로 공표
 - 사회 발전(society progress)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이를 측정하려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일련의 세계포럼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발전에 대한 측정이 실제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정부와 공동체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를 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공공 토론을 활성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
 - GDP가 발전의 중요한 지표로 된다고 해도 경제 이외에 사회 및 환경에서의 주요 측면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함
- 호주통계청은 호주 정부의 정책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발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 자료들을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출판물과 전자 자료 등을 통해 호주 통계청은 발전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통계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오고 있으나 호주 통계청이 제공하는 많은 양의 자료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
 - 호주 통계청은 제공하는 자료는 보건, 교육, 소득과 같은 호주 국민의 특정 영역을 제공하지만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위한 체계가 요구됨
 - 발전을 측정하고 공표하는 결과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있게 만들고 있음, 발전을 묘사하는 지표들을 사용하는 목적의 하나는 그러한 지표들이 복잡한 현실의 주요 영역(관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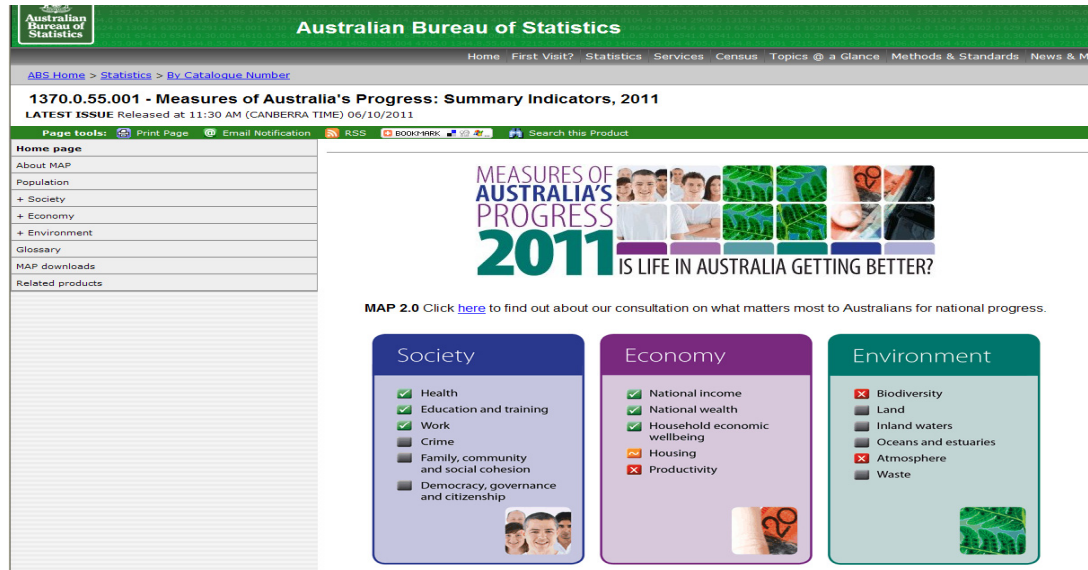
2) 추진체계

- 호주 통계청(ABS)이 주관하여, 통계 시스템 구축, 서베이조사, 연구자료 작성 및 보관등을 주요 목표로 함
 - 통계청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하여 중앙 정부 부처, 학계, 지방 정부 및 일반 호주 국민 개개인이 국정운영 전반에 관련한 통계를 손쉽게 획득 가능함
 - 통계청 조직 운영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호주 정부는 Expert Reference Group을 조직하였으며, 이 그룹의 구성원으로는 정부, 산업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포함
 - Expert Reference Group의 의장은 호주통계청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 수상 내각부, 환경부, 왕립멜버른기술연구소, 텔레손아동건강연구소, 호주보건복지연구소, 재무부, The Global Foundation 등이 참여
 - 지표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기업, 비정부 조직, 국제기구 등이 모두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개발지수(Australian National Development Index) 및 공동체 지수(Community Index)를 개발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
 - 이 외에도 Australian Research Alliance for Children and Youth(ARACY)과 각 주 정부(State government) 등이 참여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

3) 시스템의 구성 특징

-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MAP 지표들이 간단하게 연동되어 있어 해당 지표들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음
- 주요지표(Headline indicators)는 Dash board를 통해 제공되며, Dashboard는 17개 지표로 세분화되며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dashboard를 통하여 지난 10년간 호주 통계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
 - 호주 통계청은 지표 변화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화의 양상을 교통 신호등 시스템(traffic light)을 응용하여 시각화함
 - 지난 10년간 지표의 발전과 데이터 수집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별다른 가시적인 변화가 없었을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나타냄
 - 세부 지표는 엑셀자료로 제공

[그림 3-12] 호주 MAP의 웹페이지 화면 구성



2. MAP의 지표분류체계와 개별 정책지표

- MAP은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국가발전은 웰빙(wellbeing), 복지(welfare),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심지어 행복(happiness)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임
 - 웰빙 또는 복지는 일반적으로 삶에 만족하며 잘 사는 조건을 의미
 - 삶의 질은 웰빙과 아주 유사하지만 사회가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잘 만족시키느냐를 보여주는 집합적 의미로 이해
 -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행위가 관리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초기에는 환경 부문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경제 및 사회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결국 발전이라는 것은 삶의 경제적, 물질적 측면에서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영역에서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임
 - 그리하여 발전은 호주 국민의 웰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호주의 경제구조와 성장, 그리고 환경의 측면으로 나뉘게 됨

-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입각하여 발전은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4가지 차원(Dimension)으로 구성됨
 - 개인(Individuals) 차원에서, 정책지표의 주요 영역은 건강(Health),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일(Work)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보조영역으로 문화

- 와 레저(Culture and leisure)를 포함
- 경제(economy) 차원에서, 주요 영역은 국민소득(National income),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 국부(National wealth), 주택(Housing), 생산성(Productivity) 등 5가지를 포함하며, 보조영역은 경쟁력과 개방(Competitiveness and openness),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포함
 - 환경(environment) 차원에서는 주요 영역만 존재하며, 자연환경(The natural landscape), 대기(The air and atmosphere), 강과 바다(Oceans and estuaries)의 3가지 영역을 포함
 -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삶(living together)의 차원에서, 주요 영역은 가족, 공동체, 사회적 통합(Family, community and social cohesion), 범죄(Crime), 민주주의, 거버넌스, 시민성(Democracy, governance and citizenship)의 세 가지를 포함하며, 보조영역에는 커뮤니케이션과 교통을 포함

[표 3-3] 호주 MAP의 지표분류체계에서 나타난 국가발전의 차원

	개인 (Individuals)	경제 (Economy)	환경 (Environment)	함께 하는 삶 (Living together)
주요 영역	건강 교육과 훈련 일	국민소득 경제적 어려움 국부 주택 생산성	자연환경 대기 강과 바다	가족, 공동체, 사회적 통합 범죄 민주주의, 거버넌스, 시민성
보조 영역	문화와 레저	경쟁력과 개방 인플레이션		커뮤니케이션 교통

□ 국가발전의 4가지 차원의 주요영역에서 핵심지표들을 제시

- 건강의 경우 신생아의 기대수명, 교육과 훈련의 경우 무학력자 비율, 일의 경우 실업률 등으로 제시
- 환경차원의 경우 다른 차원과 달리 하나의 주요 영역에 여러 가지 핵심지표들이 제시되고 있음
- 자연환경(The natural landscape)의 경우 생물학적 다양성(biodiversity), 내수(inland water), 토지(land) 등 세 가지로 나뉘어 핵심지표가 제시
- 대기(The air and atmosphere)의 경우에도 주요 도시지역에서의 공기의 질(air quality)과 온실가스 방출량으로 측정되는 대기(atmosphere)로 나뉘고 있음

[표 3-4] 호주 MAP의 주요 정책지표

Headline dimensions	Headline progress indicators	Supplementary progress indicators	Other indicators
Health	Life expectancy at birth	Proportion of people surviving to ages 25, 50 and 75 Infant mortality rate Avoidable deaths Incidence of all cancer Incidence of heart attacks Burden of disease	International life expectancy at birth Living with disability Causes of death
Education and training	People aged 25-64 with a vocational or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for those aged 15-19 Year 7/8 to Year 12 apparent retention rate Human capital stock Education participation rates and attainment levels for those aged 15-64 OECD literacy rates, science, reading and mathematics Indigenous to non-Indigenous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ttainment ratios Female students as a proportion of all students	International level of higher edu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for those aged 15-64 Level of highest non-school qualification for those aged 25-64
Work	Unemployment rate	Labour force underutilisation rate Proportion of people working Long-term unemployment rate Retrenchment rate Un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s	Casual employees People working part-time or longer hours (50 hours a week worked or more) Average hours per week, full-time workers
National income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Real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Real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per capita Re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per capita Net national saving as a proportion of GDP Real industry gross value added Real gross state income per capita Terms of trade Population in work	Selected measures of equivalised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national income: Gross National Inc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national income: GDP growth

Economic hardship	Average real equivalised weekly disposable income of households in the second and third deciles of the income distribution	Indicators of economic situation by household composition	
National wealth	Real national net worth per capita	Real national assets and liabilities per capita Real net capital stock per capita Economically demonstrated resources (minerals and energy) per capita Real net foreign debt Real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per capita Mean household net worth Mean value of selected household assets and liabilities	
Housing	No headline indicator	Investment in dwellings House price index	Households in dwellings requiring an additional bedroom
Productivity	Multifactor productivity	Labour productivity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as a proportion of GDP Investment in software as a proportion of GDP Managers and professionals as a proportion of total employment Proportion of businesses with web site or home page Hours worked and quality adjusted hours worked Proportion of businesses innovating	
The natural landscape	Threatened birds and mammals Annual area of land cleared Salinity, assets at risk in areas affected, or with a high potential to develop, salinity Water management areas, proportion where use exceeded 70% of sustainable yield	Trends in threatened species Mammalian extinctions Species-threatening invasive animals Proportion of ecosystems: area protected Weeds of national significance distribution Native forest area Net water use Total water storage capacity of large dams Water diversions: Murray-Darling Basin River condition(biota) index	Cattle and sheep numbers Natural and actual flows in the River Murray International comparison: Threatened bird species International comparison: Water abstraction per capita

<p>The air and atmosphere</p>	<p>Fine particle concentrations, days health standards exceeded, selected capital cities Net greenhouse gas emissions</p>	<p>Days when ozone concentrations exceeded guidelines, selected capital cities Highest one hour averages of SO₂, selected regional centres CO₂ emissions, net, per capita and per \$ GDP Australia's greenhouse gas emissions for selected sectors Carbon dioxide concentrations Consumption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p>	<p>International comparison: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p>
<p>Oceans and estuaries</p>	<p>No headline indicator</p>	<p>Fish stocks subject to overfishing Estuarine condition index Visitors to the Great Barrier Reef Number of reported oil spills</p>	
<p>Family, community and social cohesion</p>	<p>No headline indicator</p>	<p>Children without an employed parent Voluntary work Primary carers of elderly and disabled No participation in selected activities Proportion of children in lone mother families Children without an employed parent Suicide and drug-induced death rates (indicators in the Work dimension are also relevant)</p>	<p>Family type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ies Racism</p>
<p>Crime</p>	<p>Victims of personal crime Victims of household crimes</p>	<p>Homicide rate</p>	<p>Imprisonment rate</p>
<p>Democracy, governance, and citizenship</p>	<p>No headline indicator</p>	<p>Proportion of Federal parliamentarians who are women Proportion of eligible population enrolled to vote Voter turnout and informal votes cast Federal Parliamentary election candidates Volunteering rates for management, committee and coordination work Proportion of eligible overseas-born residents who are citizens Proportion of executive managers and board members of ASX200 companies who are women</p>	<p>Indigenous members of Federal parliaments and State and Territory legislative assemblies</p>

- MAP의 핵심지표는 투입이나 산출이 아닌 결과(outcome)에 초점
 - 예컨대 건강(Health)의 영역을 살펴보면, 호주국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기대수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식사습관, 운동, 흡연, 직업 등이 거론될 수 있음
 - 또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투입 자원으로 보건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측정할 수 있으며(투입의 측면), 과정의 측면에서 건강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수를 관찰할 수 있음
 - 그리고 보건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 등 성과매트릭스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지표들 중에서 호주인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과(outcome)에 대한 측정

- 4가지 차원의 17개 핵심지표들에 대한 체계화는 “지표모음(suite-of-indicators)” 방식에 의거
 - 이는 하나의 복합지수(composite index)를 만드는 방식과 대조적이며, 지표모음 방식은 하나의 복합지수를 만들어 호주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지 않음
 - 그러나 17개의 지표들은 독자들의 가치나 선호에 따라 국가의 발전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는 기능 수행

3. Essential Statistical Asset for Australia

1) 추진 배경

-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은 호주의 국가발전방향을 이끌고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인식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nation's most critical)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계 체제를 만들기로 함
 - ESA에 포함되는 통계들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성격을 가져야 하며 그 어떤 통계보다도 빨리 조사되고 작성될 수 있는 특권을 지님
 - ESA에 포함될 통계지표를 파악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뿐 아니라 시민단체, 통계청 등 데이터 사용자가 모두 참여하여 preliminary list를 작성함

- 위 통계들은 국가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쓰

이고, 국가의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수단(key measurement)이며, 지역적/입법적 요구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니만큼 그 중요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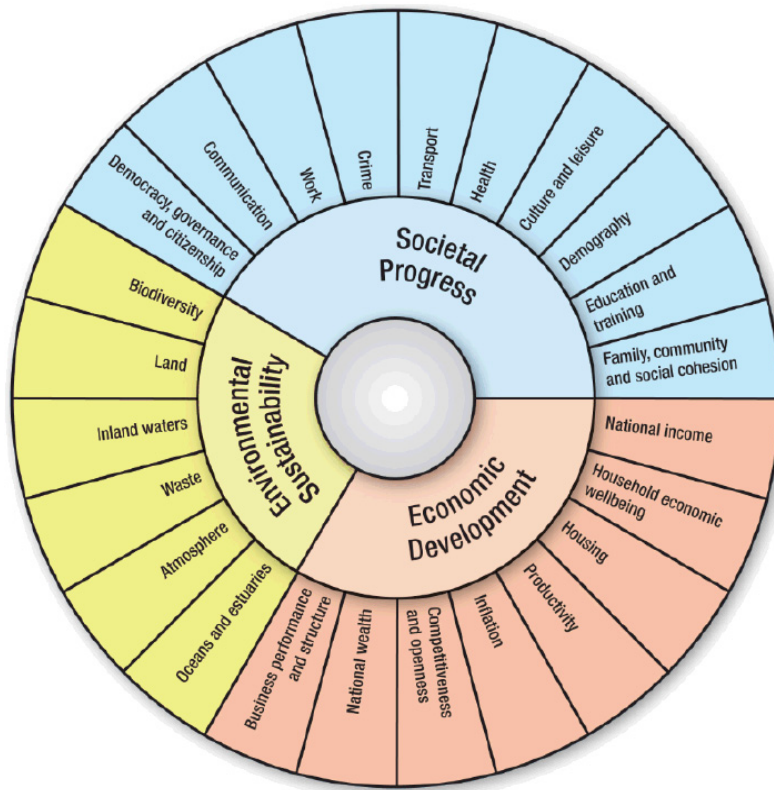
2) ESA의 최우선 목록(The Preliminary list of ESA)

- 목록에 포함되는 지표들의 내용을 결정짓는 세 가지 중요 기둥(pillar)은 경제적 발전(economic development), 친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그리고 사회발전(societal progress) 세 가지임
- ESA의 지표체계를 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5] 호주 ESA의 지표분류체계

Pillar	중범위 지표분류체계
Societal Progress	민주주의/정부와 시민성, 커뮤니케이션, 직장, 범죄, 교통, 건강, 문화와 레저, 인구, 교육과 훈련, 가족과 공동체/사회통합
Economic Development	사업 운영과 구조, 국가 부(welath), 경쟁성과 개방성, 인플레이션, 생산성, 주택, 가구 경제와 웰빙, 국가소득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개체 다양성, 토지, 수자원, 쓰레기, 대기, 바다와 산림

[그림 3-13] 호주 ESA의 조직적 구성틀



- 최우선 목록을 선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호주 통계청은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
 - ① 정부 정책과 서비스 공급에 적용되는 것,
 - ② 국가 성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key measurement)로 쓰이는 것,
 - ③ 입법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Domestic electoral or legislative requirement),
 - ④ 국제 공조와 의무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International reporting obligation and/or critical for international comparability)

- 목록을 범주화하는 방식은 네 가지로 각각 A, B, C, D로 칭하며, 위의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의 방식으로 범주화를 수행
 - Category A: Definitely in - Relate strongly to all four criteria;
 - Category B: Probably in - Relate to at least three criteria, and strongly to public policy;
 - Category C: Possibly in - Relate to at least three criteria, and strongly to at least one; and
 - Category D: Possibly out - Relate to at least two crite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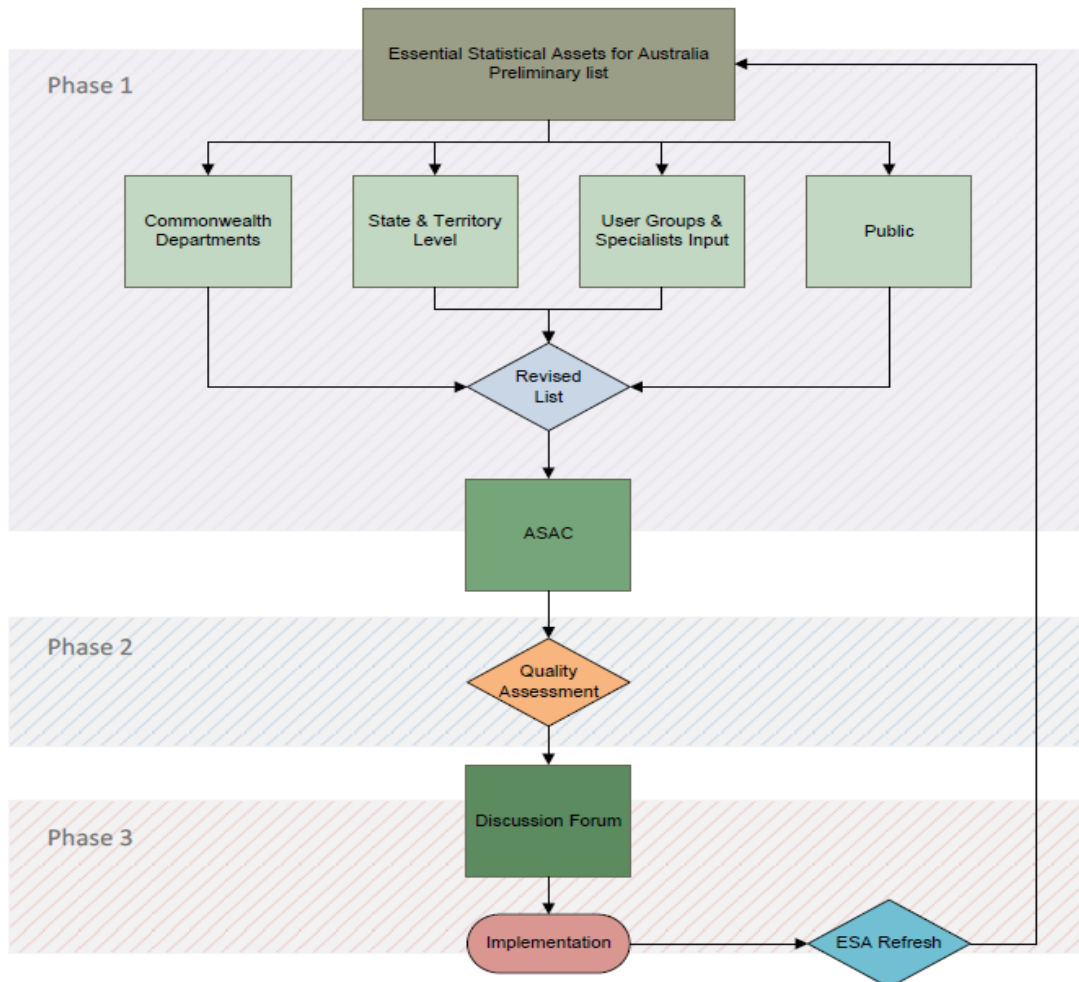
[표 3-6] 호주 ESA의 범주별 개별 정책지표 내용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ocietal Progress
Definitely 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임금(per week) -임금균형과 국제 투자 포지션 -소비자 물가인덱스(CPI) -GDP -가구소득과 소비 -생산성 요소들 -national balance she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공급과 사용 -온실가스 배출 -토지관련 통계들 -멸종위기 종수 -국립공원/해양국립공원의 크기 -수자원 공급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구수 -이민자수 -건강위험요소 관련 통계 -노동 통계 -사망률 및 기대수명 -장애인 관련 통계
Probably 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은행 재정관련 정보 -고용 수입과 고용시간 -수출입 상품 -금융 상품 가격 지표 -정부 재정 정보 -주택 정보 -임금, 노동, 가족 -생산자 인플레이션 -무역 가격 인덱스 -임금 가격 인덱스(W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관련 통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성 질병 통계 -범죄예방 비율 -진학, 진급율(학교) -인터넷 접근과 사용 -고등교육 참여율 -폭력과 관련한 개인적경험 -가구형태별 인구수 -건강 케어 서비스 -범죄 피해자 비율
Possibly 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관련 특징들 -R&D 지출 -자금 흐름 관련된 통계들 -무주택자 지원관련 지표 -주택가격인덱스(HPI) -사회적 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관련 통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민 관련 통계들 -주요서비스 접근성 -장애인 관련 통계 -유아 관련 통계 -화물 운송 관련 통계 -병원 서비스 관련 통계 -안전인식 관련 통계 -예방의학 관련 통계 -웰빙 관련 통계
Possibly 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허가 -사업체 변동 -사업 운영 관련 통계 -자본 흐름 -주택 자금 지원 -IT이용과 혁신 -Job vacan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관련 통계 -재활용 관련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활동 참여 -교육 성과 -학생들 문맹률 -성인 문맹률 -이민 특성 -직업학교 참여율/진학율 -제약/건강 관련 통계 -스포츠 참여율

3) ESA 구축 로드맵

- ESA 구축을 위한 로드맵은 다음의 세 가지 단계에 걸쳐 이루어짐
- Phase1(Identification of the list of ESA for Australia) : 현재 존재하지 않는 통계 중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을 뽑아냄(2012년 5월 ~ 2012년 10월)
 - Phase2(Quality Assessment) : 선정된 통계들을 목적, 적합성,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평가 및 검토(2013년~)
 - Phase3(Discussion forum to prioritise future investment :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포럼 개최하여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2013년 말~)

[그림 3-14] 호주 ESA 구축 로드맵



제4절 스위스의 국가정책지표체계

- 스위스의 국가정책지표체계와 관련해 Monet(Monitoring Nachhaltiger Entwicklung : Monitoring lasting development)을 살펴봄

1. 구축 배경 및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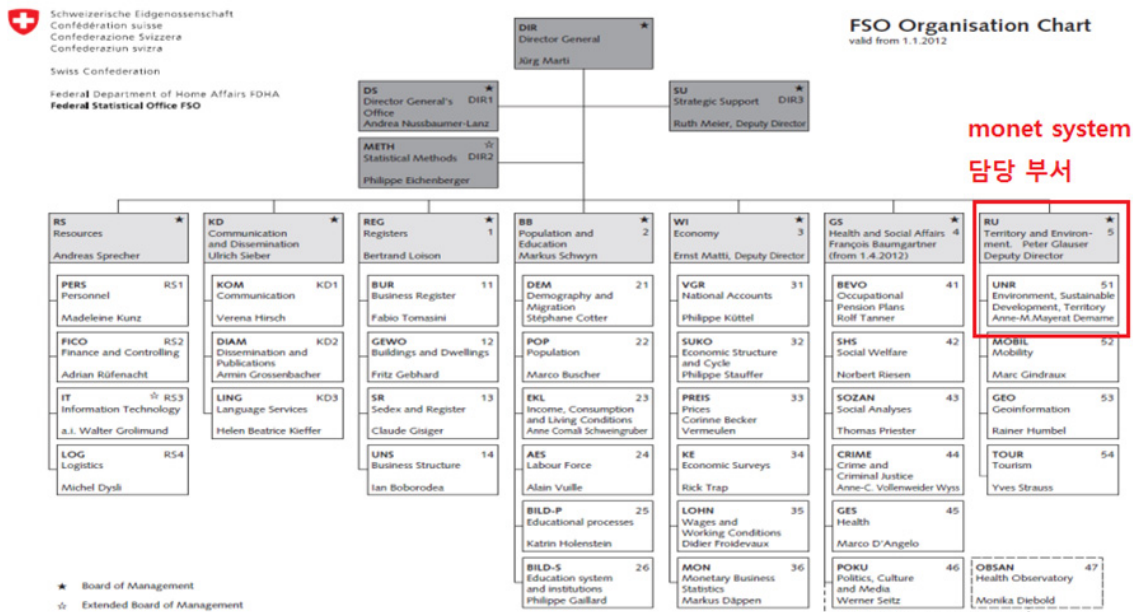
- 구축 배경

- 2002년 스위스 정부가 수립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따라, 스위스 통계청이 환경 및 국토 담당부처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를 정립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
- 국민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시민, 정부정책가, 시민리더, 비영리단체, 지역기관 등의 다양한 지표수요자를 대상으로 함

- 지표체계 운영 체계

- 스위스 통계청은 다루고 있는 통계 분야와 정책(사업) 업무에 따라 자원(Resources) 담당부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담당부서, 등록(Registers) 담당부서, 인구와 교육(Population and Education) 담당부서, 경제(Economy) 담당부서, 보건과 사회업무(Health and social Affairs) 담당부서, 국토와 환경(Territory and Environment) 담당부서로 구성
- Monet system은 스위스 통계청에서 국토와 환경(Territory and Environment) 담당부서가 관리하고 있음
- '국토와 환경(Territory and Environment) 담당부서'는 세부업무에 따라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국토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Territory) 담당부서', Mobility 담당부서, 지리학 정보(Geo information) 담당부서, 관광(Tourism) 담당부서로 구성

[그림 3-15] 스위스의 통계청 조직 및 MONET 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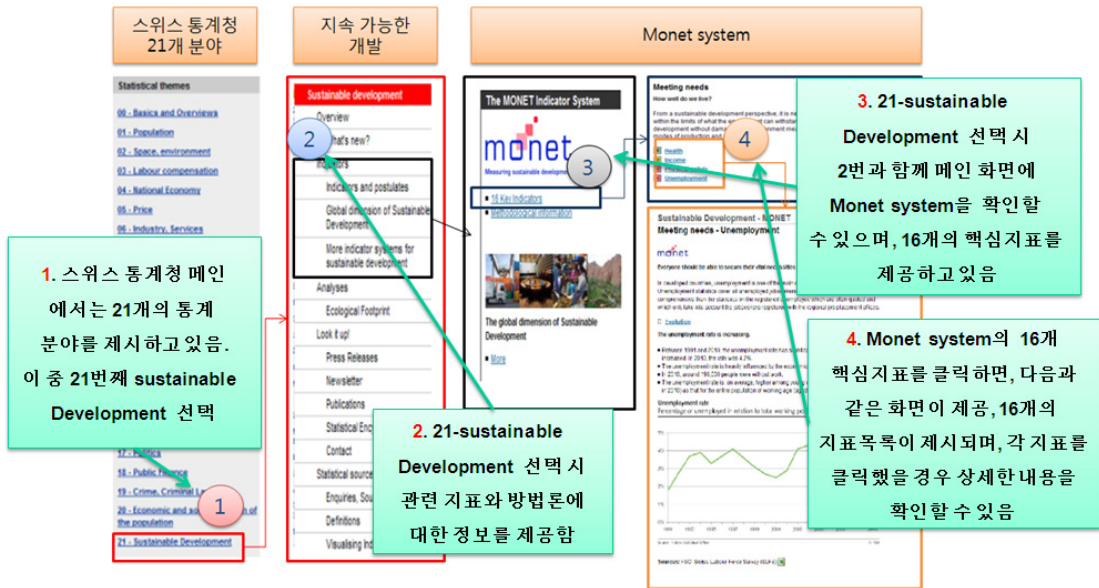


2. 정보화 시스템

□ 정보시스템의 구성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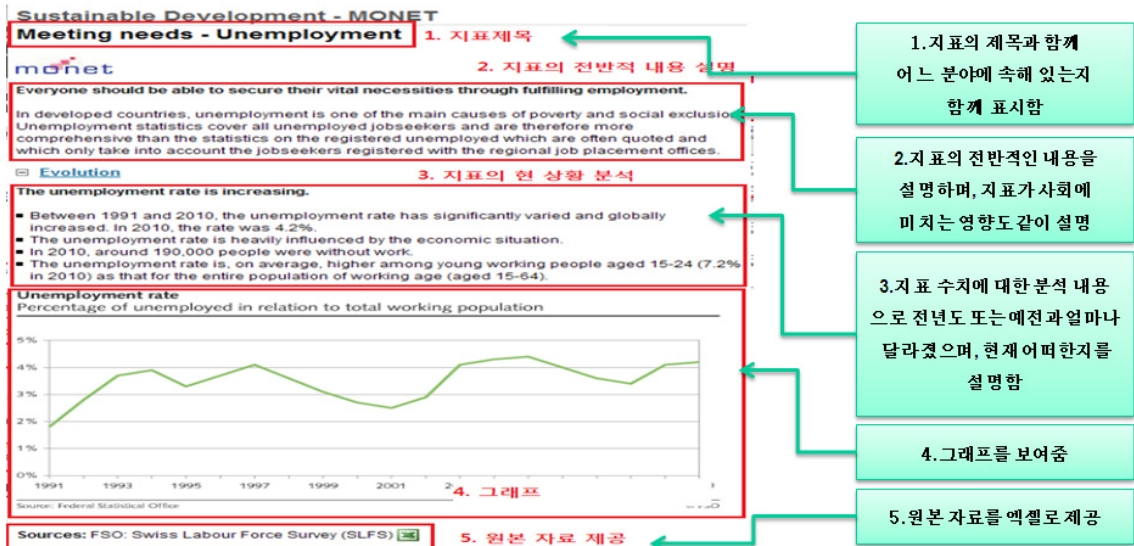
- 웹구성 프레임: 스위스 통계청 메인에서 접근 → 지속가능 선택시 관련지표와 방법론에 대한 정보 제공 → Monet에서 16개 핵심지표를 제공 → 각 지표 클릭 시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
- 각 지표별 내용 구성: 지표의 전반적 내용 설명, 지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설명, 지표의 현 상황분석(수치분석, 과거와의 비교분석도 포함), 지표의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증가·감소 등 현재 전개상황 아이콘 및 긍정·부정 등 평가사항 아이콘 표시), 원본자료 제공 등으로 구분

[그림 3-16] 스위스 MONET의 웹페이지 구성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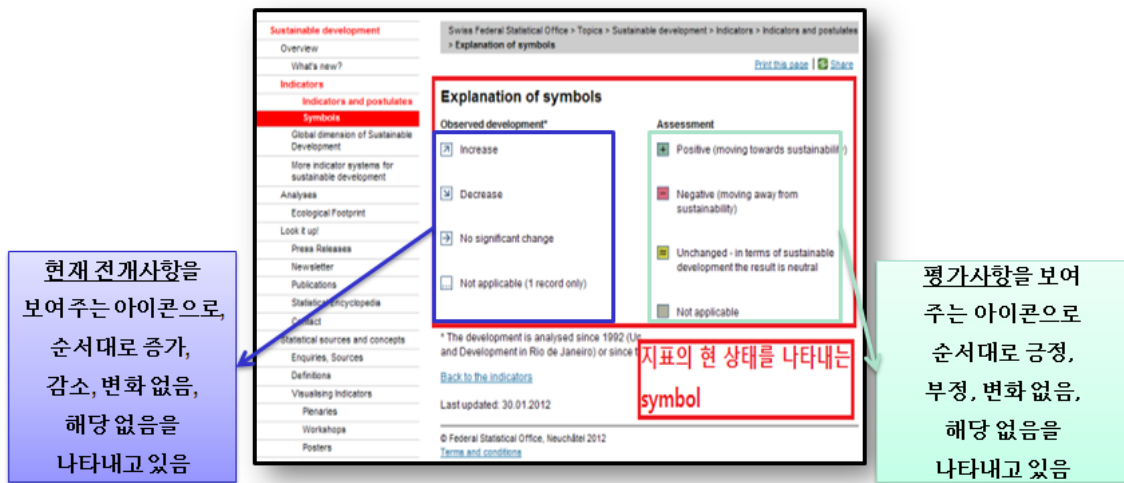
□ 각 지표별 내용 구성은 지표 제목, 지표의 전반적 내용설명, 지표의 현 상황분석, 지표의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프, 원본 자료 제공으로 구분되어 있음

[그림 3-17] 스위스 MONET 웹페이지에서의 지표제공방식(실업률 사례)



□ Monet system에서는 상징성을 띠는 아이콘을 통하여 지표의 내용을 확인
 - 상징을 띠는 아이콘은 각각 현재의 전개사향을 보여주는 아이콘(증가, 감소, 변화 없음, 해당 없음)과 평가사향을 보여주는 아이콘(긍정, 부정, 변화 없음, 해당 없음)이 있음

[그림 3-18] 스위스 MONET 웹사이트의 지표별 아이콘 범례



- 세계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에 대한 메인 화면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지표의 제목 앞의 아이콘으로 지표의 진행(전개)여부와 평가여부를 알 수 있음
 - 자원의 흐름과 경제적 흐름의 효과 측면에서 Material requirement abroad for imports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negative)이고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greenhouse gas emissions)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변화가 없으며, 가스 배출량도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9] 스위스 MONET 웹사이트의 지표별 아이콘 적용 사례



- 자료의 업데이트는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지표의 상세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각 주제별로 해당 지

표는 주제별로 추구하는 바에 맞추어 제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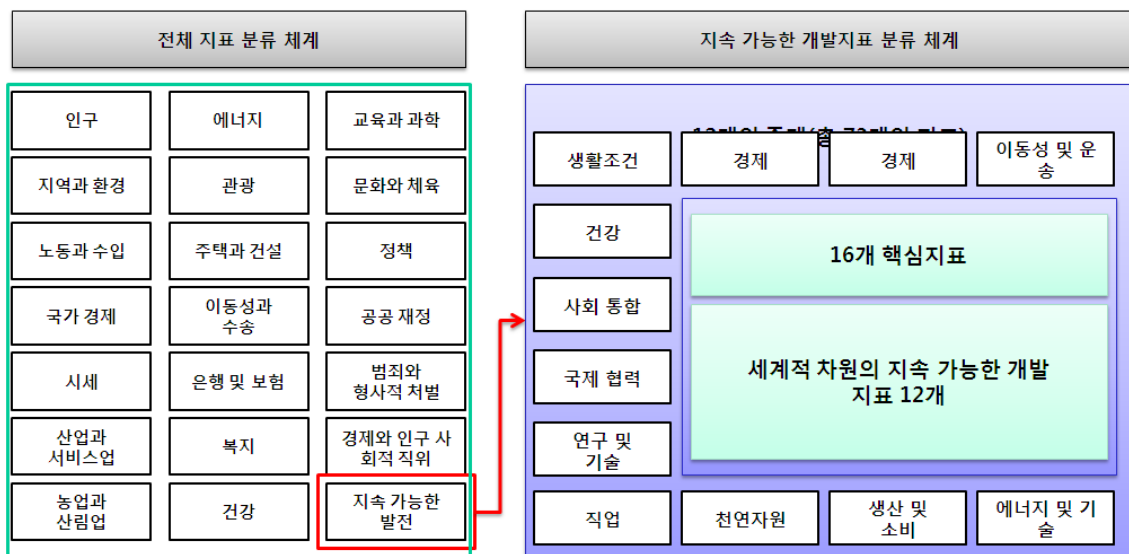
- Monet system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표를 업데이트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 시대에 맞추어 지표를 통합하거나 제거 또는 수정하고 있음

3. 지표분류체계

1) 지표분류체계의 개요

- 스위스 통계청에는 통계지표를 21개의 분야별로 분류하고 있음
 - 21개의 분야로는 인구, 에너지, 교육과 과학, 지역과 환경, 관광, 문화와 체육, 노동과 수입, 주택과 건설, 정책, 국가 경제, 이동성과 수송, 공공 재정, 시세, 은행 및 보험, 범죄와 형사적 처벌, 산업과 서비스업, 복지, 경제와 인구의 사회적 지위, 농업과 산림업, 건강,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음
- Monet system은 21개의 분야 중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음
- Monet system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 73개를 제공하고 있음
 - 73개의 지표에는 16개의 핵심지표와 세계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 12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표 73개는 총 12개의 주제로 나뉘고 그 주제에 맞추어 분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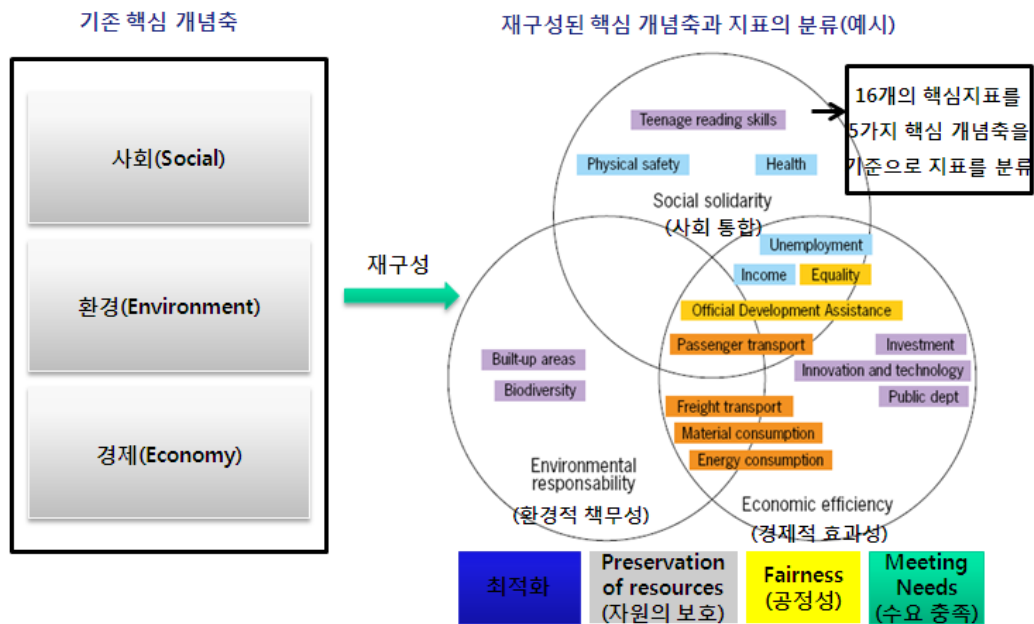
[그림 3-20] 스위스 MONET의 지표분류체계



2) 지표분류체계의 개념적 기초

- 스위스는 1992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개념축인 “사회적 집합체(Social),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를 연방정부 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회통합(Social solidarity), 환경적 책임성(Environmental responsibility),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으로 재구성함

[그림 3-21] 스위스 MONET의 핵심개념과 지표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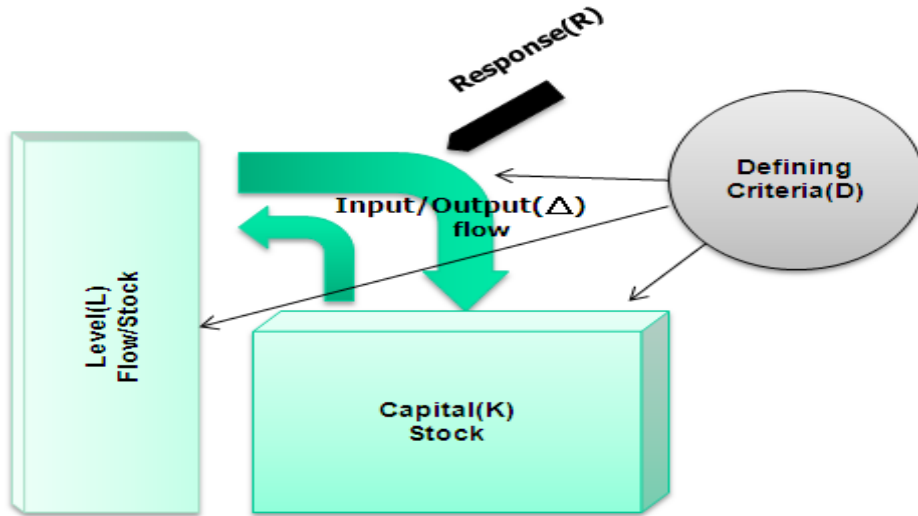


- 지속 가능한 발전지표는 ‘사회통합’, ‘환경적 책임성’, ‘경제적 효율성’의 영역에 따라 지표가 구축되면 “스위스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핵심 정책)이 무엇인지”에 따라 4가지 지표 구성체계로 분류됨

- ① 수요 충족(Meeting needs) : 스위스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
 -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충분한 소득이 지속될 때, 국민은 복지문제에 기여하게 되며,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짐
 - 보건, 소득(수입), 안전, 실업의 지표를 포함함
- ② 공정성(Fairness) : 자원이 얼마만큼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가?
 -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공정성이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교육, 소득, 보건, 공기청정과 같은 주요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함. 불평등과 빈곤은 국가와 국제사회의 주요문제로 발생함
 - 공적개발원조(ODA)와 남녀 임금 불평등의 지표를 포함함

- ③ 자원 보호(Preservation of resources) : 향후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자원을 소비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게 남겨 줄 수 있는 것은 현재 세대가 소비하고 남아 있는 환경 자원과 경제 및 사회자원임
 - 청소년의 독서능력, 공채의 등급, GDP비율의 투자, 생물의 다양성 등의 지표를 포함함
- ④ 최적화 : 스위스의 천연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비하고 있는가?
 - 지속 가능한 발전의 차원에서, 현 세대의 수요 수용능력이 제한된 환경에서 현재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환경파괴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해야 함
 - 화물수송, 여객수송, 에너지 소비 등에 관한 지표를 포함함
- Monet system의 주제와 지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어떤 주제(이슈)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어떤 지표가 설명되어야 하는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제 접근방법과 '모형의 체제, 인과관계, 과정(process)을 기록하기 위한 시도'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 접근방법의 연계에 초점을 둬
- Monet system의 지표구축은 'Stock-flow 모델'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다른 지표 시스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DPSIR(driving force - pressure - state - impact - response)와 매우 유사함
 - 'Stock-flow 모델'은 개인과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고, 그로 인해 산출되는 결과를 분석하며, 이러한 과정 하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근간이 됨
 - DPSIR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주제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와 유사한 'Stock-flow 모델'을 적용함

[그림 3-22] 스위스 MONET 지표분류체계의 stock-flow 모델



- stock-flow 모델에서 L(Level), C(Capital), Δ(Input/Output), D(Defining criteria), R(Responses)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7] 스위스 MONET 지표분류체계의 stock-flow 모델 적용

	Level (L)	Capital (C)	Input/Output (Δ)	Defining criteria (D)	Response (R)
의미 설명	개인 및 사회의 수요 충족의 범위	수요 충족을 위해 자원이 공급된 후의 현재 상황과 자원의 변화	수요 충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 공급과정의 흐름으로 인한 자본과 사용효과	투입 후 산출되는 과정의 효율성과 차별성	사회와 정치와 관련된 측정
stock or flow variable	Stock/flow	Stock	flow	Stock/flow	flow
상대 변수	yes	Yes	yes	yes	yes
절대 변수	no	Yes	yes	no	yes
모집단 또는 지역에 의한 분류	no	No	no	yes	no
DPSIR 모델과의 상관성	Driving force	State	Pressure/Impact	one	Response
다른 지표 유형과의 차이점	≠ 지속적인 자원의 소비(→Δ)	≠ 소비측정 변화(→Δ)	≠ Stock의 축적 또는 감소 소비측정의 변화(→C)	≠ 절대적 변수(→ Δ) ≠ 총인구의 평균(→L)	

- L(Level)은 개인과 사회의 수요(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의 범위
 - 대표적으로 사회적 유동성, 급식,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있음
 - L의 변수는 대부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로써 다른 변수와 관련이 있음
 - 1인당 생활공간, 1인당 GDP, 실업률 등

- C(Capital)은 특정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얼마나 공급(제공)하는지를 말함
 - L에서 설명되고 있는 수요(요구)를 자원을 활용하여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대표적으로 생산 설비, 사회기반시설, 환경 자원 또는 환경 지식 등이 있음
 - 식음료의 제공, 신문 유통의 수치와 같은 절대적 변수와 멸종위기 종의 비율, 1인당 병원 침대수와 같은 상대적 변수가 Capital에 해당함
 - 고정된 자원(Stock)의 시간에 따른 증가와 감소는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자원이 소비되지는 않음

- Δ (Input/Output)은 “Capital”로부터 유래되며, 투자나 오염물질의 배출을 통한 C의 가치상승과 가치하락을 L에서 설명되는 수요 충족과 접목시킴

- D(Defining criteria)에서 투입과 산출에 대한 평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율성과 Capital에서 공급하는 자원, 그리고 Level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의 차이와 관련이 있음
 -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본과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함
 - 환경적 효과성에 해당하는 예로는 이동수단들의 100km당 사용되는 연비임
 - 또한 여행의 빈도(비율)는 대중교통 사용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자동차와 촉매 변환기의 비율로도 알 수 있음
 - 효율성은 상대적인 변수로 표시되며 비율로써 정의됨

- R(Responses)은 사회적·정치적 방안으로써 투입과 산출의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정치체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반응하는지를 살펴봄
 - 입법 및 재정적 방안과 같은 노력으로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stock-flow 모델을 통해 주제에 맞는 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Mobility에서 매년 1인당 여행거리를 측정하는 지표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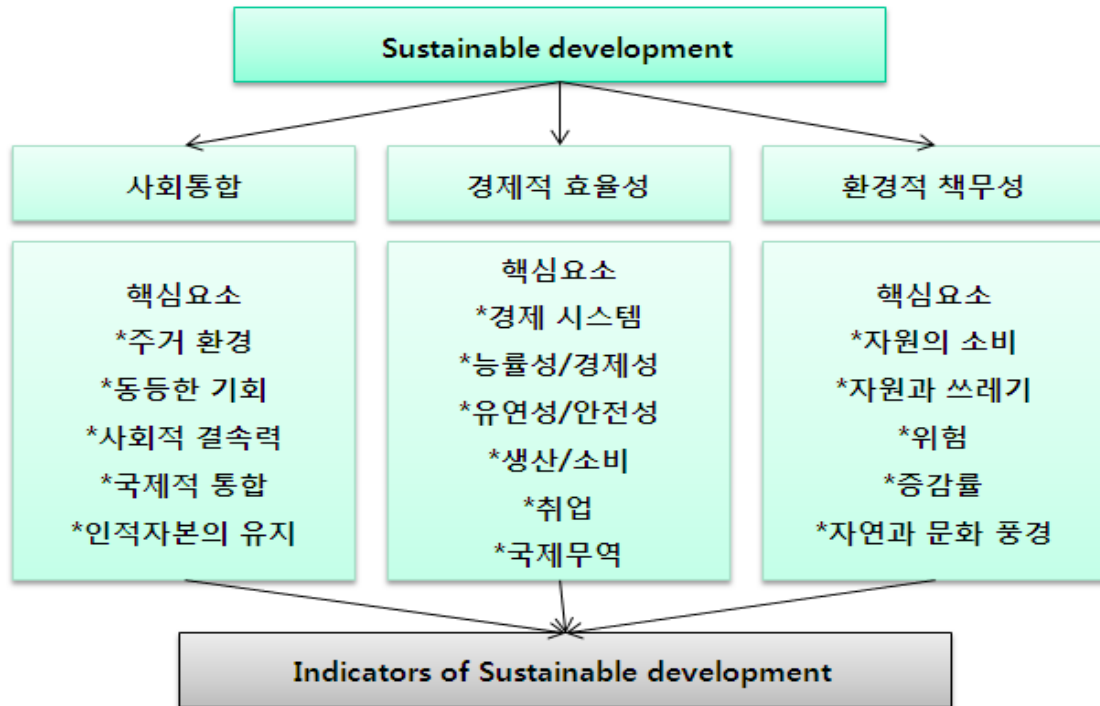
- 먼저 여행을 위해 공급되는 자본으로 개인의 승용차 수의 변화나 대중교통 기반 시설의 변화가 있으며,
- 여행을 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은 도로교통에서의 연료 소비량으로 나타남
- 그리고 1인당 여행거리를 살피는 기준으로는 교통수단의 선택과 100km 당 평균 연료가 얼마나 소비되느냐로 알 수 있음

[표 3-8] 스위스 MONET의 stock-flow 모델 적용을 통한 지표개발 사례

Indicator type Topic	Level (L) 수요 충족의 범위	Capital (C) 현황과 자원의 변화	Input/Output (Δ) 사용과 자본의 효과	Defining criteria (D) 효율성과 차별성: 기준 정립	Response (R) 사회와 정치와 관련된 조치
이동성	매년 1인당 여행 거리	개인의 승용차 수 대중교통 기반시설	1인당 도로 교통의 연료소비량	수단 선택(매년 1인당 대중교통을 통한 여행 거리) 100km당 평균 연료소비	과중한 교통 이용 요금의 세입
교육	기술의 측정 학교생활 평균 기대치	총 도서관의 공급 제3차 교육공간 수	매년 교습의 수 GDP지출에서 교육의 할당량	제 3차 교육을 수료한 여학생 비율 지역별 교육보조금 비교	교육 홍보를 위한 지출
경쟁력	1인당 GDP	학교생활 평균 기대치 특허의 수 GDP에서 외국 부채의 비율	투자 1년 당 신규 특허 신규 부채	지역별 GDP 노동 생산성 지역별 부채 비교	

- ‘Stock-Flow 모델’에 근거한 지표 구축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제(Topic)는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책무성”라는 핵심요소로 구성됨
- 사회통합은 주거환경, 동등한 기회, 사회적 결속력, 국제적 통합, 인적자본의 유지에 의해 정립됨
 - 경제적 효율성은 경제 시스템, 능률성/경제성, 유연성/안전성, 생산/소비, 취업, 국제무역에 의해 정립됨
 - 환경적 책무성은 자원의 소비, 자원과 쓰레기, 위험, 증감률, 자연과 문화풍경에 의해 정립됨

[그림 3-23] 지속가능발전 주제의 파악을 통한 스위스 MONET의 지표분류 개발



- 3개 핵심개념축의 연계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제를 구축
 - 보건(Health)의 주제 구축을 위해 사회통합의 2b와 환경적 책무성의 14a의 핵심 요소가 필요하며, 2b와 14a의 명제는 각각 ‘사람의 건강은 보호받아야 하며 증진되어야 한다’와 ‘자연적 장애는 생물다양성의 지속과 생태계의 질, 그리고 연속성 보장으로 상쇄되어진다’를 말함

[표 3-9] 지속가능발전 핵심개념과 연계된 지표분류체계 개발

Topic	Specific examples	POSTULAT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solida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Social security & material prosperity	Social insurance, assistance, income	2c	9a	
Health		2b		14a
Subjective living conditions	Contentment, happiness, well-being, social integration	3,a,b,6d	12	19
Housing	Living space, housing quality	2a		

[그림 3-24] 스위스 MONET의 핵심개념별 주요 정책명제

Postulates relating to social solidarity¹⁵

1	General principle	<p>a Each member of society has a right to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to the free development of their personality. Democracy, legal stability and cultural diversity are guaranteed.</p> <p>b The limits of individual development are set where the human dignity of other contemporary individuals or of future generations is compromised.</p>
2	Objective living conditions	<p>a The basic needs of the population must be met over the long term. Individuals should be permitted reasonable latitude in meeting material and non-material needs which extend beyond the basic needs.</p> <p>b Human health should be protected and promoted.</p> <p>c The dignity of human life requires freedom from poverty. Needy members of society shall benefit from solidarity in accordance with their needs. (㉔a)</p>
3	Subjective living conditions	<p>d The contentment and happines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shall be respected and promoted.</p> <p>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 must not be achieved at the cost of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individual.</p>
1	Fairness of distribution, equality of opportunity	<p>a No-one shall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whatever external or internal characteristic.</p> <p>b Each member of society should have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ies. Society should strive to achieve a more just distribution of resources.</p> <p>c The integration of disadvantaged groups of the population and regions into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life should be promoted.</p>
2	Strengthening of social cohesion	<p>d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proper functioning and survival ability of society are substantially based upon the solidarity of its members, exchange and understanding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should be promoted.</p> <p>e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hould be promoted.</p>
3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human capital	<p>4 Collective knowledge and sociocultural heritage should be maintained and increased over the long term.</p> <p>5 There should be no restriction to the flow of information. Free formation and expression of opinion must be guaranteed.</p> <p>6 The ability to absorb and process information should be promoted.</p> <p>7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particular should be able to live in an open, motivating and future-oriented environment.</p>

Postulates relating to economic efficiency

4	General principle	Economic activity shoul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meet the needs of the individual and of society. The economic framework should be shaped in such a manner that it promotes personal initiative, thus putting self-interest to the service of the common good and ensuring the welfare of the present and future population. (㉔p)
5	Economic system	<p>a Goods allocation should primarily be by free market means. If the market fails or in the case of goods primarily in the public interest (exempt goods), intervention in the free market is justified. (new)</p> <p>b Prices should reflect the scarcity of natural resources and sinks and include external costs. The "polluter pays" principle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with the exception of exempt goods). (㉔a, ㉔, ㉔a)</p> <p>c In the event of intervention in the market, market instruments should primarily be used. (㉔a)</p>
6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p>a The economic efficiency of a society and its productive, social and human capital must be at least maintained over time. The aim should not merely be to bring about an increase in quantity, but instead to ensure a constant improvement in quality. (㉔a, ㉔a)</p> <p>b The framework of the market system should be shaped in such a manner that innovation is encouraged and functional markets are maintained or improved. (㉔a) Competitiveness and locational quality should be maintained and promoted. (㉔a)</p> <p>c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which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㉔a)</p> <p>d Public-sector debt must be incurred onl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jeopardise the cap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individual and social needs. (new)</p>
7	Flexibility and stability	<p>a The framework of the market system should be shaped in such a manner that a long-term outlook is worthwhile and the social change necessary to adapt to future requirements is facilitated. (㉔a) New measures should be foreseeable. (㉔a)</p> <p>b The rapidity or slowness of changes in the framework of the economic system must not jeopardise social peace. (new)</p>
8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p>a Environmental impact and risks emanating from production plants should be minimised, while energy and material flows should be optimised. (new)</p> <p>b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should be as environmentally compatible and socially just as possible.</p> <p>c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both within and outside production plants (for example by mean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to ensure th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 as sustainable as possible. (㉔a).</p>
9	Employment	The economic system should ensure that anyone desiring gainful employment is able to find meaningful work to support themselves. (new)
10	International trade	<p>a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hould take account of the need for careful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promote technologies which ensure efficient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and social justice. (㉔a)</p> <p>b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hould assist in ensuring that one nation's individual and social needs are met without consequently compromising the ability of other n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new)</p>

10 International trade	<p>a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hould take account of the need for careful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promote technologies which ensure efficient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and social justice. (㉔a)</p> <p>b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hould assist in ensuring that one nation's individual and social needs are met without consequently compromising the ability of other n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new)</p>
------------------------	---

Postulates relating to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11 General principle	<p>a The natural foundations of life should be maintained in the long term and existing damage should be repaired. (㉔a)</p> <p>b The dynamic diversity of nature must be preserved. (㉔p)</p>
12 Consumption of resources	<p>a Consumption of renewable resources should be kept below the regeneration threshold (㉔a)</p> <p>b Consumption of non-renewable resources should be kept below the development potential for renewable resources¹⁰ (㉔a)</p>
13 Materials and wastes	<p>a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with degradable waste and emissions should be minimised. Contamination should on no account exceed the absorption capacity of the ecosystem. (㉔a)</p> <p>b The emission of non-degradable pollutants into the environment should be prevented wherever possible. (㉔a)</p>
14 Risks	<p>a Any impairment to nature should be offset such that biodiversity is maintained and the quality and continuity of the ecosystem are ensured. (㉔p)</p> <p>b Accident risks with wide-ranging impact upon humans and the biosphere are permissible only insofar as, even in the worst case scenario, they do not cause any permanent damage for a subsequent generation. (㉔)</p> <p>c Severe or irreversible environmental damage should be prevented, even if the scientific community is not absolutely certain of the actual risk. (Rio Declaration, a)</p>
15 Rate of change	The rate of anthropogenic intervention in nature must be in balance with the tempo of the natural processes of relevance to the environment's capacity to respond and regenerate. (㉔a)
16 Natural and agricultural landscape	Development of the natural habitat of humans must be guided by the concept of human rights. Human dignity requires a decent natural and agricultural landscape. (㉔p)

4. 개별 정책지표

□ Monet system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이 12개의 범주 안에 총 73개의 지표가 있음

living conditions	Equivalent disposable income Housing costs Life satisfaction Suicide rate Violent offences	work	Unemployment rate Youth unemployment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Professional position: difference by gender
health	Life expectancy in good health Mental wellbeing Health-relevant behavior: physical exercise Overweight Health expenditure	economic system	Investment to GDP ratio Labor productivity Level of public debt Fiscal revenue rate Environment-related taxes
social cohesion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Voluntary work Women in the National Council Reading skills of 15-year-olds: difference by soci-economic background Early school leavers: difference by citizenship	production and consumption	Total material requirement Material intensity Material requirement abroad for imports Consumption of organic products Fair trade Municipal waste Waste recycl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LDC Attitude towards development assistance Multilateral treaties Duty-free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Direct invest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Remittances by migrants	mobility and transport	Final energy consumption of transport Share of public transport in total passenger transport CO2 intensity of individual motorised transport Share of rail freight transport in total freight transport Intensity of freight transport Take-offs and landings Persons affected by noise
education and culture	Reading skills of 15-year-olds Early school leavers Participation in further education Regular use of a second national language Internet use: difference by income group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Own cultural activities	energy and climate	Final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Energy intensity Energy dependency Renewable energies Greenhouse gas emissions CO2 emissions CO2 intensity
research and technology	Patent applications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natural resources	Ecological footprint Settlement area Per-capita settlement area Landscape fragmentation Arable land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Ozone concentration Nitrate content in groundwater Phosphorus content in lakes Breeding bird populations Ecological quality of forests

- Monet system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73개의 지표 중 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16개 선별하여 Monet system에서 16개의 핵심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 16개 핵심 지표는 “스위스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핵심 정책) 인지”에 따른 4가지 정책지표로써 활용됨

[표 3-10] 스위스 MONET의 16개 핵심지표

	핵심지표	측정대상
필요 충족	건강	건강의 기대수명
	수입	가계소득
	육체적인 안전	범죄예방
	실업	실업률
공평성	공적개발원조(ODA)	공적개발원조(ODA)
	평등	남자와 여자의 임금 차이
자원 보전	청소년 독서력	15세의 독서력
	공채	공채의 등급
	투자	GDP 비율의 투자
	기술과 혁신	기술과 과학의 인적자원
	건물	1인당 건물 지역
	생물의 다양성	populations of breeding birds
Decoupling	화물수송	화물수송의 강도
	여객수송	여객수송의 교통수단 선택
	에너지 소비	물질의 강도
	물질의 소비 (원자재의 소비)	에너지 소비

- 글로벌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는 다른 나라와의 지속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원을 배분하여 사용하기 위한 지표로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음
- 글로벌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는 ‘자원과 경제적(재정적) 흐름의 영향(효과)은 어떠한가? (What is the impact of resource flows and financial flows?)’, ‘스위스 자국의 책임은?(Is Switzerland living up to its responsibility?)’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활용

[표 3-11] 스위스 MONET의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지표	측정대상
What is the impact of resource flows and financial flows?	material requirement abroad for imports	imports to Switzerland and indirect flows associated with imports
	온실가스 배출	교토 의정서의 목표 가치를 향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의존성	1차 에너지 사업자 및 총 에너지 수입액의 국내 생산 비중
	이주자에 의한 송금	스위스의 이민자로부터 원래 국가로의 공식적인 개인 송금
	개발도상국의 직접적인 투자	스위스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등급
	생태발자국	
Is Switzerland living up to its responsibility?	공적개발원조 (ODA)	총 국민소득 중 ODA의 비율(GNP 이전의)
	LDC에게로의 공적 개발 원조 (ODA)	총 국민 소득 중 최빈개도국(LDC)에게로의 공적개발원조의 비율
	개발원조로의 방식	ODA가 증가하는 것을 바라는 선거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
	다자간 조약	share of multilateral treaties that have come into force in Switzerland(in the tear treaty in concluded or in following year) in the total of treaties in one year
	면세 수입품	share of duty-free imports in the total value of all imported goods by countries income categories(gross national income)
	공정거래	sale of Max Havelaar-certified products in Switzerland's

제5절 기타 국가의 국가정책지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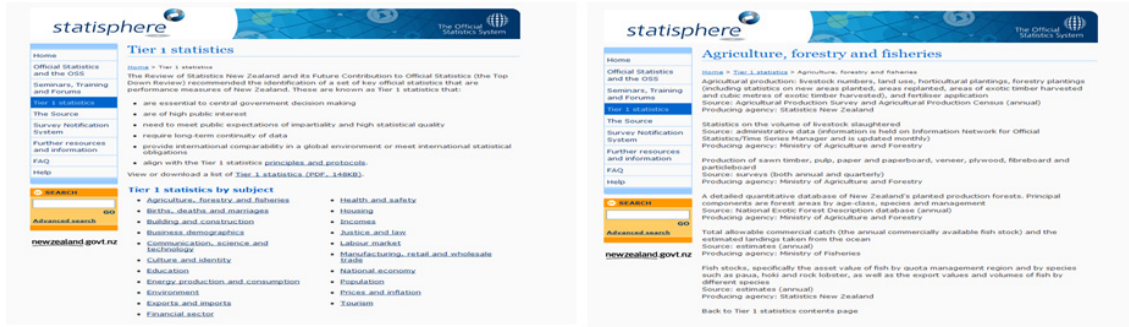
1.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통계자료를 계속하여 선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계청이 창설되었으며, 통계청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적합하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뉴질랜드 통계청은 통계지표 구축의 기반이 되는 가치로 leading, connecting, communicating, statistical excellence, integrity, confidentiality and data security의 기준을 제시
 - 뉴질랜드 통계청은 주로 the Statistics Act 1975에 의거하여 조직 및 운영되며, 기타 통계청의 활동과 관련된 법률로는 Privacy Act, Official Information Act 그리고 Archives Act가 있음
 - 뉴질랜드 통계청은 UN의 United Nations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에 명시된 조항들을 준수하여 운영되며 특히 economic statistics와 international statistics의 경우 국제적 기준과 조항들을 따르는 것이 의무화

- 2003년에 뉴질랜드 통계청은 뉴질랜드 정부와 공동으로 내놓은 Review of Statistics New Zealand and its Future Contribution to Official Statistics(the Top Down Review)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의 집행과 입안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 시스템이 필요함을 역설함
 - 곧 뉴질랜드 Cabinet Policy Committee에서 새로운 통계 지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내결하였고 2004년부터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되기 시작
 - 새로운 통계시스템의 가장 큰 목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통계의 포트폴리오(a portfolio of statistics, to be known as Tier1)를 만드는 것임
 - Tier1에 포함될 통계 지표들을 만드는 위원회에 뉴질랜드 농림부, 경제부, 교육부, 환경부, 보건부, 관광부, 법무부, 사회 발전부, 내무부, 노동부 그리고 뉴질랜드 통계청이 모두 참여함
 - Tier1에 포함되는 지표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뉴질랜드 국정운영의 지표로 쓰이는지, 중앙 정부 부처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해당 지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지, 특별히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지표인지, 장기간 연속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한지, 국제사회와 세계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이 있음

- Tier1이외에도 1975년 통계청 법률에 의해 구축되고 있는 통계청 공식 데이터와 지표들도 매우 중요하며 Tier1의 탄생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짐

[그림 3-25] 뉴질랜드 Tier1의 웹페이지



□ 2005년에 뉴질랜드 정부는 몇 가지 기준(뉴질랜드 국정운영의 지표로 쓰이는지, 중앙정부 부처의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지, 질높은 통계지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지, 장기간 연속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한지, 국제 사회와 세계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중요한 통계들을 Tier1으로 지정하였으며, Tier1으로 지정된 통계지표들은 정부의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통계적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함

□ Tier1의 경우 Population, Births/Deaths and Marriages, Culture and Identity, Education, Health and Safety, Housing, Justice and Law, Labour market, Incomes, National economy, General industry의 범주에 따라 세분화됨

[표 3-12] 뉴질랜드 Tier1의 지표분류체계와 개별정책지표

Main	Indicator
Population	Population counts and growth, Population by location, Components of population change, composition, Maori population, Estimated population for the total population and Maori population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 Ethnic population projections for Asian, European, Maori, and Pacific people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 Families and households, Citizenship approvals, Migration passenger arrivals and departures, Internal migration, Disabilities, Total usually resident population projections, Abortion statistics
Births, Deaths and Marriages	Births and birth rates, Total fertility rate, Deaths and deaths rates, Dissolutions statistics
Culture and Identity education	Statistics on the written use of Te Reo Maori as well as the interpretation and spoken use of the language
Health and Safety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and ethnicity, Suicide deaths by age, ethnicity, gender, Infant deaths, Morbidity, Injury statistics
Housing	Housing indicators, Dwelling types, Tenure of households, Number of usual residents by households, Real cos of housing
Justice and Law	Offences by type and region, Apprehensions by age, sex, ethnicity, type of offences, region, Voter turnout, Statistics on all criminal offences
Labour Market	Labour supply, Statistics on labour demand, Labour cost index, Work soppages, Statistics on continuos change in the labour market from a firm and individual level
Incomes	Statistics on average weekly income from regular sources, Statistics on average weekly income,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total annual income, Change in the amount of average gross income, Measure of the change in salary and wage rates, Welfare assistance by volume, value and type
National Economy	Gross Domestic Product, Capital stock, Crowm account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s time series, Balance of payment, Hedging statistics, Current accounts,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Prices/Inflation	Capital goods price index, Consumer price index, Farm expenses price index, Food price index, Labour cost index, Overseas trade price indexes, Producers price index
Environment	Environmental impact of economic activity
Exports and Imports	Overseas trade volume indexes Merchandise imports and exports Overseas cargo Imports and exports of the value of services
General Industr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nufacturing, Retail and Wholesale trade,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Tourism, Building and construction, Financial sector, Communi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usiness demographics

2. 일본

- 일본의 통계 시스템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메이지 정부에 의하여 1869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1871년 일본 통계청(Office of Statistics)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2001년 들어 정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일본 국내외적으로 높아져갔으며 통계청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름을 MIC(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로 바꾸고 정책 입안과 수행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국내외적인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을 재정비함
 - 2007년 이전까지 일본 통계청의 통계들은 1947년에 제정된 Old Statistics Law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그러나 이후 급변하고 있는 산업과 사회적 환경들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였고, 이를 위하여 새롭게 2007년에 Statistics Act가 개정됨
- 새롭게 개정된 Statistics Act는 ‘행정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statistics for administration)’, ‘사회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statistics as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society)’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
 - 공식통계가 사회의 중요한 정보자원이라는 점을 규정
 - 연차별 검토계획을 포함한 공식통계 개발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
 - 진행 중인 통계를 포함하여 모든 공식통계를 포괄
 - 조사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
 - 국가통계위원회의 신설

3. 프랑스

- 프랑스 통계청의 정식명칭인 INSEE는 국립통계경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로서,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 조정과 경제연구기관의 기능 수행
 - INSEE의 주요 업무는 국가차원의 통계조정, 통계생산, 경제·사회분석 및 연구, 정보배포, 교육, 국제통계협력

- 국가통계정보심의회(CNIS; Conseil National de l'information Statistique)
 - CNIS는 국가통계 자문기구로 의장은 경제부 장관이 맡으며, 사무국은 INSEE에 설치되어 있음.
 - CNIS의 위원은 약 100명 정도인데, 정부 주요부처의 장, 지역 및 전국적으로 선출된 위원,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및 고용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CNIS의 주요 업무는 국가통계자료의 생산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자문 제공, 국가통계정책 및 행정에 대한 자문 등.

- INSEE의 상급기관은 경제·재무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이나, 통계보고서의 출판 및 통계기술과 과학적 문제에 관해서는 엄격히 독립성 유지

- 프랑스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앙통계기관인 국립경제통계 연구소(INSEE)의 리더십이 강력하여 집중형적 성격이 강함
 - 대부분 프랑스 부처는 현장 내에 통계적 작업에 종사하는 각 통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INSEE의 업무는 그들의 작업을 조정하는 것
 - 이를 위한 사무국 역할은 통계 정보를 위한 국가위원회 (Conseil National de l'Information Statistique: CNIS)가 담당
 - 위원회는 통계 사무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공, 설문 조사에 대한 품질 기준 적용, 설문 조사 시 기밀성과 책임성 등에 관한 통계적 규정의 이행 감독

제6절 주요국 사례분석의 시사점

1. 주요국의 국가정책지표체계 사례분석의 종합적 분석

- 전반적으로 새로운 국가발전의 핵심지표로 포괄적이고 목적성을 반영한 국가정책 지표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기획·조정기능이 강화되는 경향

[표 3-13] 주요국 국가정책지표체계 사례분석 종합

	미국	영국	호주	스위스
지표체계 명칭	SUSA (the State of the USA)	UK SDI (UK Gover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MAP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ESA (Essential Statistical Asset for Australia)	MONET (Monitoring Nachhaltiger Entwicklung: Monitoring Lasting Development)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발전 방향에 따른 역량집중 - 국가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및 정부의 사결정 책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에 기초한 종합적 국가발전 상황 조망 - 지속가능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로 대표되는 기존 통계지표의 정책 대응성 한계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정책지표 요구 - 국가발전방향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지표의 정립 - 관련 정책의 진단 및 모니터링 기능 수행
구축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회계감사원과 국립과학원 주도 - 2007년 비영리단체로 추진체계 설립 - 2008년 해당 법률안 제출 후 2010년 법률안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최초 SDI 발간 - 지속적 수정을 통해 2007년 삶의 질에 대한 측정지표를 포함한 지표보완 - 2007년 국가통계 관련 법령 제정 및 2008년 통계당국(SA)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MAP 보고서 최초 발표 - 통계청 주도로 광범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2012년 새로운 정책지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ESA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통계청 주도로 국토부와 환경부가 참여하여 지표체계 구축
지표체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의 비정치적 독립기구를 통한 지표개발 및 관리 - 11개 핵심지표와 66개 당면과제 수록 - 인터랙티브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개 지표분류에 따른 126개 상세지표 포함 - 신호등 체계 및 각종 차트 등을 통한 시각화 강조 - 1400명에 달하는 범정부 통계책임자의 독립적 협의체로서 GSS 운영을 통한 기획·조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shboard 방식을 통한 현황분석 및 국가발전상태의 시각적 제시 - 주요영역 및 보조영역 등의 구분을 통한 위계적 지표체계 - 17개 핵심지표에 대해 지표모음의 방식에 따른 제공 - 통계자원관리의 개념에서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표발굴 및 진단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통계청의 국토환경 담당부서에서 해당 지표 전담 관리 - 사회통합, 환경적 책무성,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체계적 분류체계 - 전체 12개 범주에 대한 73개 지표 - 지표의 정책적 중요성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내용 제시
주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 강조 - 과학적이고 통계적 방식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의 검증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형 국가통계체계 한계 극복을 위한 기획·조정 기구의 강화 -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종합적 국가발전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통계지표의 한계 및 삶의 질에 대한 정책 요구 대응 - 시각적 효과가 우수한 지표제시방법 - 위계적 지표 구성을 통한 활용가능성 - 정책지표의 체계적 진단 및 발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의 고려 - 목적성과 체계성이 명확한 지표체계의 개발 - 지표분류체계의 정책 주제 및 정책자치 반영

2.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목적 및 기본방향

- 국가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고려한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필요
 - 국가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에 근거를 둔 국가정책지표체계가 부재하며, 이러한 국가정책지표체계는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과 함께 국가발전모형에 기반한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의 고려가 필요(미국의 SUSA, 호주의 MAP 등)
 - 국가정책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관련한 통계행정기관의 역할의 한계 극복을 위한 타 부처와의 협력(스위스의 MONET)이나 민간부문과의 협력(미국의 SUSA)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통계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주도를 통한 국가정책지표의 개발방향 모색과 관계 정부부처의 협력 유도(호주의 MAP) 방안을 고려 가능

- 경제지표의 높은 상대적 비중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영역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지표의 부족
 - 국가정책지표 가운데 경제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국가정책지표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경제지표를 고려할 수 있으나, 우리와 같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경제지표의 비중이 높지 않음
 - 사회나 환경, 문화, 복지와 같은 다양한 사회지표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지표의 한계가 발생

- 포괄적인 정부기관의 협력 및 지지를 통한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을 위한 리더십의 요구
 - e-나라지표의 단기적인 구축과정에서 최고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이 큰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협력과 지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될 수 있는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이 필요(미국의 SUSA)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주도적 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통계행정기관의 위상 및 역할의 제고 필요(영국의 GSS, 호주의 MAP)
 - 개별 부처 차원의 정책지표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분절적 자원 활용의 문제점 극복이 필요하며, 개별 부처차원의 정책지표체계와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순환 구조 확립 필요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대상 고객집단의 설정을 통한 지표체계의 목적 확립
 - 뉴질랜드의 Tier 1은 개별 정책지표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정책지표가 정책입안과정에서 사용될 성질의 것인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국제적 비교를 위한 목적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설정

- 스위스의 MONET도 유사한 방식으로 stock-flow 모델을 바탕으로 어떠한 유형의 지표인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표체계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정책지표체계가 관련 정책입안자와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 고객집단의 포괄성을 지표체계의 위계적 분류를 통해 해결(호주의 MAP, 스위스의 MONET)

□ 국정상황판(Dash Board)로서의 기능 수행

- 미국의 CitiStat이나 GMAP의 경우는 대표적인 Dash Board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주의 MAP이나 스위스의 MONET 역시 국가정책지표체계를 통해 현재 국정상황을 판단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
- 이를 위해 단순히 조회수가 높거나 인기가 많은 지표항목이 아닌 Dash Board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정책지표의 선정과 이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과 그에 따른 지표값의 제시를 상징적인 기호 등을 활용하여 용이하게 전달할 필요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방향성으로서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과 국가역량(State Capacity)

- 국가발전을 방향성을 설정할 경우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나, 국가발전모델에 따른 집약적인 국가정책지표의 관리 및 결과의 파급효과 등에 긍정적
- 국가역량의 파악을 국가정책지표체계의 방향성으로 설정할 경우 국가역량에 포함되는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지표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나, 범용적인 정책지표 운영에 따른 활용 가능성의 확대는 긍정적이며, 미시적 정책관리에 긍정적

□ 정책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지표의 활용

- CitiStat이나 GMAP은 정책지표의 성격을 넘어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해 가능하며, 정책지표의 활용방안으로서 정책평가체계와의 연계가 중요

3.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성 영역별 시사점

1) 거버넌스 체계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민간 부문의 참여
 - 미국의 SUSAN은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정책지표체계로 이해되며, 호주의 MAP이나 스위스의 MONET 역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집단을 통한 국가발전모델이나 중요지수의 개발 등을 수행
 - 국가통계체제에서 국가의 승인통계 및 통계품질기준에 따른 관리활동의 중요성이 높는데 비해, 국가정책지표체계에서는 해당지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과 소통, 참여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정책지표체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확대가 중요

- 국가통계체제에 비해 보다 집중화된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성
 -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로서 통계위원회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영국의 Statistics Authority 및 Government Statistics System의 설치 등도 이러한 배경에서 분산형 국가통계체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거버넌스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물론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설계와 함께 개별 정책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는 각 통계작성기관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은 인정

- 전문역량을 갖춘 통계행정기관의 주도적 역할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긴밀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할 주관기관으로서 통계청 등 통계행정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정책적 관리 역량보다는 통계적 관리역량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영국의 GSS에 대해서도 통계청인 ONS의 장이 의장을 맡게 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MONET의 설계 과정에서는 국토부나 환경부와 함께 통계청이 주관하여 정책모델 및 지표체계의 구축을 담당하게끔 하고 있음
 - 프랑스의 INSEE와 같이 경제부처 산하의 소속기관으로서 통계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2) 정보화 시스템

- Interactive system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확대
 - 기존의 국가통계체계에서 국가정책지표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필요
 - 미국의 SUSA의 경우도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표정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고 있으며, 개별 정책지표가 갖는 정책적 의미 및 향후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그래프 외의 다양한 시각적 도구 및 장치를 활용한 정책지표의 의미 전달
 - 시계열적 추세와 관련한 그래프의 제공 외에도 다양한 시각적 도구를 이용하여 해당 정책지표값이 의미하는 바를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며, 미국의 CitiStat의 경우 지리정보를 이용한 정책지표의 분석과 결과 제시를 통해 정책지표의 의미를 강조
 - 호주의 MAP이나 스위스의 MONET 역시 개별 통계지표값에 대한 정책적 의미 부여를 위해 특수한 시각적 장치 등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지표를 통한 현재 국정상황의 진단이나 점검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지표 간 연계를 통한 분석 기능의 강화
 - 개별 정책지표의 변화 추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지표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한 복합적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OLAP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유도 높은 분석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사용자가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분석시스템을 확대
 - 현재 국가통계포털의 경우에는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통계적 분석 기능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으나, e-나라지표에서는 이러한 통계적 분석 기능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함

3) 지표분류체계

- 국가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과 모델 개발을 통한 신규 분류체계의 확충
 - 국가정책분류체계는 해당 국가정책지표체계가 측정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으며, 국가발전 비전과 국가정책지표의 목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분류체계의 기본 모델로부터 출발

- 스위스의 MONET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지표 개발의 요구에 대응하여 기존의 정책방향으로서 사회통합, 환경책무, 경제적 효율성의 세 가지 기준과 연계한 정책지표 분류체계의 모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화된 하위 분류체계를 구성
- 미국의 SUSA와 같이 이러한 정책분류체계의 모형을 구성하는 것은 정부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 등을 통해 충분히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합의된 정책방향의 도출과 그에 따른 정책분류체계의 구축이 가능
- 정책지표 분류체계의 모형을 바탕으로 하향식 접근을 통해 하위 분류체계의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책분류 모형에서 고려하고 있는 전략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신규 분류체계의 확충이 필요

□ 정책영역에 대한 주제별 정책분류체계의 활용 및 분류체계와 지표 간 연계 강화

- 현재 e-나라지표를 통한 정책지표의 분류가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해외 사례를 통한 분석에서는 주제별 분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분야별 분류가 부처별 분류와 유사해 지표의 작성 및 관리 등이 용이할 수 있는데 비해, 주제별 분류는 해당 정책지표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체감도 및 적실성이 높은 분류 기준을 제시
- 일반적인 통계지표의 분류체계가 분야별로 제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책지표의 경우 주제별 분류의 적합성이 높은 편
- 정책분류체계를 주제별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 분류체계에 속하는 개별 지표와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장점

□ 경제분야 외의 다양한 사회분야의 포함 및 경제적 이슈와의 연계를 통한 분류체계 구성

- 경제지표가 가장 보편적이며 그 범위가 넓지만 경제분야 외의 다양한 사회분야 및 이슈를 포함한 분류체계를 구성하며, 미국의 SUSA나 스위스의 MONET과 같이 경제적 이슈가 연계된 분류체계 구성을 통해 오히려 경제 부문이 아닌 연계된 다른 사회 분야를 정책분류체계에서 고려 가능(ex. 노령자의 소득수준: 경제 부문이 아닌 노령화 부문으로 포함)

4) 개별 국가정책지표

- 동일한 지표분류체계에서도 지표간의 위계를 적절히 구성함으로써 국가정책지표 체계의 활용가능성을 확대
 - 각 지표분류에 있어서 대표지표와 일반지표, 부속지표 등의 구분을 통해 개별 지표분류 내에서도 중요도나 대표성에 따라 우선순위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표지표만 한정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모든 관련 지표가 포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따른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충족 가능
 - 호주의 MAP이나 스위스의 MONET이 이러한 방식의 지표 간 위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Tier 1은 직접적으로 정책지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표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의 제시와 지표목록을 제시

- 정책지표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고려하여, 지표값 외에도 해당 지표에 대한 개념과 측정도구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
 - 정책지표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단순한 지표값 외에도 해당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측정도구들에 대한 내용이 지표로 포함
 - 개별 정책지표의 개발이 단순히 지표값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표가 원래 의도한 대상 개념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한 정보를 지표제공과정에서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며, 미국의 SUSANA는 민간의 다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타당성 검증 과정이 지표체계에 반영되고 있음

- 현안 중심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지표의 개발
 - 정책분류체계는 상당히 기능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 간이나 기존의 정책지표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정책분류에 포함되는 정책지표의 체감도를 높이는 부분은 지표개발의 관건으로 작용
 - 서울시의 생활지표 개발은 이러한 체감도 높은 정책지표의 개발과 관련해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각 국가별 정책지표의 구체적 항목을 살펴볼 때도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이해 가능한 정책지표의 비중이 높은 편
 - 체감도가 높은 정책지표 개발을 위해 신규 개발과 함께 기존지표의 복합적 활용 등의 방안도 고려 가능

제4장

국가정책지표체계 종합적 구축방향



제4장 국가정책지표체계 종합적 구축방향

제1절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의 방향설정

1. 현행 국가정책지표체계의 문제점

- 기존 통계지표들이 갖고 있는 포괄범위(coverage)의 한계로 인해 최근 대두되는 각종 정책요구들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곤란
 - 기존의 국가통계지표체계는 국가승인통계라는 한정적 범위로 인해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정적
 - 관련 분야의 통계지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해당 정책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 특정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음
 - 예컨대, 최근의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정책 관련 정책통계들이 기존 통계DB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거나 정책과정에 활용될 만큼 충분치 못한 수준이며, 국정점검지표체계로서 e-나라지표에서는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어떠한 지표도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
 - 기존 통계지표의 포괄범위 및 정책 대응성의 한계는 결과적으로 통계지표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

- 개별 정책지표의 작성·관리·활용 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타당성, 신뢰성, 적시성의 문제 제기
 - 국가승인통계와 달리 주로 각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별 정책지표들에 대한 작성 및 관리 기준과 방식이 일관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표 간 측정값의 불일치나 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통계지표체계에서는 자료 작성과 공개 및 활용 시점의 차이로 인해, 현재 쟁점이 되는 정책의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시성의 한계 지적

-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표의 기획 및 발굴 노력보다 공급자 중심의 편의적인 통계지표 개발 및 관리
 - 분산형 국가통계체계 하에서 각 부처 차원의 필요에 따라 통계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적인 목적이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지표 기획·발굴 노력은 부재

- 임기응변식의 체계적이지 못한 통계지표 개발 및 관리에 따른 중복적인 조사 및 통계지표 작성은 과도한 행정비용의 발생과 함께 사회적 부담의 증대로 연결
-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체감형 정책지표를 개발하기 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작성·관리가 용이한 단순 현황 지표 위주로 통계지표체계가 구성

□ 기존의 통계지표 중심의 관리에서는 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활용도가 미흡

- 기존의 국가통계지표체계는 각 부처나 기관에서 작성한 국가승인통계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요했으며, 개별 통계지표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목적이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
- 분산화된 국가통계체계의 특징으로 인해 통계지표의 활용 역시 세부 정책 중심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통계지표를 활용한 국가정책방향에 대한 홍보와 소통이 상대적으로 미흡
- 국정점검지표체계로서 e-나라지표는 현황 점검에 초점이 맞추어져 적극적인 정책수요의 확인 및 체계적 대응에 한계를 보임

□ 정책지표의 개발 및 작성, 관리, 분석 등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및 공유 노력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데 한계

- 국가통계위원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지표를 개발하고 작성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의 참여가 부족
- 이로 인해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지표의 개발의 문제와 함께 작성된 정책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한 불신, 결과 해석 과정에서의 논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 현재에도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수요조사 및 이용자 협의체 그룹 등을 통해 통계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나,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국민의 참여 및 공유 노력이 필요

□ 정책지표 분류체계 및 개별 정책지표의 진단 및 발굴, 관리, 폐기 등에 있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

- 현행 국가통계체계는 별다른 기속력 없이 개별 정부부처별로 통계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국가정책지표 분류 및 개별 정책지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함

- 정책 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정책 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표분류 및 정책지표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 기존 법령에 따라 e-나라지표 및 국가승인통계의 운영관리방안이 규정되고 있으나, 지표의 기획 및 발굴 등을 포함하여 국가정책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책임 권한은 부재한 상황

2.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 국가통계정보시스템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통계정보시스템의 경우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함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발전 전략을 확인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e-나라지표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은 2006년에 최초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시스템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강조

[그림 4-1] 국가통계정보시스템의 발전과정과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의 필요성



- 기존의 정책지표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
- 첫째, 정책지표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정책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 국가정책지표가 갖고 있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정책지표의 목적성의 강화를 의미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에 대응되는 정책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지표체계의 정책 포괄범위를 확대할 필요
 - 일반적인 정책영역의 분류를 넘어 현안 쟁점들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지표의 개발 및 관리 필요

- 둘째,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참여를 확대
 - 정부 정책에 대한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정부 내 정책결정자나 관계자 외에 일반 국민들의 정책지표 수요에 대한 반영 필요
 - 정책지표 작성 및 관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정책지표의 결과값이 갖는 정책적 의미에 대해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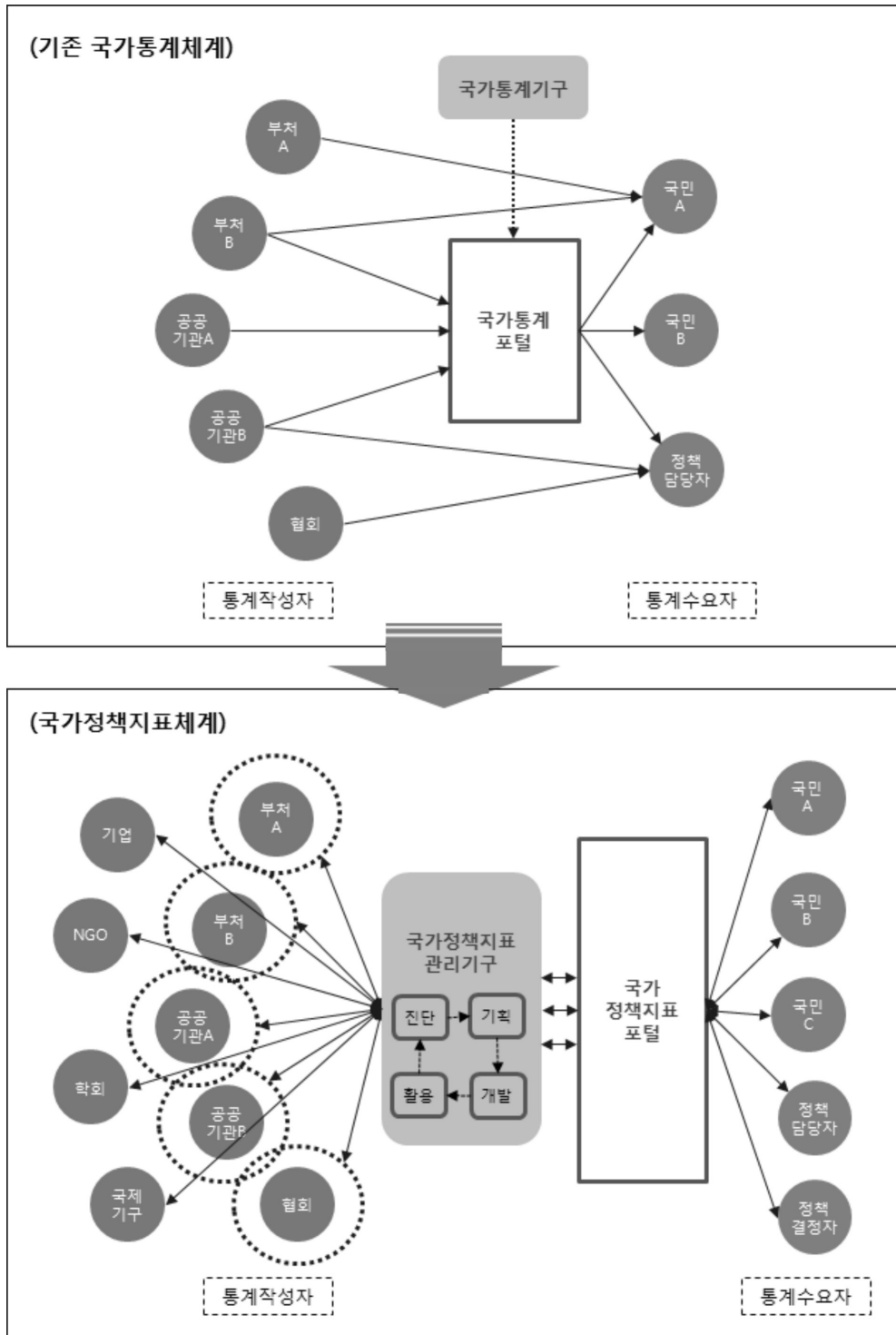
- 셋째, 분산형 통계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효율성 제고
 - 국가통계기관 외에 각 통계작성기관 및 관계집단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책지표 관리 효율성 제고
 - 통계청의 정책지표 기획·발굴 및 진단 활동과 개별 통계작성기관의 정책지표 작성 및 관리 활동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필요
 - 개별 정책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과 관련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

3.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청사진

- 앞서 제시된 대응전략을 기초로 하여 이전의 국가통계지표체계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음
 - e-나라지표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국가통계지표체계에서는 정책지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기관도 일부 정부부처에 한정적이었으며, 이들이 스스로 제공한 일부 정책지표에 대해서만 통계포탈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급
 - 이와 함께 개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는 각각 별도의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시민이나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파편화된 모습을 보이며, 이에 대해 국가통계기구의 적극적인 기획 및 조정 기능이 부재
 -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에서는 승인통계 중심의 한정된 통계지표 범위를 벗어나 현재의 정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표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포괄적으로 수집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외에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 학회, 국제기구 등을 통해 정책지표의 커버리지를 확대
 - 국가정책지표 관리기구를 통해 정책지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며, 정책지표의 진단-기획-개발-활용의 과정이 선순환 구조로 진행되며, 국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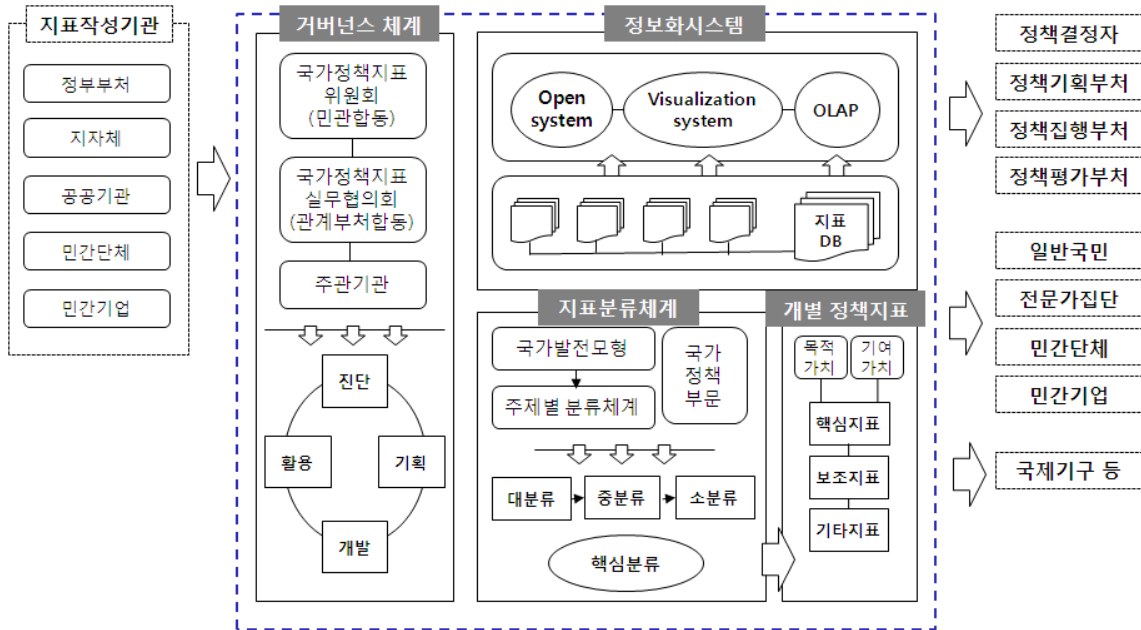
지표 관리기구가 국가정책지표포털을 통해 정책지표 수요자 및 정책지표 작성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표관리 노력에 반영

[그림 4-2]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로의 전환



-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는 거버넌스 체계와 정보화 시스템, 지표분류체계, 개별 정책지표의 네 가지 하위체계로 구성되며, 각각의 하위체계는 현행 국가정책지표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을 반영

[그림 4-3]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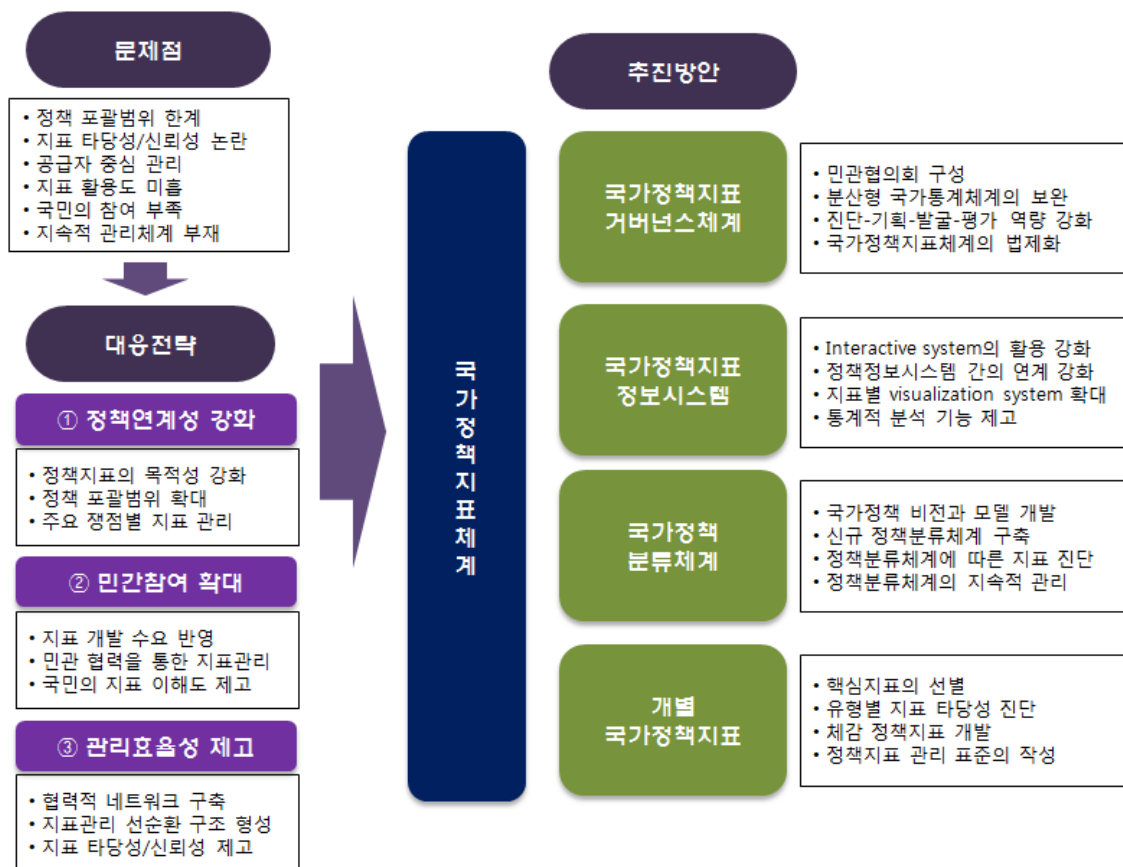


-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기존에 고려되지 못한 신규 정책영역의 발굴 및 정책 우선순위 검토를 통한 현실 적합성 제고와 정책 수요 대응성 확대
 - 민간부문의 참여 및 정책지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공공정책에 대한 알 권리 및 민주성 강화
 - 대표성이 높은 국가정책지표의 발굴 및 관리, 활용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집행, 평가 과정의 타당성 제고
 - 통계청과 각 정부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자원 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극대화
 - 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의 포괄범위 확대 및 다양한 분석기법의 적용을 통한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정보의 제공

제2절 영역별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향

- 다음의 네 가지 하위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정책지표체계를 구상할 수 있으며, 각 하위체계의 개략적인 구축방향을 추진방안의 형태로 제시

[그림 4-4]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



1.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 국가정책지표는 특정 정부부처나 혹은 정부부문에서만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통한 지표 개발 방향의 설정, 구체적인 지표의 개발, 지표 관리 및 활용의 결정 등을 수행
- 국가정책지표체계에서는 해당 지표에 대한 민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통, 참여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의 목적에서도 민간부문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확대가 중요

- 현재 국가통계위원회와 달리 정책결정기구와 함께 실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확보가 필요하며,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역할 수행
- 국가통계체계에 비해 보다 집중화된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성을 통해 분산형 국가통계체계의 한계점을 보완
 - 민관협의회를 통한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조직적 관리와 함께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의 실무적인 조정·관리 기능의 강화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네트워크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
 - 새롭게 구성될 민관협의회의 위상 및 역할 범위 설정과 함께 통계청의 조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진단-기획-발굴-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적자원의 확대
 - 전면적인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새롭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지표를 진단하여 발굴하는 부분
 - 통계청은 이미 2010년부터 정책에 필요한 통계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정책분야별 필요통계 진단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국가정책지표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진단사업의 범위 및 수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조직 및 인적자원의 확대 필요
- 국가정책지표체계 운영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의 추진
 - 현행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인 'e-나라지표'에 대해서도 2006년 6월 대통령 훈령으로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미국의 SUSA의 경우에도 'The Key National Indicators Act'의 제정을 수행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경우 다양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역할 범위 설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2. 국가정책지표 정보시스템

- 상호작용적 시스템(interactive System)의 활용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확대
 - 기존의 포털 중심의 web1.0에서 진화된 차세대 web2.0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정책지표와 관련한 정보나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
 - SNS 서비스의 확대 경향을 반영하여 국민의 의견 제시 및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

- 개별 통계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 제고 및 범위 확대
 - 일차적으로 현재 'e-나라지표' 시스템에 축적된 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정책지표체계의 포괄범위 확대와 정책지표의 신뢰성 및 활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별 부처 및 기관 단위의 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연계 시스템 구성
 - 시스템 간 접속링크 공유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단계별 접근 필요

-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별 정책지표의 결과 구현에 있어 시각화 시스템(visualization system)을 고도화
 - 통계표와 단순 시계열 중심의 정책지표 제공 수준을 넘어 다양한 시각적 도구를 이용하여 해당 정책지표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시각화 시스템 및 정책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에 대한 시각적 구현 방안 개발·적용

-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책지표 간의 상호 연계분석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계적 분석 기능의 추가
 - 개별 정책지표 내에서의 변화 추이 및 분석범위 조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지표 간의 상호 연계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을 통한 통계분석 기능 추가
 - 단계적으로 통계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가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OLAP 시스템을 개발·적용

3.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국가정책 비전 및 모델에 대한 개발 및 사회적 합의의 형성
 - 일반 통계지표와 달리 국가정책지표의 경우 윤리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국가정책의 비전 및 모델을 수립
 - 일차적으로 기존에 제시된 국가정책 비전 및 글로벌 동향을 고려한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고, 민관협의회 및 국가통계위원회, 실무협의체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지표체계 설계방향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추진

- 개별 국가정책지표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분류체계를 구축하며, 국가정책 비전 및 모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주요국의 사례분석, 기존 국가정책지표 구축 현황 등에 근거
 - 국가정책 비전 및 모델에 기초하여 국가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정책부문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하위 영역의 설정 등을 통해 적절한 정책분류체계 구축
 - 정부의 기능별 분류를 중심으로 한 기존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정부의 정책활동에 따른 주제별 분류체계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의 체감도 및 적실성을 제고

- 새롭게 구축된 정책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현행 국가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 상의 지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지표 발굴 및 통합·조정, 폐지 등을 위한 계획안 마련
 - 기존의 기능별 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를 신규 정책분류체계에 따라 배치하여 현행 국가정책지표체계에서 정책지표의 부족과 과잉 영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작성
 - 정책분류별 우선순위의 확인을 통한 차등적 접근방식 적용

- 주기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정책분류체계의 적실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 및 평가기준의 마련과 실질적인 관리활동의 수행
 - 5년 주기로 현행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적실성을 진단·평가하며, 이를 위한 분류체계의 진단·평가 기준 및 도구를 마련
 - 주기별로 분류체계 진단·평가 및 개선을 위한 관련 활동 수행

4. 개별 국가정책지표

- 국가정책지표로서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선별하고 이를 통한 현재 국정운영 방향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
 - 포괄적인 국가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지표를 분야별로 선별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홍보·확산 수행
 - 핵심 정책지표의 선정 과정에서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관의 합의 및 지속적인 타당성 검증 작업 수행

- 각 정책지표분류 유형별로 전문 민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개별 정책지표의 주기적인 타당성 진단 및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위계적 지표체계 구성
 -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에 따른 각 유형별 정책지표들에 대해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실무자, 일반 국민들을 포함하여 주기적인 타당성 진단 작업을 실시하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
 - 개별 정책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지표분석 및 해석을 통해 정책적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

- 개별 정책지표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체감 정책지표를 개발하여 별도로 관리·확산하여 국민이 정책 이해도를 제고
 - 개별 정책유형별로 타당성이 높은 정책지표의 개발 및 관리와 함께 별도 작업으로서 정책체감지표를 개발
 - 체감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지표체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

- 개별 정책지표 작성기관이 공유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정책지표 개발 및 관리, 활용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교육
 - 일반 통계자료의 관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차별화된 국가정책지표의 개발 및 관리, 활용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교육
 - 국가정책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관리 및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지표 점검

제5장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방안



제5장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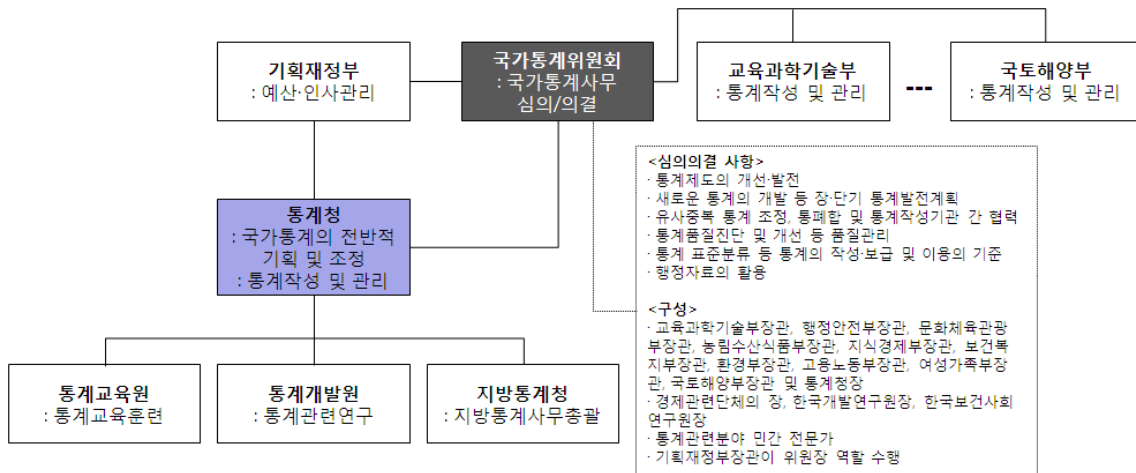
제1절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의 이론적 접근

1. 현행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및 쟁점 진단

1) 현행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방안 검토에 앞서, 현재 국가통계체계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유관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할 필요

[그림 5-1] 우리나라의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 현황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국가통계사무와 관련, 예산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를 총괄
- 또한, 기재부 주요경제지표, 재정통계, 국제업무통계, 국제경쟁력통계를 생산
- 국가통계사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3조(기획재정부) 9항에서 규정
-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함

□ 국가통계위원회

- 국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
- 1962년 제정된 동계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당시 경제기획원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출범
- 1990년 통계청의 출범과 함께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상 변화
- 2008년 12월, 통계법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신설
- 통계법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에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명시
-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새로운 통계의 개발 등 장·단기 통계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 등을 수행
- 통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통계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제관련 단체의 장,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통계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통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정책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품질분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구성

□ 통계청

-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통계조정기관인 통계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현재(2012년 6월) 통계법 제 18조 및 제 20조에 의해 승인받은 통계는 총 858종으로 그 중 통계청은 총 55종의 통계를 작성
- 구체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경기종합지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자산통계, 국내인구이동통계, 사회조사, 인구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전산업생산지수, 주택총조사, 지역 소득 등의 통계를 전담

□ 통계청 산하기관

-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 통계청을 두고 있음

2) 현행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의 쟁점 진단

- 현재 개별 부처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정책지표의 작성과 관리,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차점검(cross-check)이나 타당성 분석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정책지표 효율적 운용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지표들이 생산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어려움
- 또한, 유사한 정책지표의 중복 개발 및 단일 부처 정책에만 활용 되어 이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 공단 등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정책지표는 물론 금융기관,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 협회, 조합과 같은 비정부기관 및 기업과 같은 민간 기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책관련 지표에 대한 총괄 기능
- 이러한 범국가적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를 통해 통계청을 포함해 각 정부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자원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극대화
- 민간부문을 포함한 참여주체의 범위 확대와 투명성, 신뢰성 확보 효과를 기대

2.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의 유형 분류

1) 해외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의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

- 해외 국가통계체계는 크게 정부기구 및 역사적 전통에 따라 크게 분산형, 집중형, 절충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이 가능
 - 국가규모가 크고 정부기구가 방대한 국가일수록 특정의 통계생산기관이 국가통계의 모든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 각 정부기구가 독자적 통계를 생산할 자원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함
 - 반면, 국가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에서는 통계자원의 집적을 통한 통계행정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
 - 한편, 영국의 경우와 같이 개별 정부부처가 독립적으로 통계생산을 책임지지만,

통계청이 중앙차원에서 총괄하고 서비스 허브로 기능하는 절충형이 있음.

- 또한, 국가기구의 역사적 전통의 차이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즉 현대적 정부기구의 전통이 오래된 국가일수록 각 정부기관의 고유 업무가 명확히 정착해 정부 각 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업무 영역 변경·개편 어려워서 분산형 통계제도의 경향 띠기도 함.

[표 5-1]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의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집중형	분산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통계를 단일화된 통계전문기관에서 작성 - 부처 간 통계연락기구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작성 - 통계조정기관의 설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의 균형적 개발과 유기적 체계 확보 - 통계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 통계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지식을 관련 통계개발에 활용가능 - 통계수요에 신속히 대응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행정분야별 전문지식 활용 미흡 - 통계수요의 신속한 대응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작성상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 낭비 - 체계적인 통계개발의 제약 - 통계전문요원의 집중적 활용의 어려움 - 통계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 초래

2) 분산형 모델

- 미국의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분산형 모델
 - 미국 상무부, 법무부, 노동부, 재무부 등 각 행정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담당 국을 설치하여 일반적인 통계지표와 함께 정책지표를 제공
 - The State of the USA의 경우도 개별 행정부처가 연계되기 보다 GAO가 국립과학원(NAS) 등과 공동으로 민간주도의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국가핵심지표(KNI)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정책지표의 포괄범위가 좁음)
- 프랑스의 경우도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산된 형태의 정책지표 생산 및 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분산형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모델로 분류 가능
 - 통계정보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f Statistical Information)가 존재하나 국가적 통계개발이나 정책지표 개발을 위한 조정기능은 떨어지며, 국립통

계경제연구소(INSEE)가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통계조정 역할을 담당 하나 주로 경제 및 통계관련 연구 및 분석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절충형이나 집중형 모델로 보기는 어려움

- 기존에 독립된 부처별 통계조직의 구축 및 운영경험의 제도적 유산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독자적 통계 및 지표 작성의 자원과 능력 보유)

3) 집중형 모델

□ 호주 통계청의 경우, Measure of Australian Progress의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 정부의 정책일반과 관련한 지표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

-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집단(Expert Reference Group)을 통해 수상내각부 등 각 정부부처 및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통계청장이 의장으로서 역할 수행
- 호주 통계자문위원회는 수상 및 통계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통계청의 업무방향 및 우선순위에 대해 조언

□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연방통계청(SFSO)은 연방통계법에 의거한 40여개의 통계작성기관들로 구성된 연방통계위원회(FEDESTAT)를 주도하며, 전반적인 국가통계시스템의 운영 및 조정업무를 주도

- 다수의 기관에 분산된 통계작성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개별 통계작성기관의 독자적인 통계관리 수준이 낮은 편이며, 주요 핵심 통계지표 및 MONET 시스템과 같은 국가정책지표체계를 연방통계청에서 주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중형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
- 통계자원의 집적을 통해 통계행정의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수준의 국가정책지표체계를 국가통계기구가 주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

4) 절충형 모델

□ 영국의 경우,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에 있어 절충형 모델로 분류 가능

- 전통적으로 분산형 통계행정체계를 운영하였으나, 2007년 the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를 통해 독립부처로서 운용되는 Statistics Authority 구성하여 국가전반의 통계자료에 대한 감독과 평가 수행
- GSS(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는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정부부처들의

- 협력적 커뮤니티로서 국가통계기능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실무적 기구로서 역할
- 기획 및 조정 기능의 강화를 통해 전통적인 분산형 체계의 모습을 집중형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SDI(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와 같은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Defra와 같은 중앙행정부처에 지표 개발 책임이 주어지는 등 영국 통계청의 주도적 역할 비중이 다소 낮은 편

3.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설계 대안 선정 기준

- 국가 정책지표 개발과 관리는 범부처 및 민간에서 생산하는 각종 통계지표에 대한 총괄, 기획업무지원, 전문가 자문, 관련 DB 구축 및 관리, 교육훈련, 사후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을 포괄해야 함
- 따라서 위의 기능과 역할이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국가기관(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및 민관협력 등으로 설립하여 운용해야 할 것
- 다만, 강한 공익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관련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문이 존재하고, 그들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민간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
- 향후 변화될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의 7가지 원칙을 제시
- ① 원칙 1 : 법적 통제력
 -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의 업무는 법적 통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즉, 법적 통제력의 확보를 통해 지원업무의 실효성확보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이는 결국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
- ② 원칙 2 : 범부처성
 -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는 국가차원의 공공정책지표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구로서 범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과 연계되어야 함
 - 이를 통해 정부 공공건축물 관리의 일관성,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며, 칸막이식 행정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다만 기존 국가통계 및 국가정책지표 관련 부처, 기관들을 연계하여 활용하되, 기존 역량을 단순히 대체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국가정책지

표의 실질적인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③ 원칙 3 : 독립성

-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자율성과 전문성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
- 업무수행 시 외부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이고 적합한 판단은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정책지표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약을 달성

④ 원칙 4 : 전문성(국정지표관리 효율성)

-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수요 되는 국가통계 및 정책지표 지원 업무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전문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통해서 정책지표와 관련한 사업 내용 및 과정은 합리화될 것이며, 전문적 경험을 토대로 하는 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통계 전문인력의 확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증체계 마련과 교육훈련의 활성화가 필요

⑤ 원칙 5 : 조직효율성

- 국가정책지표거버넌스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각종 통계지표 및 정책지표의 지원업무 수요에 대응해 새로운 역량 하에서 지원업무수행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 즉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를 통해 합리적 기획 및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정책지표를 둘러싼 중복이나 과잉, 차별성 부족 등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

⑥ 원칙 6 : 민관협력의 용이성

- 국가정책지표는 증거기반 정책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서 민간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 소통 및 관리에 유리해야 함
- 국가정책지표 조성과정이 민관의 협력과 합의에 기초할 때야 비로소 국가정책지표는 주민과 밀착한 지역생활공간의 거점으로서 개발·활용될 수 있을 것

⑦ 원칙 7 : 입법추진의 용이성

- 국가정책지표는 범정부차원의 정책지표 개발, 생산, 관리, 활동과 관련한 규정 및 제도의 마련에 유리해야 함
- 합리적인 국가정책지표 기획을 위해 현재 요구되고 있는 국가정책지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정책수립 활용에 대한 공식적이고 심층적인 논의 절차, 예산책정을 위한 참고기준, 사업수행방식 결정을 위한 기준과 같은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함

제2절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의 대안 탐색

1.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대안 설계의 기준

- 국가정책지표거버넌스 총괄조직은 정부에서 생산되는 국정지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되는 국정관련 지표들을 수집과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형태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바람직
- 그 조직의 위치에 따라 크게 범부처 위원회형(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중앙부처 산하 위원회형(기재부나 통계청 소속 위원회) 등으로 분류 가능함
- 범부처형 조직형태
 -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정책지표 위원회(가칭)' 두는 방식으로 특정부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범부처 국정총괄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에 두기 때문에 관련부처와의 협의·조정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장점
 - 또한 기존의 법체제하에서 인프라와 기능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여 조직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추진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방식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 역시 확보
- 중앙부처 내부형 조직형태
 - 국가통계 관련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과 같은 특정 중앙부처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현행 국가통계 및 국가정책지표 관련한 실무적 지원 및 정책요구를 원활하게 추진
 - 기존 통계관련 인력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 그러나 단일 부처에 소속되어 해당기관 산하의 시설에 대해서만 한정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거나 타부처 및 기관과의 국가정책지표 관련 업무 조정이 어렵고, 관리 운영상 독립성이 훼손 가능성 제기

2. 대안 (1) 대통령 소속의 범부처형 위원회 체계

- 현행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와 유사한 거버넌스 구조의 설계
 -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협의체 성격을 띠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국가정책지표 위원회(가칭)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신설할 수 있음

- 조직은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약 15명, 정부위원 7명 등 총 22인으로 구성
 - 민간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위원은 국무총리실장, 기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장 등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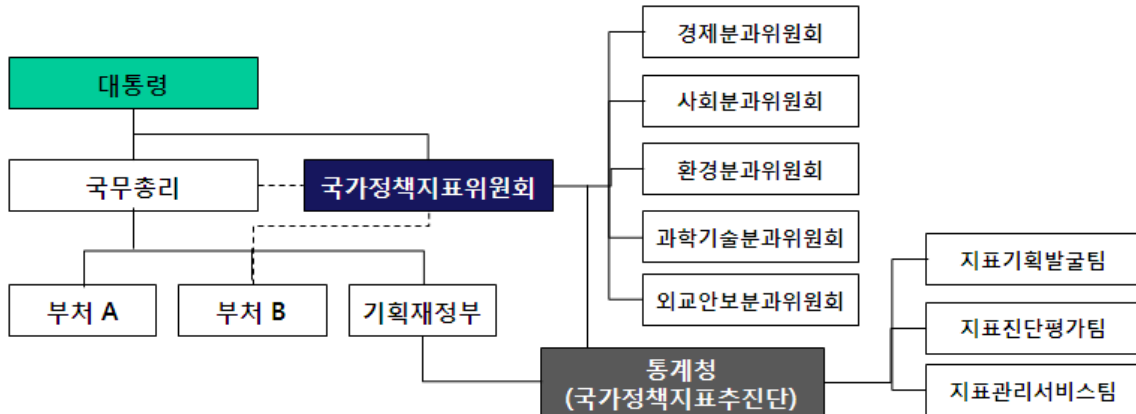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형태를 택할 경우 유연한 조직 운영 및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책자문을 위한 목적성이 강조될 수 있으며, 행정위원회의 형태를 택할 경우 범부처간 국가정책지표 관련 정책의사결정의 공식성 강화
 - 행정위원회로 구성할 경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민간위원장을 단독적으로 두는 방향을 검토

- 주요활동은 국가정책지표 관리의 기본방향과 국가정책지표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정책지표의 개발·승인 등에 대한 심사 관련사항, 국정지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각급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정책지표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의결

- 국가정책지표위원회(가칭)의 본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국의 역할을 통계청이 수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사무국을 두어 통계청의 지원 가능

- 위원회 산하에 각 정부부처 통계담당자들의 실무자 협의회(National Policy Index Council: NPIC)를 설치
 - 국가정책지표위원회와 통계청에 국가정책지표와 관련해 새로운 국가정책지표 수요의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및 각종 정책과 이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 NPIC 구성은 국가정책지표 생산에 책임을 지고 있는 통계담당 실무자들로 구성
 - NPIC의 의장은 통계청장이 맡고, 실무지원은 통계청에서 담당.

[그림 5-2] 대통령 소속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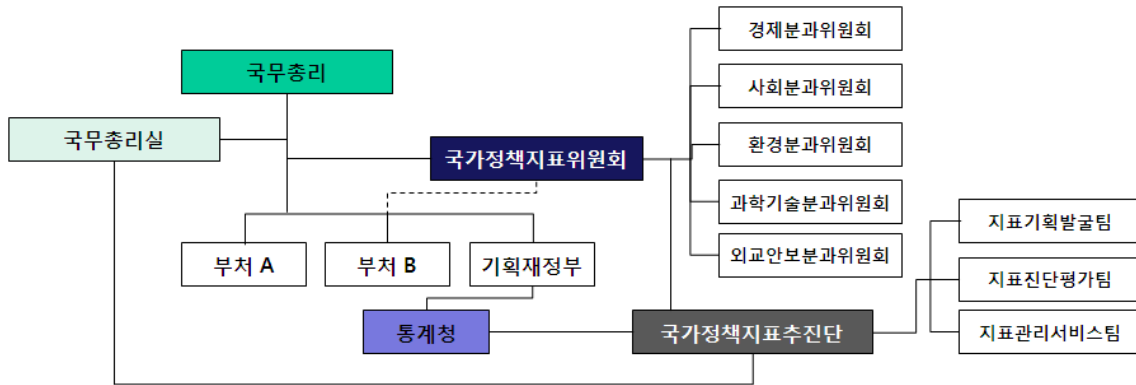
3. 대안 (2)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형 위원회 체계

- 국무총리 소속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
 -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같이 국정총괄 및 정부업무평가 전담기구인 총리실 산하에 국가정책지표 위원회(가칭)를 둘 수 있음
- 조직은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각계 민간위원 10인, 정부위원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장 등이 참여
- 행정위원회로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 비해 정책총괄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의 업무 성격 상 자문위원회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가능
 - 이 경우 통계청이 직접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국무총리실에 국가정책지표추진단(가칭)을 사무국으로 설치하고 통계청이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 기능이 강조
- 주요활동은 국가정책지표 관리의 기본방향과 국가정책지표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정책지표의 개발·승인 등에 대한 심사 관련사항, 국정지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각급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정책지표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의결

- 위원회 산하에 각 정부부처 통계담당자들의 실무자 협의회(National Policy Index Council: NPIC)를 둘 수 있음.
 - 국가정책지표위원회와 통계청에 국가정책지표와 관련해 새로운 국가정책지표 수요의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및 각종 정책과 이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 NPIC의 의장은 통계청장이 맡고, 실무지원은 통계청에서 담당.

[그림 5-3] 국무총리 소속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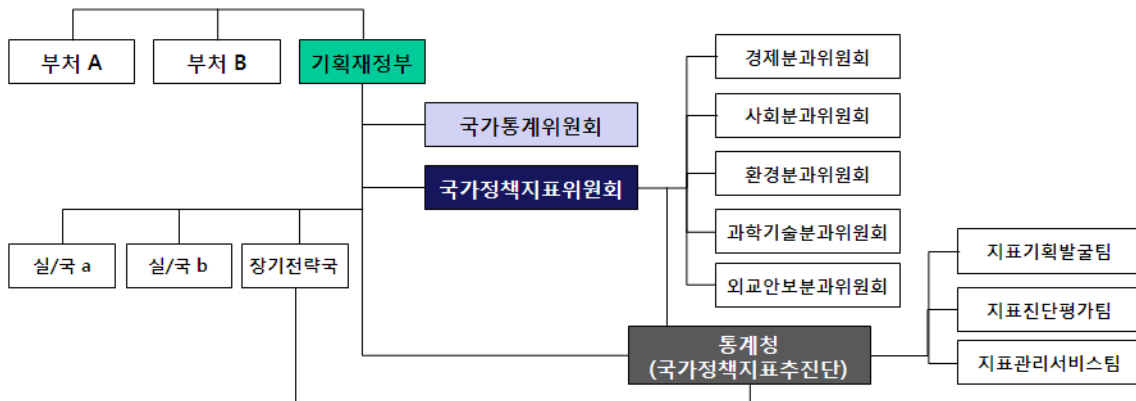


4. 대안 (3) 기획재정부 소속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 체계

- 현행 기획재정부 소속 행정위원회 형태인 국가통계위원회와 병행하여 국가정책지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 1962년에 자문위원회 형태로 설립되어지난 2007년 심의위원회로 격상된 기재부 산하 국가통계위원회와 병행해 국가정책지표위원회(가칭)를 신설할 수 있음
- 조직은 기재부 장관(당연직 위원장),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약 12인, 정부위원 11인(통계청장 간사), 기관 당연직 5인 등 총 28인으로 구성
- 기존의 국가통계위원회가 국가승인통계의 개발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위원회는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강조하는 국가적 전략기획에 차별성을 두고 위원회의 역할범위를 설정 가능

- 주요활동은 국가정책지표 관리의 기본방향과 국가정책지표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정책지표의 개발·승인 등에 대한 심사 관련사항, 국정지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각급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정책지표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의결
- 위원회 산하에 각 정부부처 통계담당자들의 실무자 협의회(National Policy Index Council: NPIC)를 두어 국가정책지표 관련 실무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국가정책지표위원회와 통계청에 국가정책지표와 관련해 새로운 국가정책지표 수요의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및 각종 정책과 이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 NPIC의 의장은 통계청장이 맡고, 실무지원은 통계청에서 담당.

[그림 5-4] 기획재정부 소속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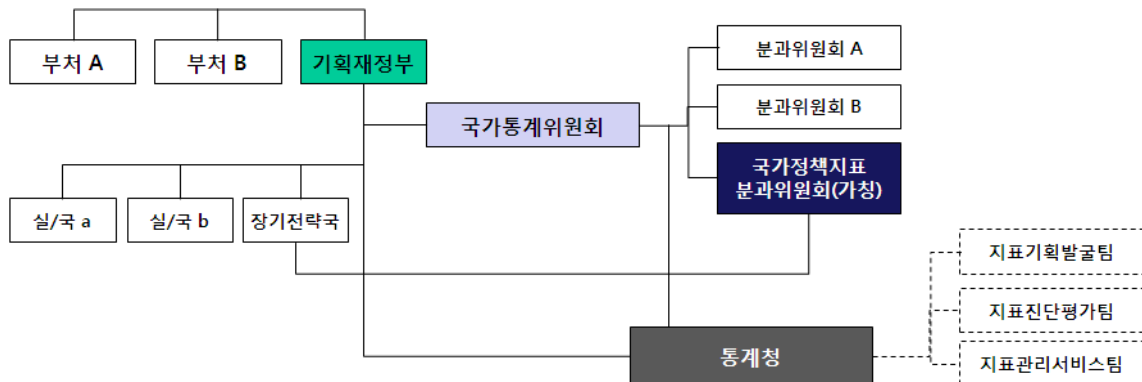


5. 대안 (4)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 형태의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 체계

- 기존의 국가통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국가정책지표분과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
- 현행 국가통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가운데 정책분과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통계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기존의 정책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정책지표의 진단 및 개발, 관리, 활용을 전담하는 새로운 분과위원회의 구성 가능
 - 현행 국가통계위원회의 정책분과위원회는 통계제도, 표본관리, 통계발전계획, 통

- 계조사대행, 국제통계협력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함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초기 구축 단계에서는 별도의 TF 형식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정책분과위원회가 국가정책지표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긍정적
- 통계지표의 정책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통계활용의 목적이 강조되며, 통계지표와 정책지표 간의 연계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기존의 조직과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최소화
 - 국가정책지표체계 운영과 관련해 기존 조직을 활용한다면, 통계청 내에 신규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은 다소 회의적
- 조직은 국가통계위원회 다른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민간위원 11~15인으로 구성
- 주요활동은 국가정책지표의 부문별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기능
- 위원회 산하에 각 정부부처 통계담당자들의 실무자 협의회(National Policy Index Council: NPIC)를 둘 수 있음.

[그림 5-5]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 형태의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6. 대안 (5) 통계청 직속의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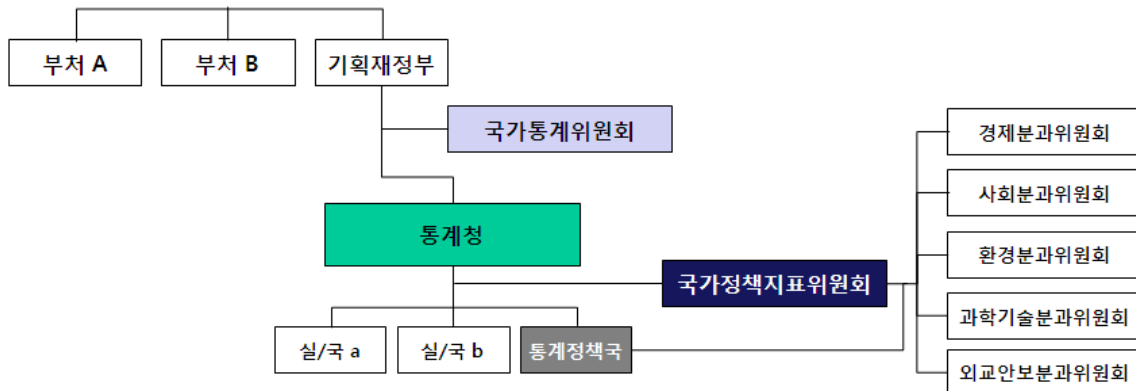
- 과거 국가통계위원회와 같이 통계청 소속으로 국가정책지표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

- 조직은 국가통계위원회 다른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민간위원 11~15인으로 구성되며, 통계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행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정부처의 당연직 위원의 위상도 차관급으로 맞춰질 수 있음
 - 통계청 내 국가정책지표를 담당하는전담부서의 지정을 통해 해당 부서가 주도하여 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식
 - 위원회 산하에 각 정부부처 통계담당자들의 실무자 협의회(National Policy Index Council: NPIC)를 둘 수 있음.

- 주요활동은 통계청에서 수집한 국가정책지표의 부문별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

- 현재의 e-나라지표 운영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현행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주관기관 외에 부처간 협력체계를 추가하는 수준

[그림 5-6] 통계청 소속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제3절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의 대안 선택

1.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의 대안별 검토

- 국가정책지표 전조직의 위치에 따른 네 가지 대안을 앞서 언급한 조직설립 대안 설정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5-2] 조직화 설정기준에 따른 거버넌스 대안별 비교

비교항목	대안		중양부처 소속 위원회		
	범부처형 위원회				
조직형태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총리실 소속 위원회	기재부 소속 위원회	국가통계위원 회 소위원회	통계청산하 위원회
법적통제력	강함	강함	보통	보통	미약
범부처성	강함	강함	미약	미약	미약
독립성	미약	보통	보통	보통	강함
전문성	보통	강함	보통	강함	강함
조직효율성	미약	강함	보통	보통	강함
민관협력 용이성	강함	강함	미약	미약	미약
입법추진의 용이성	약함	보통	보통	강함	강함

- 각각의 대안이 가지는 장단점을 항목별로 검토해 볼 때, 법적통제력이 강력할수록 조직의 독립성과 입법추진의 용이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법적통제력이 약할 경우에는 조직의 독립성과 효율성에서는 강한 특징을 보임
- 한편, 조직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기존 국정총괄 및 정부업무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총리실과 국가통계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통계청이 다른 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특징을 보임

-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소속될 경우, 정부 정책지표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되고, 정책지표를 활용한 정책평가와 환류가 가능해져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전반적인 토대를 갖추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2. 국가정책지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 단기적으로는 별도의 법제도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기존의 국가통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국가정책지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지표분과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기존 통계관련 인력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행정비용이 최소화되므로 단기적으로 구성이 용이
 - 통계지표의 정책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통계활용의 목적이 강조되며, 통계지표와 정책지표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효율성이 제고
 - 현행 국가통계 및 국가정책지표 관련한 실무적 지원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관련 입법추진이 용이하여 정책요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음
 - 다만, 한정적인 법적 통제력과 행정력 밖에 행사할 수 없어 국가정책지표 관련 업무 수행의 실효성과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타부처 및 기관과의 국가정책지표 관련 업무 조정이 어려움이 크므로 장기적으로는 범정부적 성격을 갖는 조직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 기존의 국가통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국가정책지표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행 「국가통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2269호) 제8조의2제1항에서 국가통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령개정이 없더라도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자유로이 국가정책지표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책지표 위원회(가칭)의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강한 법적 구속력과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 기관단위의 관리 및 활용이 아닌 국정총괄기구로의 범부처 정책 조정 및 평가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바, 총리실에서 국가정책 지표를 총괄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 국정총괄을 맡고 있는 총리실 소속 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경우, 특정부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관련부처와의 협의·조정이 유리하다는 장점을 실현 가능함
 - 기존의 법체제하에서 인프라와 기능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여 조직형성이 가능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정책지표관련 업무 수행의 법적통제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과 안정성이 제고되며, 개별지표의 작성 및 관리 활용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가정책지표의 품질수준을 보장
- 기존 총리실 주관 특정평가 정책관리역량 항목에 통계기반 의사결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바, 관련 기관들의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국정지표의 기획 및 진단 시 국민의 관점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바 민주성 역시 제고 가능
- 현재의 「통계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와 별도로 국가정책지표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국가정책지표위원회의 성격을 단순한 자문기구로 할 경우에는 대통령훈령이나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정책지표위원회의 성격을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가 아닌 일종의 합의제적 성격을 가진 심의·의결위원회로서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예컨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 법률이 없다면 별도의 법률(가칭 '국가정책지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통계청이 국가정책지표관리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보완해야 함.

- 현행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17호)은 국가정책지표관리에 관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이 대통령훈령에서 해당 사항을 규율할 경우에는 제2조 정의규정에서 국가정책지표의 개념을 설정하는 한편 장(章)을 신설하여 관리하려는 국가정책지표의 주요 내용과 주관기관인 통계청의 업무와 관련 정부기관의 업무 및 주관기관의 관리실태점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어야 할 것임

제6장

국가정책지표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방안



제6장 국가정책지표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방안

제1절 정보화 시스템 개발의 이론적 검토

□ 정보화 시스템(information system)의 개념적 정의

- 서로 관련된 구성요소의 집합체로서, data 및 information 을 수집, 처리, 보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환류구조(Feedback System)를 가지고 있는 것(Stair, 2007)
- 관리층 및 사용자층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Whitten, 2005).
- 기본적으로 조직은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의 집합체
- 정보시스템은 조직의 운영 및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 자료, 기술, 업무처리과정 등의 배합체

□ 정보화 시스템 개발(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의 주요 개념

- 시스템 개발(System Development)의 정의 : 새로운 사업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업시스템을 수정하는 활동
- 시스템 개발과정(System Development Process) : 정보시스템을 개발,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시스템 조사(System Investigation)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과정,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
- 시스템 분석(System Analysis) :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
- 시스템 설계(System Design) : 사업(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설계하는 과정
- 시스템 실행(System Implementation) : 필요한 Hardware, Software, Databae 등 다양한 시스템 구성요소를 획득, 조립, 구성, 배치하는 과정
- 시스템 유지 및 검토(System Maintenance & Review) : 개발된 시스템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및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수정하는 과정

□ 정보화 시스템 개발의 주요 원칙

① 발주자(Owner) 및 사용자(User)의 참여

- 발주자 및 사용자의 참여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파악을 위해 필수
- 관리자그룹, 사용자그룹, 기술지원그룹의 문제 및 요구사항 파악

- 관리자그룹, 사용자그룹, 기술지원그룹의 요구청취, 충돌방지, 의견조정
 - 요구사항, 목표, 기대수준을 정확히 파악
 - 시스템분석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정보기술전문가 등의 참여
 - 원활한 의사소통, 참여의 보장, 합리적 사고 및 결정이 핵심
- ② 문제해결접근법(Problem-Solving Approach) 사용
-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 문제의 종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개선할 수 있는 기회, 관리층의 지시 및 요구
 - 전형적인 문제해결접근법
 - 문제분석 및 이해
 - 문제를 둘러싼 환경 분석 및 이해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파악
 - 대안 실행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파악
 - 복수의 대안설계 및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의 대안 선택
 - 최적의 대안을 실행
 - 대안실행에 따른 문제해결정도를 관찰하고 평가
 - 평가에 따라 대안을 수정
- ③ 각 단계(Phases) 및 활동(Activities)의 규정
- 모든 단계와 각 단계별 활동을 규정해야 함
 - 대표적인 정보시스템개발론은 7개의 단계를 포함 : 1. 사전조사, 2. 문제분석, 3. 필요사항 분석, 4. 의사결정분석, 5. 설계 6. 건설, 7. 실행
- ④ 표준 확립
- 시스템 및 모든 과정을 표준화
 - 이를 위해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필요
 - 일관성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수
 - 예 : 문서표준, 품질표준, 기술표준
 - 문서표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시스템의 장, 단점을 공개
 - 품질표준: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이 사업에 대한 기대수준과 맞는지 확인
 - 기술표준: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시스템에 대한 친숙도, 사용 용이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기술표준사항 등
- ⑤ 시스템 개발의 투자 타당성 및 정당성 확보
- 비용/효과분석 : 시스템개발 및 운영비용 대비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
 - 위기관리 (Risk Management) 필요성 : 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기 방지, 시스템 구축 이전에 예상 가능한 위험요소 발견 및 평가

- ⑥ 시스템 개발 각 단계 중 타당성 저하 등이 발견되면 취소 또는 범위 조정
 - 취소된 사업이 집행된 재난보다는 낫다
 - 각 단계별로 구성된 시스템개발의 장점은 각 단계별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재평가할 수 있다는 것
 - 따라서 Creeping Commitment를 통해 신중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
- ⑦ 분산 및 이행
 - 문제를 분산시켜 정복
 - 시스템 구축도 각 단계별로, 하위 체제별로 분산시켜 구축
- ⑧ 성장과 변화를 위한 설계
 - 신속한 시스템 개발이라는 압력에 굴복하면 곤란
 - 사용자의 요구사항만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면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불리
 - 끊임없이 외부의 변화 및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단계

- ① 1단계 : 사전조사
 - 사업의 수행 타당성 조사
 -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 조사
 - 사업의 배경이 된 문제 조사
 - 사업수행의 잠재적 위험요소 분석
 - 사업범위, 제약점, 참여자, 예산, 스케줄 등 Project Chart 작성
- ② 2단계 : 문제분석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환경 등에 대한 분석 및 이해
 - 인지된 문제 및 그 원인 등 필요한 정보 수집
 -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보유 기술의 능력 및 한계 파악
 - 현재의 상황을 도표로 작성 (문제, 원인, 시스템 구조 등)
 - 분석회의개최: 분석결과에 대한 관리자 및 사용자의 의견 수렴
- ③ 3단계 : 요구분석
 -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및 기대사항 파악
 -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야할 기능 분석
 - 각 기능의 성취 수준 결정
 - 기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 파악
 - 주의사항: 적용 가능한 솔루션의 한계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제한

④ 4단계 : 의사결정분석

- 시스템 설계상 의사결정
 - 시스템의 컴퓨터화 수준 (Level of Computerization)
 - 솔루션 구입 또는 직접 개발
 - 내부용 시스템 또는 내·외부용 시스템
 - 사용 가능한 솔루션 파악, 솔루션 분석을 통한 실현 가능한 수준 파악, 이를 통해 솔루션 결정
- 솔루션 평가 기준
 - 기술실현가능성: 직원들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솔루션이 실용적인가?
 - 운영실현가능성: 솔루션이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솔루션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솔루션 적용에 따른 작업행태 및 환경 변화는 긍정적인가?
 - 경제적 실현가능성: Cost/Benefit Analysis
 - 일정실현가능성: 정해진 기간 내에 개발 및 실행할 수 있는가?
 - 위험회피가능성: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
- 시스템개발제안서 작성 : 예산, 설계, 솔루션 등을 담은 제안서

⑤ 5단계: 설계

- 필요사항분석에서 얻어진 요구사항을 시스템 명세서로 변경하는 작업
- 기술의 시스템 적용 사항
- 서류기반 설계 및 컴퓨터 기반 설계
- 보통 설계단계에 들어서면 사업은 취소하지 않음
- 사용자, 관리자, 기술 전문가, System Provider 등이 모여 설계

⑥ 6단계: 구축

- 설계를 기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
- 요구사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이전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의 연계
- DB 구축, Application Program 구입 또는 개발, 설치
- 사용자, 관리자, 기술 전문가, System Provider 등이 모여 설계

⑦ 7단계: 실행

- 새로운 시스템을 기반으로 업무처리 시작
- 기존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 이전으로 인한 문제발생 해결
- 시스템 전환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문제 발생을 최소화

-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최종 테스트 및 의견 수렴
- ⑧ 8단계: 운영 및 지원
 - 시스템의 운영 및 정착 단계
 - 지속적인 시스템 지원이 필요
 - 기술지원, 문제해결, 요구사항 실행, 시스템 관리
 - Program 결함 해결, 시스템 고장시 복구 등 관리
 - 새로운 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여 시스템 변경

제2절 국가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1. 제1안 : 개별 기관 연계 방식

1) 시스템 개발의 목표 및 필요성

- 정책결정지원이 가능한 국가정책지표시스템 개발을 통한 Decision Support System 구축
 -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국가정책결정 지원
 - 현재와 같이 각 부처별로 독립된 통계자료를 유지·관리하는 방식은 의사결정지원이 불가능하며, 효과적인 정책결정지원을 위해서 각 부처의 시스템을 연계
 - 통계결과에 기초하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결정(OECD가 각국의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면서 처음 제시한 Evidence Based Policy)

-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의 활용
 - 민간기업은 국가승인통계 이외의 유용한 자료를 다수 확보
 - 민간정보의 선택, 분별, 신뢰가능한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체계 등을 구축하는 것은 현재의 통계청 체제로는 불가능
 - 민간보유 통계자료는 100% 비정형화 되어 있는 상태
 - Primary Key 가 없음
 - 데이터 형식이 모두 제각각
 - 이를 모두 통합, 연계하여 추세분석, 동향분석 등 정책지원 가능한 형태로 바꾸려면 막대한 예산 및 인력이 필요

2) 시스템 개발 형태

- 내부용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는 방안
 -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정책지표시스템과 연계
 - 정부 내 각 부처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
 - 외부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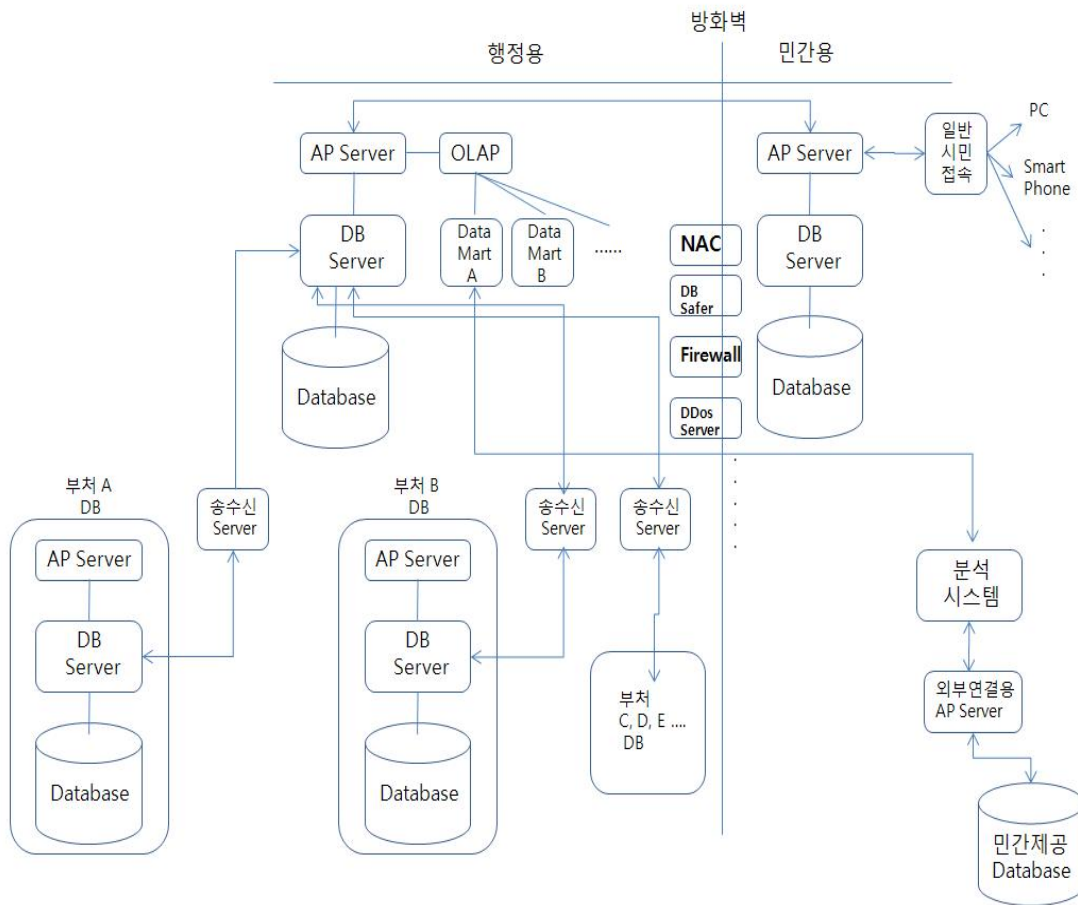
- 내부 및 외부용 데이터베이스 동시에 구축하는 방안
 - 국가정책지표시스템을 기반으로 외부의 민간용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

- 외부의 국민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 등 서비스 가능
- 내·외부망 분리 및 내·외부망 사이에 방화벽구축

□ 내·외부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바람직

- 사용자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전 세계적인 추세
- 사용자의 피드백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

[그림 6-1] 개별기간 연계방식의 정보화 시스템 설계도



□ 내·외부망 분리

- 국민을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외부망 분리가 필수
 - 내·외부망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내부 행정용 데이터베이스 보호
- 행정용 AP Server와 민간용 AP Server를 연결
 - 행정용 AP Server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민간용 AP Server에 제공
 - 일반 시민들은 민간용 AP Server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음
 - 행정용 AP Server는 방화벽을 통해 민간용 AP Server와 분리 및 보호

□ AP Server (Application Server)

- DB Server 에 있는 Data를 추출하여 사용자의 화면에 제공,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DB Server 에 있는 Data를 가공하여 제공
-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며 Web Page를 담당

□ DB Server (Database Server)

- Database를 통제·관리하는 서버
- Web Page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담당

□ Database

- 실제 통계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

□ 각 부처 DB

- AP Server, DB Server, Database 는 기능이 동일
- 그러나 각 부처의 DB Server는 송수신 Server를 통해 국가정책지표시스템의 DB Server와 연결
- 송수신 Server를 통해 각 부처의 Database 안에 있는 통계자료가 국가정책지표 시스템의 Database 안에 있는 통계자료와 연결
- 이러한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생성, 관리하는 모든 부처의 Database가 국가정책 지표시스템과 서로 연계

□ 송수신 Server

- 각 서버를 연결하는 연계서버로 각 부처의 DB Server 또는 Database를 국가정책지표시스템과 직접 연결할 경우 자유로운 접근, 데이터 변경, 통제 등을 우려한 각 부처의 반발이 예상
- 따라서 각 부처의 Database 에 있는 통계자료만을 추출하여 국가정책지표 시스템과 연결해주는 송수신 Server의 설치가 필수
- 각 부처 담당자에게 직접 국가정책지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통계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누락, 지연, 불이행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
- 따라서 부처에서 자체 Database에 통계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송수신 Server를 통해 국가정책지표시스템으로 연계
- 부처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따라 다수의 송수신 Server가 필요

□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 온라인분석처리를 통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 사용자가 하나의 동일한 데이터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도록 지원
- 시점별, 주제별, 영역별 분석을 가능하게 함

□ Data Mart

- 시점별, 주제별, 영역별로 추출한 데이터를 보관하며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
- 주제별, 영역별 Data Mart 의 예
 - 주민, 건축, 방재
 - 주민 Data Mart가 방대할 경우 세분하여 그 하위에 Data Mart 가 존재
예) 주민 Data Mart - 세대 Mart, 거주지 Mart 등

□ 민간제공 Database

- 민간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Database
- 민간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끌어오는 것
- 각 민간기업 또는 단체들이 보유
- Naver, Daum, Nate(SK Telecom) 등이 '검색어' 통계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저장
- SNS : Twitter, Facebook, Blog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민간Database에 저장
- 보안 문제로 인해 행정전산망과 직접 연결은 불가능(정부통합전산망 분리원칙)

□ 분석시스템

-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제공한 Data를 가공, 정제하는 역할
- 신뢰가능한 자료인지 분석
- 정부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인지 분석
- 정제된 데이터를 Data Mart에 보내는 기능
- 분석시스템 내에도 그 기능의 정도에 따라 시스템이 필요하며, 단순히 신뢰가능한 자료인지 분석하는 기능만 필요하다면 단순할 수 있으나, 그러나 민간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주제별, 영역별로 분류한다면 대규모 분석모듈이 필요
- OLAP과 연결된 Data Mart 에 정제된 Data를 송신하며, 정제된 민간정보 Mart A, B, C... 방식으로 구성
- 행정용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해 방화벽 밖에 위치
- 터널링(Tunneling) 방식으로 행정용 Database System 내에 있는 Dart Mart와

연결함

□ 방화벽 시스템

- NAC (Network Access Control) :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차단 기능,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
- DB Safer (Database Safer) : Database 를 보호하는 시스템
- DDos Server : Denial of Service Attack 에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능, 시스템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네트워크 접근요청신호가 대규모로 들어올 경우 이를 차단
- 기타 방화벽 시스템 : 상술한 장비 이외에도 수많은 방화벽시스템이 존재

3) 예상되는 시스템 개발 예산 및 기간

□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정하는 범위, 규모 등에 따라 예산은 천차만별이며, 몇 개의 부처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시킬 것인지 분석해야 예산 추정이 가능

□ 개발비용 : 약 1,500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산출근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으로 1천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1차~4차 사업 수행으로 추가로 500억 소요
- 국가정책지표시스템 사업의 경우 국가통계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를 연계해야 함
- 여기에 추가하여 민간에서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이를 종류별로 Data Mart를 만들고, 이를 다시 행정용 시스템의 OLAP과 연결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

□ 개발기간 : 약 5년에 걸쳐 1~4차 사업까지 수행

- 기본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각 영역 및 목표별로 1차~4차 사업까지 수행

2. 제2안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 방식

□ 적은 비용으로,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지원이 가능한 국가정책지표 시스템을 하여 Decision Support System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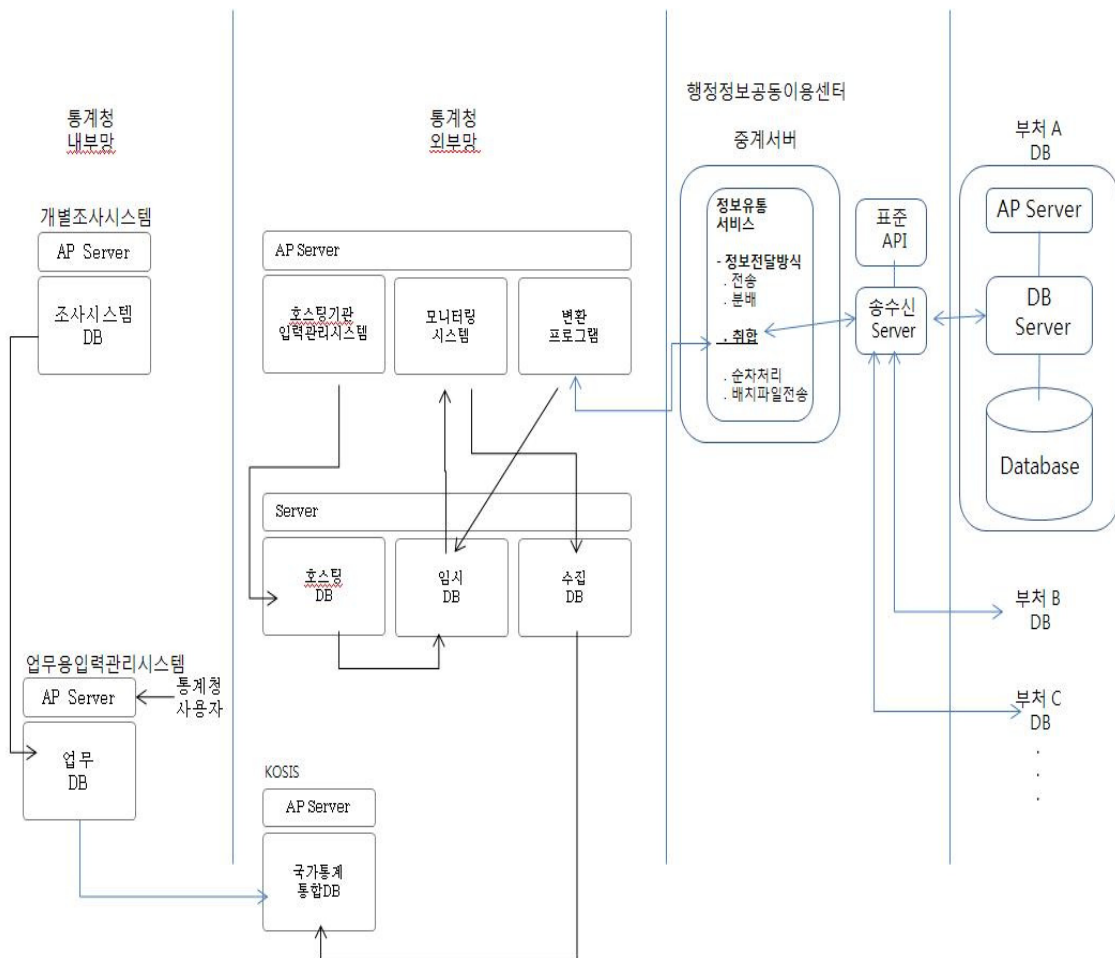
□ 구축방식

-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연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이미 송·수신 서버를 구축하여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와 연계되어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송·수신 서버 활용하여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송·수신 서버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표준 API를 추가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중계서버는 각 기관 및 통계청 서버 사이에 위치, 브리지 역할을 수행

[그림 6-2]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방식의 정보화 시스템 설계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중계서버를 이용하여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와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
 - 최소한의 비용, 시간, 노력만이 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송수신 서버에 통계데이터 취합을 위한 표준 API (Application Software)만 개발하여 통합
 - 송수신 서버는 중계서버를 통하여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의 업무협조가 필수

- 개발비용 : 최소 약 16억의 예산이 필요
 - 하드웨어 구축비용 약 10억,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약 6억
 - 각 부처의 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해 각 부처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음(제1안에서는 이러한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 산정)
 - 주요 예산 투입 (하드웨어)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송수신 서버 안에 심겨질 표준 API 개발 비용
 - 각 부처별로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통계 데이터를 입력, 이를 통계청과 연계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
 -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송수신 서버와 연계하는 비용이 발생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중계서버와 통계청 외부망의 AP서버와 연계하는 비용이 발생
 -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의 복잡성 및 기능 추가의 정도에 따라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변경 및 하드웨어 보강이 필요
 - 주요 예산 투입 (소프트웨어) :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의 복잡성 및 기능 추가의 정도에 따라 개발비용 상이

- 개발기간 : 약 1년에 걸쳐 1차 사업 수행

3. 제3안 : 현행 시스템 유지

- 현행 시스템 유지 방식
 - 하드웨어 개발 비용 없으며, 세 가지 대안 중 가장 적은 개발비용 소요
 - 현재 각 부처의 통계담당자가 e나라지표에 접속하여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을 유지

□ 장단점

- 장점 : Application Software(웹 페이지) 개발 비용 이외의 비용 없으며, 최대한의 예산 절감 가능
- 단점 : 최신 데이터 반영이 불가하며, 각 부처 담당자의 업무량 증가, 데이터 입력 시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며 데이터 입력 시 실수로 인한 오류발생 가능성 높음

□ 구축방식

- 하드웨어 개발 및 변경 필요성 없이 현행 시스템 유지
- 단, 새롭게 변경·추가되는 정책지표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변경 및 증설 필요
- 외부 입력기관의 시스템은 변경되지 않으며, 새롭게 개발되는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복잡성 및 기능추가에 따라 변경 정도가 상이
- Application S/W의 변경이 필요하며,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메뉴 및 기능의 추가가 필요

□ 개발비용 : 약 16억의 예산이 필요

- 하드웨어 변경 및 증설비용 약 10억,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변경 비용 약 6억원이 예상
- 주요 예산 투입 (하드웨어) :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의 복잡성 및 기능 추가의 정도에 따라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변경 및 하드웨어 보강이 필요
- 주요 예산 투입 (소프트웨어) : 새로운 국가정책지표의 복잡성 및 기능 추가의 정도에 따라 개발비용 상이

□ 개발기간 : 약 1년에 걸쳐 1차 사업 수행

4. 각 안의 구축방안 비교 및 예산 소요 비교**1) 구축방안 비교**

□ (1안) 신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표관리 체계

- 지표생성을 위한 데이터 생성시점부터 전달, 취합, 분석체계를 신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별도 운영하는 방안
- 신규 시스템 구축의 형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1차 년도에

특정 지표영역(예: 주민, 건축, 산업 등 1개 영역)을 선정하여 구축하고 타당성 및 운영 실효성을 검증하는 형식 적용

□ (2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지표관리 체계

-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를 통해 지표 데이터의 전달, 취합체제로 활용하는 방식
- 데이터의 생성체계는 선정된 영역별 공동이용센터의 송·수신연계서버에 표준연계모듈(API)을 탑재하여 필요 데이터를 DB에 접근, 추출
- 데이터의 분석체계는 통계청 내부에 별도 분석시스템 구축

□ (3안) 기존 KOSIS를 활용한 지표관리 체계

- 기존 KOSIS 및 e나라지표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고 데이터의 생성은 해당 부처·부서의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입력하는 형식 유지
- 중앙에는 별도의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지표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정보를 추출·분석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구축방안별 예산(안)

□ (1안) 신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표관리 체계

(단위 : 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소요예산	산출근거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10,000	· 1150MM × 8.7백만원(인력단가)
장비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1,500	
	하드웨어 구매	3,500	
합계		15,000	

※ 투입인력 단가는 인건비 평균(중급)을 기준으로 제경비를 포함하여 산정

□ (2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지표관리 체계

(단위 : 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소요예산	산출근거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1,000	· 115MM × 8.7백만원(인력단가)
장비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400	
	하드웨어 구매	200	
합 계		1,600	

□ (3안) 기존 KOSIS를 활용한 지표관리 체계

(단위 : 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소요예산	산출근거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800	· 92MM × 8.7백만원(인력단가)
장비구입비	하드웨어 구매	300	
합 계		1,100	

제3절 국가정책지표 웹사이트 운영 개선방안

□ 개선방안의 주요 목표

- SNS를 적극 활용하여 사용자와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Database에 있는 통계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책자료로 전환하여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상황 보고

□ Web Page 구축 시 필수사항

① 관리자에게 편리한 시스템 구축

- 각 부처의 통계 담당자가 직접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은 매우 번거롭고 비효율적, 입력과정의 오류 발생, 실시간 업데이트 불가능
-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해당 부처의 담당자가 한번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통계청의 시스템이 갱신
- 입력 데이터의 표준화

② 사용자에게 편리한 시스템 구축

- 직관적 설계 : 웹페이지를 매뉴얼 없이도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설계
- 그래픽이 가미된 심플한 설계 : 현행 e나라지표 웹페이지는 텍스트 위주의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계, 사용자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드는 화면 구조, 다양한 그래픽이 가미된 심플하고 깔끔한 설계가 필요

□ SNS 구현방안

① 각종 통계결과를 제공하는 화면에 통계청의 SNS 아이콘 및 링크제시

- Twitter 아이콘 : 해당 통계에 대해 사용자가 의견을 제시
- Twitter 예시
 - 사회복지통계와 관련된 의견을 Twitter 아이콘 클릭
 - 통계청 트위터에 사용자가 '팔로우' 하기
 - 팔로우 신청 후 사용자는 관련 의견을 제시
 - 통계청 트위터 담당자가 해당 의견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
 - 위 대화에 대한 의견을 다른 사용자가 '답글'을 달거나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리트윗, 이를 통해 통계자료 및 관련 정보가 다수에게 배포
- Facebook 아이콘 : 통계청 뉴스, 행사, 정책 등을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홍보
- Facebook 예시
 - 새롭게 시작될 인구조사에 대하여 Facebook 아이콘을 클릭시 통계청

Facebook으로 이동

- Facebook 초기화면 상단 또는 중앙 등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사진과 간략한 설명이 담긴 인구조사 안내
- 해당 사진을 클릭시 시작될 인구조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

- Blog

- Blog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단
- Blog 내용은 온라인 잡지처럼 사용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 (사진 및 해당 사진에 대한 설명 등)
- 각종 통계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조사배경, 조사대상, 결과분석 및 해석 등)을 제공
- Blog 아이콘 클릭시 해당 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Blog 예시

- 통계청의 주요 정책 관련 통계를 지표를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여 제공
- 경제 카테고리 클릭시 해당되는 글(통계 등)을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통계에 관련된 정보 제공 (통계청 공무원들이 OECD 경제 관련 국제통계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하는 장면 등을 사진과 설명으로 구성하여 함께 제공)

- ② 주택, 치안, 복지 등 주요 정책지표에 대해 해당 지표를 클릭할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한 통계청 또는 정부의 입장, 설명 등을 You Tube 동영상으로 제공

- You Tube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효과적

- 각종 복잡한 지표를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동영상을 통해 쉽게 보고 듣는 것이 편리

- You Tube 예시

- 신혼부부 주택현황 통계를 첫째, 시작하게 된 배경, 둘째, 통계청에서 관련 회의를 하는 장면, 셋째, 실제 조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 넷째,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조사원들과의 인터뷰(무엇이 조사의 목적이며, 무엇이 어려웠고, 무엇이 보람을 느끼게 했는지 등등) 다섯째,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e나라지표에 올리는 장면, 여섯째, 결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 등을 통계청장이 보고하는 장면 등으로 동영상 + 음악을 결합하여 제작

③ GIS 예시

- 서울시 재개발 지역 선정 및 사업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구로구를 지도상에서 클릭

- 구로구에 있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 (상가, 연립 및 단독주택 포함) 및 아파트가 전체 및 동 단위로 (해당 동의 지도표시 위에) 통계수치 표시
- 해당 동의 통계를 클릭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표시
 - 10년, 20년, 30년 이상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몇개, 인구 몇 명 등
- 실사보기를 클릭하면 현장의 도로 및 주택상황이 실제 사진으로 표시 (위성사진, 3D 입체영상, 보다 상세한 현장 사진 등을 위해서는 구글, 애플 등과 계약을 통해 지도를 구입)

□ GIS 구현 방안

- ① 현재 KOSIS, SGIS 등에 구현되어 있는 GIS 기능을 보다 발전시켜 e-나라지표에 적용
 - GIS 기술을 활용한 지역별 통계는 정책결정에 큰 의미를 보유
 - 미국의 경우 지역별 질병통계를 모니터링하여 병원 등 보건시설 설립
 - 이를 위해 웹페이지 개선 시 GIS Solution 도입 및 활용이 필수
- ②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GIS 기능을 구현할지에 대한 내부 합의가 필요
 - GIS Solution은 시, 군, 구, 동 등 나타낼 수 있는 상세한 정도에 따라 가격 및 기능이 천차만별

□ 현행 e-나라지표 웹 페이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① 복잡한 텍스트 위주의 화면구조
 - 한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나타내는 수많은 창들이 동시에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웹페이지라는 인상을 줌
 - 텍스트 사이즈도 매우 작아 보기에 부담스러움
 - 민간기업의 웹 페이지와 같이 그래픽 위주의 세련되고 직관적인 설계로 구성
 - 한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만 제공하거나 그래픽, 도표, 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한 눈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변경
- ② 직관적 설계의 부족
 - 사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 변화되어야 함
 - 그러나 네비게이션(여러 번의 클릭을 통해 원하는 화면을 찾는 것) 과정에서 화면의 변화가 부자연스럽고, 최종 단계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어떤 아이콘을 클릭해야 할지 오랜 시간 찾고, 생각해야 함
 - 민간기업의 웹 페이지처럼 클릭 시 마다 새로운 화면의 등장, 원하는 정보를 사용자 시선의 정 중앙에 배치해야 함

□ 새로운 국가정책지표개발에 따른 개선 필요성

- ①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초기 화면 변경
 - 현재와 같이 분야별, 부처별 지표가 초기 화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발된 국가정책지표가 주요 영역별로 한 눈에 보이도록 변경
- ②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통계
 - 지표설명 및 지표해석에 그치지 않고, 해당 통계를 작성한 담당자가 전문적 의견을 제시
 - 실무상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또는 전략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여 의미 있는 정책자료가 되도록 함
 - 해당 지표와 관련이 있는 지표에는 무엇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링크를 통해 제시
 - 이를 통해 정책결정권자가 한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제7장

국가정책지표 지표분류체계 구축방안



제7장 국가정책지표 지표분류체계 구축방안

제1절 지표분류체계 설계의 주요 쟁점

1. 주요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지표분류체계 비교

□ 주요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사례를 통해 지표분류체계에 포함된 항목들을 파악

[표 7-1] 주요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지표분류 항목

주요국/지표체계	주요 분류항목
미국 (SUSA)	가구당 소득차이, GDP, 실업률, 빈곤층 비율, 부채, 에너지, 교육, 보건, 사법, 노령화, 가족 및 아동, 예술 및 문화, 주택, 에너지, 환경
영국	경제(예산, 소비, 국가재정, 개인재정, 생산성, 생산량, 물가), 경영·자원(경영, 에너지,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환경(농업, 환경, 어업, 임업), 고용시장(고용환경, 취업자, 실업자), 아동·교육·기술, 의료 및 사회복지, 인구·주거환경, 인구, 교통, 대기 질, 기후변화, 환경경영, 환경영향, 수자원, 야생동물
호주 (MAP)	국민소득, 경제적 어려움, 국부, 주택, 생산성, 생산량, 물가, 경쟁력과 개방, 인플레이션, 건강, 교육과 훈련, 노동, 문화와 레저, 가족·공동체·사회 통합, 범죄, 민주주의·거버넌스·시민성, 자연환경, 대기, 강과 바다
스위스 (MONET)	경제시스템, 효율성·경제성, 유연성·안정성, 생산·소비, 취업, 국제무역, 객관적 삶의 조건, 주관적 삶의 질, 분배 공정성·기회 형평성, 사회통합의 강화, 인적 자본 개발과 관리, 자원소비, 오염 및 낭비, 위험, 변화율, 자연 및 농업
캐나다 (캐나다 성과)	소득 안정 및 고용, 경제성장, 지식경제, 환경, 시장, 보건, 안전한 공동체, 사회 통합, 문화, 대기 질, 물 사용,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방출
UNCSD의 지속가능발전	경제구조(경제활동, 무역, 재정상태), 소비·생산(물질소비, 에너지 사용, 폐기물관리, 운송), 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안전(범죄), 인구, 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 다양성
OECD의 지속가능발전	GDP 및 인구, 소비, 에너지, 교통, 농업, 지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대기 질, 폐기물, 수질, 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종 다양성
e-나라지표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산업동향, 공정거래, 중소기업, 건설, 부동산, 교통, 해양, 농업, 임업, 어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조달, 특허, 기상, 복지, 보건, 환경, 노동, 교육, 보훈, 여성/가족, 청소년, 경찰, 해양경찰, 재난안전, 문화/예술/산업, 관광, 체육, 문화제, 환경일반,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폐기물, 상하수도, 토지오염
이명박정부 국정지표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형 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수요자 중심의 교육 경쟁력 강화, 핵심 인재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비전 2040	시장중심 경제운용, 시장인프라 정비, 개방과 자유화, 과학기술(기술인프라 강화, 연구개발체제 개편, 과학기술투자 확대), 교육(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 고등교육의 다양화/글로벌화, 교육산업 육성), 사회복지(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중산층 복원 및 근로빈곤층 지원, 사회서비스 확충, 고용/복지전달 체계 통합), 사회통합(열린문화, 다문화 수용, 일과 삶 양립하는 기반 구축)

□ 주요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지표분류 항목을 지표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으며, 상당수의 경우 주제별 분류와 위계별 분류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문별 분류나 평면적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도 일부 확인

[표 7-2] 주요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지표분류기준에 따른 분석

사례	분석 내용
미국 (SUSA)	· 부문별 분류: 11개 영역 · 평면적 모델: 하위 영역 분류 없이 영역별 지표 제시, 영역 - 지표
미국 (GMAP)	· 부문별 분류: 8개 영역 · 평면적 모델: 하위 영역 분류 없이 영역별 지표 제시, 영역- 지표
영국 (SDI)	· 주제별 분류: 21개 분야는 경제 및 환경 분야로 압축 가능, 그러나 하위 이슈별 분류는 주제별 분류의 성격을 지님 · 위계적 모델: 21개 분야 - 51개 이슈 - 지표
호주 (MAP)	· 주제별 분류: 국가발전의 4가지 차원 제시 · 위계적 모델: 4개 차원 - 18개 주요영역 및 5개 보조영역 - 지표
호주 (ESA)	· 주제별 분류: 사회진보, 경제발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 위계적 모델: 3개 차원 - 24개 중범위 지표분류체계 - 지표
스위스 (MONET)	· 주제별 분류: 사회통합(social solidarity),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환경적 책무(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캐나다 (캐나다 성과)	· 주제별 분류: 3개 분야(경제, 사회, 국제)별로 하위 국정성과영역을 주제별로 제시 · 위계적 모델: 3개 분야 - 하위 국정성과분야 - 각 부처별 전략성과목표
UNCSD의 지속가능발전	· 부문별 + 주제별: 15개 영역을 부문별로 제시하되 일부는 주제별 분류의 성격을 지님(형평성 등) · 위계적 모델: 4개 분야 - 15개 영역 - 세부 항목 - 지표
OECD의 지속가능발전	· 부문별 분류: 2개 분야(환경, 사회/경제)별로 제시된 이슈는 부문별 분류 · 위계적 모델: 2개 분야 - 15개 이슈 - 지표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 부문별 분류: 5개 분야(경제, 사회, 사회투자·균형발전, 정치·행정, 외교·안보·통일)별로 중간지표를 부문별로 제시 · 위계적 모델: 5개 분야 - 중간지표 - 세부지표
이명박정부 국정지표	· 주제별 분류: 5개 대분류 및 22개 소분류가 주제별 분류 방식 · 위계적 모델: 대분류 - 소분류 - 지표(?)
비전 2040	· 주제별 분류: 7개 대분류 및 25개 소분류가 주제별 분류 방식 · 위계적 모델: 대분류 - 소분류 - 지표(?)

2. 목적가치와 기여가치의 구분

- MacRae(1985)에 따르면, 정책지표의 체계는 추상성의 정도가 높은 목적가치(end-value) 변수와 구체성의 정도가 높은 기여가치(contributory) 변수를 포함하는 구조

[표 7-3] 목적가치와 기여가치에 따른 영역별 지표분류

영역	목적가치	기여가치
건강과 질병	완벽함으로서의 건강 수명 Quality-adjusted life years 선호 만족 비용	질병의 발생정도 Capacity to function 제공된 서비스
Social mobility (사회 이동성)	자유 경제적 효율성 주관적 행복(well-being) 형평성	사회이동의 정도(상승 및 하강) 순 상승 이동성 mobility by groups
물리적 환경	Quality-adjusted life years 주관적 행복 선호 만족 환경에서의 완벽함 다른 중들의 웰빙	Concentration of substances in air, water, workplace 주거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이용가능성
수입과 가난	경제적 혹은 물질적 웰빙 형평성 수요, 권리, 최소한도(최저생활?)	경제상황 기회 균등 및 재분배 촉진 정책
대중질서와 안전	주관적 삶의 질, 수명 경제적 행복 형평성(빈자로의 이전) 처벌 처벌받은 사람의 양과 질	범죄와 피해의 정도 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출 감옥 환경
교육, 과학, 예술	생산, 인적 자본에 대한 효과 삶의 질 형평성 미적인 창조 및 감상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해	학생들의 성과 학교 인종 차별 폐지 연구 정도 문화 시설 이용 가능성
참여와 소외	단기적 웰빙 정책이나 시스템과 연관된 장기적 웰빙	참여 소외

- 건강, 수명, 자유, 경제적 효율성, 주관적 행복, 형평성, 삶의 질, 만족도, 비용 등은 추상성이 높은 목적가치에 해당하며, 이러한 목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여가치로써 질병의 발생정도, 사회이동의 정도,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이용가능성, 범죄와 피해의 정도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목적가치와 기여가치에 대한 실용적 접근
 - 목적가치와 기여가치의 개념은 일반적인 정부성과지표 구성 과정에서 관리지표와 성과지표의 개념으로 등치될 수 있음
 - 추상성이 높고 정책목적과의 연계가 높은 편이나 직접적인 정책활동과 연계성이 다소 낮을 경우 관리지표로 분류
 - 구체성이 높고 직접적인 정책활동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경우 성과지표로 분류

[표 7-4] 목적가치와 기여가치의 실용적 접근

목적 가치	⇨	관리지표	추상성이 높고 직접적인 정책 활동과 연관성이 다소 약한 정책지표
기여 가치	⇨	성과지표	구체성이 높고 직접적인 정책 활동의 결과물로서 이해되는 정책지표

3. 지표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

- 지표분류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의 활용
- 상향식 접근(bottom-up)은 기존의 정부 기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분야를 구성
 - 일반행정,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등으로 분류, 정책조정협의체 구성, 정부업무평가 그룹핑 등에 활용
 - e-나라지표 등 기존의 정책지표 분류는 대체로 이러한 방식에 근거함
- 하향식 접근(Top-down)은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이라는 국정의 최고목표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분야, 정부 기능 등을 분류하는 체계
 - 국가발전은 다양한 정책가치를 포함하여 국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하위로 분류되는 주요 정책분야도 정책가치에 입각한 주제별 분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경제 발전 모델”과 인권, 복지, 환경 등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하는 “사회 발전 모델”과 함께 최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적 특성 반영
- 하향식 접근을 선택할 경우,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설계의 개념적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정책가치에 근거한 국가발전모델 수립 필요

- 국가정책지표체계 사례들은 대부분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이라는 방향성 하에서 3-5개의 정책분야 설정 및 정책분야별 하위 정책영역을 설정
- 국가발전은 정권별로 중점을 두는 주요 국정방향이나 정책과제에 따라 명칭 변경이 가능하며,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지역균형발전, 호주의 발전, 캐나다의 성과 등이 이러한 국가발전의 개념을 반영
- 국가발전 모델 수립 시 해외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세계적 추세인 지속가능발전 모델(경제, 사회, 환경)을 포함해야 함
- 한국의 경우 분단국가로서 인적 자원에 의존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해온 한국의 특성을 감안
-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 위한 주요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STEEP 모형은 한국형 발전모델을 설명하는데 적합함(사회(Society), 과학기술(Technology), 자원환경(Ecology), 경제(Economy), 외교안보정치(Politics))

4. 분류체계 기준으로써 부문(field/topic)과 주제(theme)

- 부문별 분류는 정부 조직이나 기능 분류처럼 비교적 가치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특징에 따른 분류 방식이며, 주제별 분류는 가치 개입적인 분류 방식으로써 설계자의 의도, 목적 등이 분류 기준에 반영되는 방식임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사례는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제별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국가발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모델 하에 경제, 사회, 환경 등의 거시적 차원의 하위 영역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음
 - 호주 MAP의 경우 경제 차원의 하위분류는 경제적 어려움, 국부, 생산성, 경쟁력, 개방성 등 목적성이 반영된 주제별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환경 부문의 분류 체계에서 수질과 수자원의 분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주제와 환경자원에 대한 주제를 다르고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
 - 정책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정책가치)이 분류체계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스위스 MONET 정책지표체계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표 7-5] 스위스 MONET 분류체계에서의 주제별 분류 적용

부문	세부 사례	지속가능발전 원리		
		사회 통합	경제 효율성	환경 책임성
사회 안전과 물질적 풍요	Social insurance, assistance, income	2c	9a	
보건		2b		14a
주관적 삶의 조건	Contentment, happiness, well-being, social integration	3a,3b,6d	12	19
주거	Living space, housing quality	2a		

- 이명박정부의 국정지표, 비전 2040의 체계는 대분류가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능동적 복지,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통합과 균형의 국가거버넌스 등 가치지향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주제별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e-나라지표의 정책분류체계는 부처의 기능별 분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는 국가정책의 방향성 제시라는 역할보다는 지표에 대한 부처의 관리기능 효율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두 분류 방식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7-6] 지표분류체계의 주제별 분류와 부문별 분류 비교

주제별 분류	부문별 분류
국가정책의 방향성 제시	국가정책부문 전반에 대한 포괄적 분류 부처의 지표 관리 기능 효율화

5. 분류체계의 범위 설정 기준으로서 평면적 모델과 위계적 모델

- 지표분류체계의 설계와 관련해, 분류체계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평면적 모델과 위계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음
- 평면적 모델은 미국 SUSA 및 GMAP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문별 영역별로

하위 영역의 분류 없이 지표를 제시하는 방식임

- 국가발전 방향에 따른 자원배분 및 역량집중을 위해 국가발전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의 필요성 제기
- 무수한 지표 중에서도 국가발전 방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단일의(single), 상호작용적이며(interactive), 신뢰할만한(trusted) 정책지표 개발
- 소규모의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엄격한 분류체계 없이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한 분류체계 형성

□ 호주의 MAP 등 대부분 사례에서 나타나는 위계적 모델은 3-7개 정도의 거시적 차원에 따라 차원별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하위영역별로 세부지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호주의 MAP은 4가지 차원별로 주요 영역과 보조 영역을 두고 있으며, 각 영역 별로 발전 지표(progress indicator) - 보조적인 발전 지표 supplementary progress indicator) - 기타 지표(other indicator)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정책 영역 분류에서도 위계적이며, 세부 영역별 지표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위계적 모델을 취하고 있음

[표 7-7] 호주 MAP에 나타난 지표분류체계의 위계적 모델 적용

Headline Dimensions	Progress Indicator	Supplementary Progress Indicator	Other Indicators
Health	Life expectancy at birth	Proportion of people surviving to ages 25, 50 and 75 Infant mortality rate Avoidable deaths Incidence of all cancer Incidence of heart attacks Burden of disease	International life expectancy at birth Living with disability Causes of death
Education and training	People aged 25-64 with a vocational or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for those aged 15-19 Year 7/8 to Year 12 apparent retention rate Human capital stock Education participation rates and attainment levels for those aged 15-64 OECD literacy rates, science, reading and mathematics Indigenous to non-Indigenous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ttainment ratios Female students as a proportion of all students	International level of higher edu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for those aged 15-64 Level of highest non-school qualification for those aged 25-64

- 정책분류의 문제는 해당 정책지표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 고객은 국정최고관리자, 정책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 일반 국민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SUSA 등 핵심지표를 단순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평면적 모델은 국정최고관리자와 일반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호주의 MAP, 캐나다의 성과(Canada's Performance) 등 위계적 모델은 국정최고관리자, 정책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수요자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임

- 위계적 모델과 평면적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7-8] 위계적 모델과 평면적 모델에 따른 지표분류체계의 특징

평면적 모델	위계적 모델
단순하며 압축적임 일반국민, 국정최고관리자 수요 반영	복잡하고 질서정연함 다양한 수요자 입장 고려 가능

제2절 국가정책지표 지표분류체계 설계원칙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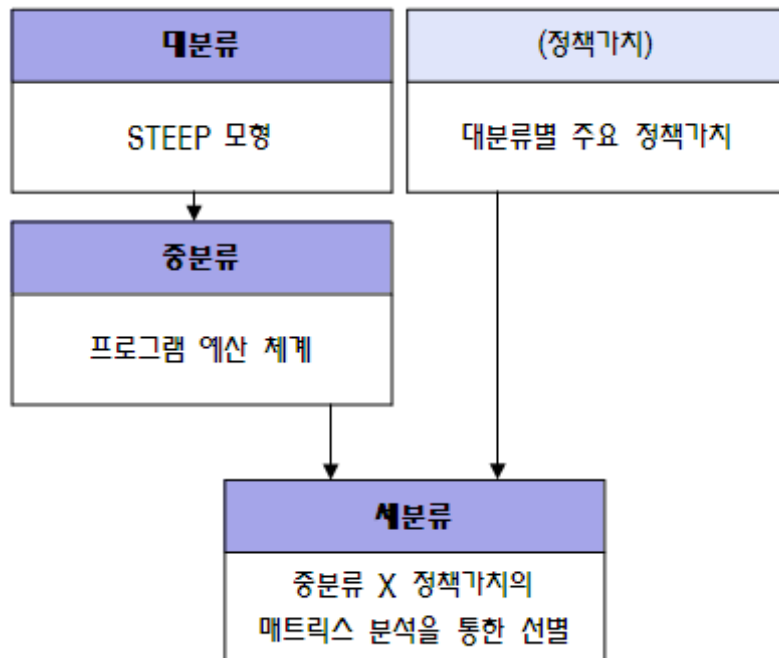
1. 부문별 분류와 주제별 분류의 혼합을 통한 지표분류체계 설계

-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구축될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기초 작업으로서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에 대한 초안을 작성
-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설계원칙으로 부문별 분류와 주제별 분류의 방식의 방식을 선택
 - 부문별 분류 방식의 경우, 기존의 e-나라지표와 같이 정책부문별로 개별 지표들을 분류함으로써 사용자가 관련 정책지표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정책지표 작성기관 역시 지표분류체계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정책지표체계가 갖고 있는 정책의 소망성 및 목적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한 부문별 분류에 추가적으로 정책가치를 반영한 주제별 분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주제별 분류가 적용될 경우, 정책부문과 상관없이 유사한 정책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정책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발전 및 정책소망성 달성 여부에 대한 용이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음
- 부문별 분류와 주제별 분류의 혼합 방식
 - 본 연구에서는 지표분류체계의 설계와 관련해 대분류와 중분류 수준에서는 부문별 분류를 적용하며, 세분류 수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분류별 정책가치를 추출하여 이를 반영
- 대분류 수준에서는 STEEP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진단과 함께 한국적 발전모델의 주요 정책영역으로서 고려
 - 일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등 최근의 국가발전 모델에서는 기존의 경제와 사회 영역에 더해 환경 영역에 대해 강조점을 두고 있음
 - 우리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외교정치안보 영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 과학기술 영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분류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STEEP 모델은 사회(Society), 과학기술(Technology), 환경자원(Ecology), 경제

(Economy), 정치(Politics) 부문에 대한 정책영역을 상정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미래연구에서도 이러한 STEEP 모델을 통해 현재 사회의 진단 및 미래 사회의 예측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미래 정책수요의 파악에서도 강점을 가짐

- 중분류 수준에서는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분류체계를 적용하며, STEEP 모델에 따른 대분류의 각 영역별로 분류항목을 배치
 - 정부의 활동과 관련해 기존의 정부기능분류모델(BRM)이 존재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정부 기능 중심의 분류라는 점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활동과는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반면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분류체계는 예산사업의 분류를 위한 목적에서 구축되었으며, 예산사업은 결국 정책활동으로 등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지표에 대한 분류체계로서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분류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할 것으로 판단
 - 본 연구에서는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중분류를 인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를 대분류 수준인 STEEP 모델에 맞추어 각 지표분류항목을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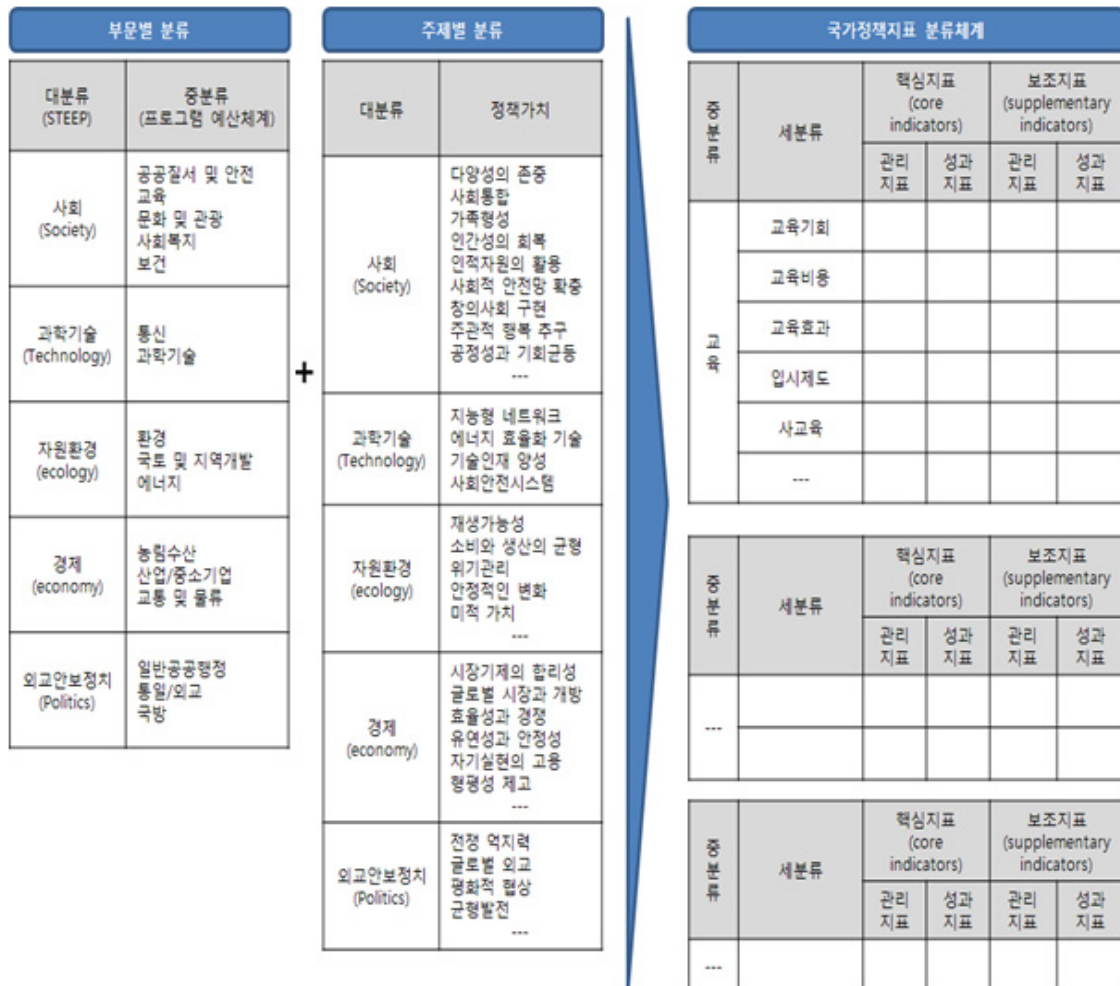
[그림 7-1]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설계원칙



- 세분류 수준은 대분류별로 정리된 주요 정책가치를 중분류의 각 영역에 대응하여 도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세분류는 주제별 분류와 함께 부문별 분류체계를 혼합적으로 반영하게 됨

- 이러한 주제별 분류와 부문별 분류의 혼합을 통한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설계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음
- 대분류로서 사회 영역에는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등이 포함되며, 사회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가치로 다양성, 사회통합, 인간성, 공정성, 기회 균등 등을 설정
 - 중분류인 교육 부문에 대해 각 정책가치를 대응시켜 교육기회, 교육비용, 교육효과, 입시제도, 사교육 등의 세분류를 도출
 - 대응되는 정책가치의 내용에 따라 핵심지표와 보조지표의 구분, 관리지표와 성과지표의 구분이 가능

[그림 7-2]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설계의 모의적 사례



2.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가치체계 모형의 수립

-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설계를 위해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을 적용하고 있으며, 하향식 접근에서는 무엇보다도 지표분류체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국가발전모델의 설정이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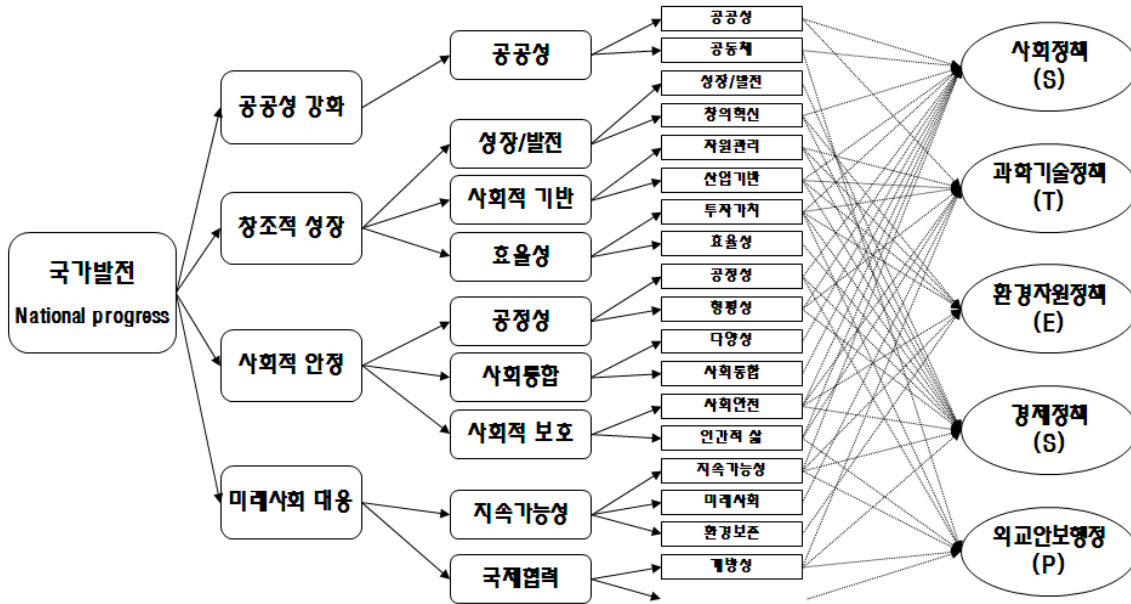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국가발전모델의 개념이 전제된 상황에서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가 설정되며, 국가발전모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
 - 향후 실제로 국가정책지표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근간이 되는 국가발전모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또한 각 정권마다 최고정책결정자가 인식하는 국가발전모델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국가발전모델을 상정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점이 많음

-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설계를 위한 차원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가치들을 탐색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한 정책가치체계의 모형을 수립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발전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국가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가치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개괄적 차원에서 정책가치체계의 모형을 수립
 -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정책가치체계 모형은 특정 정권의 정책이념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국가발전모델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향식 접근보다는 개별 정책과제들의 분석을 통한 상향식 접근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STEEP 모델에 따른 각 정책영역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가치를 추상적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상향적으로 종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국가발전모델로서 공공성 강화, 창조적 성장, 사회적 안정, 미래사회 대응이라고 하는 네 가지 정책가치를 제시
 - 각 정책영역별로 관계 정부부처의 전략과제들을 수집하여 이를 개별 정책가치로 목록화하였으며, 유사한 정책가치들을 종합하여 각 정책영역별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18개의 하위 정책가치를 발굴

- 각 정책영역별로 공통적인 정책가치를 발굴함으로써 정책영역에 상관없이 정책가치에 따라 관련 정책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18개의 정책가치는 다시 9개의 상위 정책가치로 포괄되며, 최종적으로 공공성 강화, 창조적 성장, 사회적 안정, 미래사회 대응이라는 4가지 정책가치로 종합

[그림 7-3]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가치체계 모형 수립



3.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설계의 절차

- 본 연구에서의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는 개별 정부부처의 전략과제의 검토와 함께 미래 정책수요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그리고 관련 정책영역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설계
 - 각 정부부처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과제는 해당 부처의 정책목적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 모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더하여 미래행정수요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향후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주요 정책가치 및 정책영역에 대해서도 지표분류체계 설계과정에 반영
- 일차적으로 연구진 내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지표분류체계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 사회, 과학기술, 환경자원, 경제, 외교안보행정의 각 정책영역별로 20명 내외의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
 - 의견조사의 내용은 현재 제시된 정책영역별 정책가치 가운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부분과 추가적인 정책가치의 보완 필요, 그리고 개별 세분류항목에 대한 적절성 여부의 검토로 이루어짐
-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설계에 있어 특정한 정책가치나 정책이슈를 배제하기보다는 최대한 포괄함으로써 분류체계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 분류체계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통해 분류체계의 범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및 보완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는 향후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과정에서 적절한 추진체계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의 기초자료로 참고

제3절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작성

1.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총 5개 대분류, 16개 중분류, 354개 세분류를 포함한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를 작성

[표 7-9]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요약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부문별 분류	사회 (중분류 4, 세분류 121)	교육	32
		문화 및 관광	27
		사회복지	39
		보건	23
	과학기술 (중분류 2, 세분류 42)	통신	19
		과학기술	23
	환경자원 (중분류 3, 세분류 52)	환경	24
		국토 및 지역개발	14
		에너지	14
	경제 (중분류 3, 세분류 66)	농림수산식품	16
		교통 및 물류	13
		산업 및 중소기업	37
	외교안보행정 (중분류 4, 세분류 73)	통일외교	14
		국방	12
		공공행정	27
		공공질서안전	20
합계	16	354	

주제별 분류	공공성 강화 (세분류 39)	공공성	39
	창조적 성장 (세분류 127)	성장/발전	37
		사회적 기반	39
		효율성	51
	사회적 안정 (세분류 107)	공정성	43
		사회통합	13
		사회적 보호	51
	미래사회 대응 (세분류 81)	지속가능성	59
		국제협력	22
	합계	16	354

- 부문별 분류를 적용할 경우, 총 5개 정책분야를 기초로 5대 대분류, 16대 중분류, 354개의 세분류를 작성
 - 사회 :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의 4대 중분류에 대한 121개 세분류
 - 과학기술 : 통신, 과학기술의 2대 중분류에 대한 42개 세분류
 - 환경자원 :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에너지의 3대 중분류에 대한 52개 세분류
 - 경제 : 농림수산, 교통 및 물류, 산업 및 중소기업의 3대 중분류에 대한 66개 세분류
 - 외교안보행정 : 통일외교, 국방,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의 4대 중분류에 대한 73개 세분류

- 주제별 분류를 적용할 경우, 공공성 강화, 창조적 성장, 사회적 안정, 미래사회 대응의 4개 정책가치별로 세분류를 작성
 - 공공성 강화 : 공공성의 정책가치와 관련해 39개의 세분류
 - 창조적 성장 : 성장/발전, 사회적 기반, 효율성의 정책가치와 관련해 127개의 세분류
 - 사회적 안정 : 공정성, 사회통합, 사회적보호의 정책가치와 관련해 107개의 세분류
 - 미래사회 대응 : 지속가능성, 국제협력의 정책가치와 관련해 81개의 세분류

2.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구성

- 사회, 과학기술, 환경자원, 경제, 외교안보행정의 5개 정책영역에 따라 각각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의 초안을 작성

- 지표분류체계 초안을 현행 e-나라지표의 지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였으며, 해당 세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 지표들의 규모를 확인
 - e : e-나라지표에 포함된 개별 지표의 개수를 의미
 - 지표분류항목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e-나라지표를 통해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유사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우선적인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

[표 7-10]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 사회 영역

	(1) 사회 (121개 세분류, e: 204개 지표)							
	교육 (32개 세분류, e: 40개 지표)		문화 및 관광 (27개 세분류, e: 38개 지표)		사회복지 (39개 세분류, e: 104개 지표)		보건 (23개, e: 22개 지표)	
공공성 (14개 세분류, e: 28개 지표)	공교육내실화 (1) 사교육경감(1) 교육여건개선 (5) 교육접근성(5)	관광시설관리	공공문화시설 (3) 공공체육시설 (1) 문화재등록(3)	공공복지시설	고용보험(3) 공공부조(1) 공적연금(2)		건강보험(2) 공적의료지원 (1)	
공동체가치 (12개 세분류, e: 31개 지표)	시민교육 글로벌교육	문화교류 지역문화발전	문화유산보존 (5)	지역공동체사 업 자활공동체	가족공동체(8) 국가보훈(15) 기부및자원봉 사(1)	의료공동체	건강나눔(2)	
공정성 (9개 세분류, e: 8개 지표)	입시제도 교육격차해소 교육정보공개	문화접근성 문화격차		복지전달체계	양성평등(8)	의료접근성 의료정보공개		
사회안전 (10개 세분류, e: 18개 지표)	학교폭력방지 교육시설안전	관광안전 체육시설안전			산업재해(2) 아동청소년보 훈(6) 여성보호(4)	의료사고	식품안전(1) 질병관리(5)	
형평성 (12개 세분류, e: 25개 지표)	교육복지	장애인교육지 원(4)	문화복지		한부모가정(1) 기초생활보장 (1) 노인복지(4) 아동복지(4) 장애인복지(5) 청소년복지(4)	의료급여	모성보호(1) 청소년건강(1)	
사회통합 (6개 세분류, e: 8개 지표)	다문화교육 동일교육	세대간소통			노사협력(7) 빈부격차(1)	의료지원		
다양성 (7개 세분류, e: 3개 지표)	대안학교 학력인정	문화다양성			결혼이민(1) 외국인근로자 (1) 재외동포(1)	의료선택권		
산업기반 (9개 세분류, e: 15개 지표)	교육산업	산학협력활성 화(1)	관광산업(5) 문화산업(2) 미디어산업(4) 스포츠산업(2)	사회복지산업 사회적기업			보건산업(1)	
지속가능성 (8개 세분류, e: 12개 지표)	지속가능발전 교육	인적자원개발 (3)	지속가능관광		고령화(3) 출산및보육(1) 지속가능복지 (2)		기대수명(1) 출생및사망(2)	
인간적 삶 (14개 세분류, e: 29개 지표)	직업교육 학생인권	평생교육확대 (3)	문화적 풍요	문화생활(2) 생활체육(2) 여가활동(3)	주관적행복	고용기회(4) 일가정양립(1) 좋은 일자리 (8) 주거안정(1)	생명윤리 건강한 삶(5)	
창의혁신 (9개 세분류, e: 11개 지표)	창의인재육성 대학교육 교육자유희화	교육개방성(1) 교육방식개선 (2)	문화예술창작	인재양성(6)		인재양성(2)	보건의료 기술개발	
투자가치 (VFM) (11개 세분류, e: 18개 지표)	교육경쟁력(6) 교육성과향상 (3) 교육투자(5)	글로벌코리아 문화관광예산		생산적복지	노동비용(1) 복지예산(2)	의료만족도	의료비용(1) 의료시설(1)	

[표 7-11]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 과학기술 영역

	(2) 과학기술 (42개 세분류, e: 37개 지표)			
	통신 (19개 세분류, e: 17개 지표)		과학기술 (23개 세분류, e: 20개 지표)	
공공성 (5개 세분류, e: 9개 지표)	공영방송	우정사업(1)	과학기술인프라 과학기술지원제도	국가R&D(8)
인간적 삶 (3개 세분류, e: 2개 지표)		정보격차(1) 정보문화(1)	과학기술윤리	
산업기반 (4개 세분류, e: 5개 지표)		IT산업(3) 방송통신산업(2)	산학협력및기술사업화 원천기술개발	
사회안전 (4개 세분류, e: 4개 지표)	정보자원보호	개인정보보호(2) 사이버범죄(2)	과학기술위험	
투자가치(VFM) (6개 세분류, e: 9개 지표)	디지털융합서비스 국가정보화수준 통신서비스만족도	정보화수준(5)		과학기술경쟁력(2) R&D성과(2)
창의혁신 (8개 세분류, e: 8개 지표)	정보통신기술개발 정보통신인력양성		과학기술인력양성 두뇌유출 과학기술혁신시스템	민간R&D(2) 지식재산권 창출(4) 지식재산권 보호(2)
미래사회 (9개 세분류, e: 0개 지표)	스마트사회 빅데이터활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래첨단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우주개발, 원자력기술개발, 나노기술개발, 생명과학기술개발	
개방성 (3개 세분류, e: 0개 지표)	방송통신국제협력		국제과학기술협력 기술무역	

[표 7-12]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 환경자원 영역

	(3) 환경자원 (52개 세분류, e: 90개 지표)				
	환경 (24개 세분류, e: 36개 지표)		국토 및 지역개발 (14개 세분류, e: 44개 지표)		에너지 (14개 세분류, e: 12개 지표)
자원관리 (10개 세분류, e: 20개 지표)	자원재활용	상하수도관리(2) 폐기물관리(2) 화학물질관리(1)	지역자원관리	수자원관리(6)	국내자원개발 (1) 에너지수급관 리(3) 원자재수급관 리(3) 해외자원개발 (2)
지속가능성 (10개 세분류, e: 28개 지표)	생태계복원	기후변화(7) 자연생태계유지(3) 환경분쟁조정(1)	지역갈등관리	국토관리이용(4) 도시계획(6) 인구구조(5)	에너지절약 전력수급관리 (2)
환경보존 (7개 세분류, e: 12개 지표)		대기환경개선(2) 생활환경개선(2) 수질환경개선(2) 토양환경개선(2) 해양환경개선(4)	친환경건축		바이오에너지
산업기반 (8개 세분류, e: 23개 지표)	기상산업	재활용산업(1) 친환경제품(1) 환경오염방지산업(1)	산업단지관리	건설산업(6) 부동산시장(16)	에너지산업
창의혁신 (8개 세분류, e: 1개 지표)	환경기술 기상관측기술 환경전문인력		도시기반기술 수자원관리기술		에너지효율개선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1)
사회안전 (4개 세분류, e: 3개 지표)		자연재해예방(3)	안전도시		원자력안전 전력전기안전
투자가치(VFM) (4개 세분류, e: 3개 지표)	환경보건수준	환경개선효과(1) 환경의식(1)		지역균형발전(1)	에너지목표관리

[표 7-13]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 경제 영역

	(4) 경제 (66개 세분류, e: 168개 지표)					
	농림수산물 (16개 세분류, e: 34개 지표)		교통 및 물류 (13개 세분류, e: 33개 지표)		산업 및 중소기업 (37개 세분류, e: 101개 지표)	
지속가능성 (11개 세분류, e: 36개 지표)		농업생산기반(4) 농림수산업경쟁력(3) 산림자원관리(7)	녹색교통 지속가능물류	도로기반시설(6)	녹색산업 남북경제교역 산업인력관리	고용확대(1) 산업구조(2) 금융건전성(13)
효율성 (8개 세분류, e: 29개 지표)	농식품수급관리 농식품가격관리			수송효율성(7)		생산성향상(3) 물가지수(3) 자본시장효율성(11) 가계대출(3) 기업자금조달(2)
성장/발전 (6개 세분류, e: 24개 지표)					지식기반산업 미래산업	경기동향(4) 광공업및제조업(12) 서비스업(3) 신성장동력(5)
형평성 (7개 세분류, e: 21개 지표)		농어민복지(3) 농어촌소득향상(5)	대중교통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금융지원	중소기업현황(11) 중소기업지원(2)
산업기반 (7개 세분류, e: 25개 지표)		농축산업(2) 수산업(2) 임업(2)	물류서비스산업	육상운송산업(6) 항공물류산업(4) 해상물류산업(9)		
개방성 (8개 세분류, e: 15개 지표)		농림수산업개방(1)	물류표준화		자유무역협정(FTA)	대외신인도(2) 수출입거래(4) 외국인투자(3) 해외투자(2) 외환관리(3)
공정성 (6개 세분류, e: 7개 지표)			교통물류면허관리		공정무역 하도급계약공정	공정거래(1) 공정경쟁(2) 대기업정책(3) 소비자보호(1)
사회안전 (4개 세분류, e: 6개 지표)		농산물위생안전(2) 산림재해(3)		교통안전(1)	개인파산/회생	
창의혁신 (6개 세분류, e: 3개 지표)	농림수산물기술개발 신품중개발		교통물류정보화		창업활성화	기술혁신(2) 기술인력육성(1)
자원관리 (1개 세분류, e: 7개 지표)		산림자원관리(7)				

[표 7-14]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 외교안보행정 영역

	(5) 외교안보행정 (73개 세분류, e: 204개 지표)			
	통일외교 (14개 세분류, e: 21개 지표)	국방 (12개 세분류, e: 22개 지표)	공공행정 (27개 세분류, e: 83개 지표)	공공질서안전 (20개, e: 78개 지표)
공동체 가치 (8개 세분류, e: 16개 지표)	동아시아공동체	남북교류협력(7) 북한이탈주민(1) 재외국민보호(3)		시민참여행정 사회참여(1) 자치행정(4) 자율방범치안
지속가능성 (13개 세분류, e: 27개 지표)	외교전문가육성 한반도평화	국민안보의식 군비통제 국방개혁	병역자원(5)	고용지원(1) 공공기관선진화(2) 재정건전성(9) 재정확보(2) 지방재정(8) 시민의식함양 공직윤리
효율성 (21개 세분류, e: 77개 지표)		국제기구활동(2) 재외공관운영(1)	국방경영(2) 방위산업(3) 방위비지출(3)	행정간소화 규제개혁 예산집행효율성 행정서비스만족도 공직채용(3) 관세행정(3) 전자정부(3) 정부조직관리(4) 조달사업(4) 조세행정(19) 재정운용관리(4) 사법경찰개혁 과학수사(1) 법무행정(13) 보호관찰(7) 안전관리활동(5)
사회안전 (6개 세분류, e: 35개 지표)				공공질서(1) 교통안전(2) 범죄단속(19) 범죄예방(2) 아동보호(2) 재난관리(9)
교류협력 (11개 세분류, e: 19개 지표)	자원외교	공적개발협력(3) 국제평화유지(1) 민간교류(1) 조약및수교(2)	남북군사회담(2) 대외군사교류(2)	민관인력교류 공공갈등관리 출입국관리(5) 외국인범죄(3)
인간적 삶 (6개 세분류, e: 14개 지표)			군인복지(5)	고충민원(2) 공무원복지(1) 법률구조(1) 인권보호(2) 재소자재활(3)
공정성 (8개 세분류, e: 16개 지표)	국제분쟁대응	민군갈등관리 병무행정공정성		공정과세(4) 정보공개(5) 조세부담(1) 부정부패척결(3) 사법공정성(3)

제8장

국가정책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



제8장 국가정책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

제1절 국가정책지표 진단을 통한 개발 대상 선정

- 각 정책역역별 정책전문가 조사를 통한 주요 핵심 정책가치와 핵심 정책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
 - 사회·과학기술·환경자원·경제·외교안보행정 관련 정책전문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영역별 주요 정책가치 확인
 - 향후 현안핵심통계 개발을 위한 착안기준으로 고려 가능
- 현행 e-나라지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국가정책지표 新분류체계를 적용하여 현행 국가정책지표 수준과 개발 필요성 진단
 - e-나라지표에 포함된 709개의 정책지표들을 新분류체계에 따라 매칭함으로써 지표분포현황 및 개발 필요영역 판단
 - 향후 긴급통계 개발을 위한 착안기준으로 고려 가능
- 현안핵심통계 및 긴급통계 개발을 위한 정책지표 진단
- 현안핵심통계 개발 대상 영역
 - 사회정책 : 공공성(공교육내실화 등), 공정성(의료정보공개 등), 지속가능성(지속가능관광 등), 인간적 삶(생명윤리 등)
 - 과학기술정책 : 공공성(과학기술인프라 등), 산업기반(원천기술개발 등), 미래사회(스마트사회 등)
 - 환경자원정책 : 자원관리(폐기물관리 등), 지속가능성(전력수급관리 등), 환경보존(대기환경개선 등)
 - 경제정책 : 지속가능성(농업생산기반 등), 효율성(생산성향상 등), 형평성(정책금융지원 등)
 - 외교안보행정 : 지속가능성(한반도평화 등), 효율성(행정서비스만족도 등)
- 긴급통계 개발 대상 영역
 - 사회정책 : 학교폭력, 관광안전, 의료정보공개, 문화다양성 등
 - 과학기술정책 : 통신서비스만족, 과학기술위험, 국제기술협력 등
 - 환경자원정책 : 친환경건축, 바이오에너지, 에너지목표관리 등
 - 경제정책 : 농식품수급관리, 지식기반산업, 개인파산/회생 등
 - 외교안보행정 : 국제분쟁대응, 병무행정공정성, 민관인력교류 등

제2절 개별 국가정책지표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주요 쟁점

1. 주요국의 정책지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주요국의 정책지표를 ‘STEEP모형’과 ‘프로그램 예산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분석체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었음.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정책지표체계를 정립하는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첫째, 주요국의 정책지표에서는 대부분 목적가치 지표와 기여가치 지표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정책가치(정책철학)의 지표반영 노력이 체계화됨
 - 다음의 표를 보면, 교육, 사회복지, 보건, 환경, 산업/중소기업(경제)은 적어도 4개국 이상이 각 분야의 정책지표(목적가치 지표와 기여가치 지표)를 포함
 - 이러한 분야는 국가정책지표의 핵심분야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한 영역임
 - 반면 통일/외교, 국방 등의 경우에는 2개국 이하만이 관련 분야 정책지표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
 - 궁극적으로 주요국의 정책지표에서는 대부분 목적가치 지표와 기여가치 지표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정책가치(정책철학)의 지표반영 노력이 엿보임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나라의 정책지표 핵심은 크게 사회(사회복지, 보건), 자원환경(환경), 경제(산업/중소기업)의 부문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사회, 자원환경, 경제 부문의 지표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정책수단적 측면의 기여가치 지표가 대부분임. 즉, 정책영역에 대한 여러 차원의 추상적인 목적가치를 거의 고려 안하고 있는 실정임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목적가치 변수와 기여가치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상호 연계성이 높은 정책지표의 정립이 필요함

[표 8-1] 주요국의 정책지표 관련 분야 현황 분석

대분류	중분류	목적가치지표와 기여가치지표				
		미국	영국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사회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교육	○	○	○	○	×
	문화 및 관광	○	×	○	○	○
	사회복지	○	○	○	○	○
	보건	○	○	○	○	○
과학기술	통신	×	×	○	○	×
	과학기술	×	×	○	○	×
자원환경	환경	○	○	○	○	○
	국토 및 지역개발	×	○	○	○	×
경제	농림수산	×	○	○	×	×
	산업/중소기업	○	○	○	○	○
	교통 및 물류	×	○	○	○	×
외교안보 정치	일반공공행정	×	×	○	○	○
	통일/외교	×	○	×	○	×
	국방	×	×	×	×	×

- 둘째, 정책지표 자체가 뚜렷한 목적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기여가치로써 지표가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목적가치와 기여가치는 스위스와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호주의 ESA(Essential Statistical Assets for Australia)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스위스와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에서는 사회 통합, 환경적 책임, 경제 효율, 평등, 형평성, 지속가능성, 균등한 분배 등과 같은 목적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뚜렷하게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환경의 지속발전과 자원의 보전이라는 목적가치를 위

하여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집중율, 재생에너지, 지하자원 매장량을 기여가치로 삼고 있으며, 경제 효율의 증진을 위한 기여가치로 GDP대비 투자금액, 공공부채의 수준, 재정 이익정도, 환경관련 세금, 소득격차, 주택가격 등의 기여가치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스위스 Monet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1) 사회통합(주거환경, 동등한 기회, 사회적 결속력, 국제적 통합, 인적자본의 유지), 2) 경제적 효율성(경제시스템, 능률성/경제성, 유연성/안전성, 생산/소비, 취업, 국제무역), 3) 환경적 책무성(자원의 소비, 자원과 쓰레기, 위험, 증감률, 자연과 문화보존)으로 구분·가정하여 각각의 지표를 정립·분류하고 있음
- 호주의 ESA에서는 공공사회의 질, 사회의 발전, 웰빙, 가능성, 기대수명, 접근성 등과 같은 목적가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결국 각 나라의 위와 같은 현황은 스위스, 영국, 호주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 “국가발전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상위의 정책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 각 지표별로 정책가치를 반영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지표가 설정된다 할 수 있음

2. 우리나라 e-나라지표와 각 국가별 정책지표의 차이 분석

- 5개국의 정책지표를 분류해 본 결과 우리나라 e-나라지표와는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나라 e-나라지표를 개선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1) 지표 구성

- 예를 들어 스위스 Monet 시스템의 지표 구성은 지표 자체의 설명보다는 지표가 가지는 중요성과 그 지표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지표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음. 반면, e-나라지표는 지표 자체의 개념, 설명, 지표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같은 지표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다소 특징적 차이를 보임
- Monet 시스템은 ‘지표의 중요성, 지표해석, 지표 평가, 기타자료, 관련 지표’의 구성방식을 통일하여 각 지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지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 볼 수 있음. 반면, e-나라 지표의 경우 지표 자체의 정보제공은 상세히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지표가 이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MONET 시스템은 지표 내용 구성이 간단하며, 지표자체의 설명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각 지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표가 스위스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같은 정책지표로써 방향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e-나라지표는 지표 자체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구성으로 다소 복잡한 면이 있음. 지표 자체의 개념 정의와 지표가 어느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이용되었는지와 같이 지표 자체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8-2] Monet 시스템과 e-나라지표의 지표구성 비교

구분	monet system	e-나라지표
지표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의 중요성 (Importance of the indicator) · 지표해석(Comment) · 지표평가(Remarks) · 기타자료 (Additional Information) · 지표와 관련된 다른 지표들 (See al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표 · 지표설명 -지표개념 -의의 및 활용도 -수치해석방법 -지표해석(수치증감 및 변동요인분석, 국제비교,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지표정보 -생산기관 -출처 및 관리기관 -보유자료 · 지표관련정보 -관련용어 -작성방법 -참고통계 -관련지표 -관련파일 -참고사이트
지표내용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각 지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같은 정책지표로써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	지표 자체의 개념 정의와 지표가 어느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지,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와 같이 지표 자체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

2) 정책의 방향성 유무

□ 5개국의 정책지표를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나, E-나라지표에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임

- 5개국의 정책지표에서는 사회, 경제, 환경 분야 등 각각이 추구하는 바(정책가치, 정책철학, 지표의 구성체계, 지표 해석 등 포함)가 무엇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지표들을 선정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임
- 하지만 E-나라지표에서는 녹색성장 관련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단순히 지표의 내용으로만 경제, 사회, 문화, 정무로 구분되어야 있음
- 예를 들어 Monet시스템의 지표내용과 E-나라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지표임에도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모넡의 기대 수명(Life expectancy in good health)과 e-나라지표의 평균 수명 및 건강 수명의 내용을 보면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모넡의 기대수명지표에는 지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러한 지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또한 지표의 해석과 더불어 지표의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미칠지를 언급하고 있음
 - e-나라지표는 지표의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미래의 예측과 그를 위한 정책의 수립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표가 그 지표의 정책방향(가치)과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표구성은 다소 미흡한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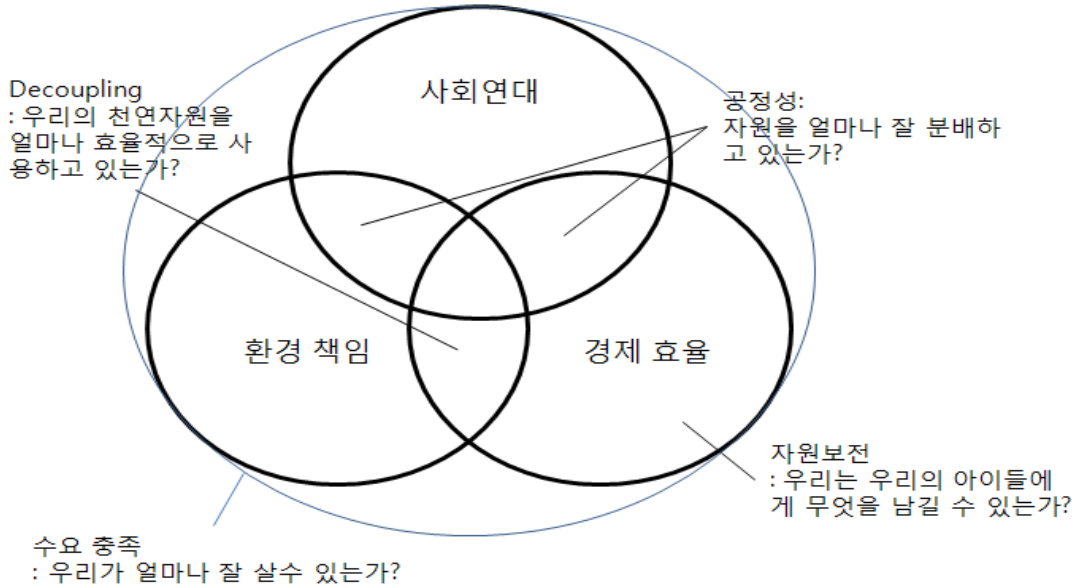
3) 분야별 내용 차이

- 5개국의 지표들은 목적가치를 매우 중요한 정책지표로서 제공하고 있지만, E-나라지표에서는 일반적인 기여가치 위주만을 제공하고 있음
 - 5개국의 정책지표들은 목적가치로써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불평등 완화, 사회 발전, 수명, 행복, 웰빙, 환경의 발전, 자원보호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들을 제공·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E-나라지표에서는 소수의 목적가치(건강증진, 양성평등)를 제외하면 대다수 일반적인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1) 정책분야 근거의 핵심축을 설정하고, 2) 이를 근거로 각각에 해당하는 분야의 추구하는 바(목적 등)를 정확하게 구축하며, 3) 이러한 목적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위한 정책수단 측면의 기여가치 지표를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 사회연대와 환경적 책임이 동시에 바탕이 되어야 하는 환경과 자원분야에서는 '우리의 천연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가?'의 해답을 줄 기여가치로써 화물 수송, 여객수송, 에너지 소비, 원자재의 소비 등을 지표로 삼아 사용하고 있음

[그림 8-1] 정책지표 상의 목적가치 정립에 있어서 3가지 핵심축 : 스위스 사례



<자료: 스위스 통계청(<http://www.bfs.admin.ch>)>

4) 국가정책지표 개발 및 관리에의 시사점

- 우리나라 E-나라지표의 지표 분류체계는 각 분야별 정책의 방향성을 담아 '정책지표 분류 및 지표 개발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별다른 특징 없이 지표들의 내용에 따라 지표를 분류해 놓아 정책지표로써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표의 정책방향성을 고려하여 재분류가 필요
-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책무성에 따라 지표가 분류되었으며, 호주의 ESA에서는 경제발전, 사회의 진보, 환경의 지속발전에 따라 지표가 분류되어 있음. 게다가 호주에서는 관련정도에 따라 A, B, C, D 지표로 나누어 관련성이 가장 높은 지표를 A등급, 관련성이 낮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표는 D등급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지표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실천지침으로 정한 '의제 21'의 주된 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예인 호주의 ESA, 스위스의 Monet,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표 분류 체계를 갖추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지표가 단순히 수치를 알려주는 도구(수단)가 아닌 하나의 정책적 방향지표로써 발전해 나가야 하며,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주요국별로 지표가 여럿이 합쳐져 하나의 정책방향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이념은 목적가치가 되어 더 큰 정책이념에 대한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재생가능한 에너지 효율, 전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 국내자원 소비량, 수자원의 사용량, 국내 물 소비량은 각 지표마다 그 특성이 다 다르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모여 '자원의 보호와 에너지 활용'이라는 이념적인 목적가치를 설정하게 됨. 또한 이러한 목적지표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여지표도 세부적으로 정립하고 있음

□ 정책에 대한 목적가치를 포함하여 설정하는 지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정책에 대한 목적가치와 기여가치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 지표체계 정립

- 정책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핵심개념축을 구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예: 사회통합, 환경적 책임성, 경제적 효율성 지표 차원 등)
- 지표구성에 있어 정책분류 구성체계를 반영하는 지표 정립이 필요 :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핵심정책)이 무엇인지를 구축/정립하고 이에 따른 지표설정을 위한 다차원적인 지표체계가 필요
- 국가의 지속적·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예: 보건, 소득(수입), 안전, 실업 문제 등 포함)
- 국가가 자원을 얼마만큼 공정하게 잘 분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둔 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예: 불평등, 빈곤 문제 포함)
- 국가가 향후 세대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인지 자원보호 차원에 초점을 두어 지표를 심도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예: 환경·경제·사회 자원 문제 포함)
- 국가가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비하고 있는지 그 최적화에 초점을 두어 지표를 심도 있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예: 생산과 소비의 효율화 문제 포함)

□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지표시스템 구축·확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정책지표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

- 정책지표의 구축에 있어 1) 개인과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고, 2) 그로 인해 산출되는 결과를 분석하며, 3) 이러한 과정하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확립하는 보다 명확한 지표모형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예: 스위스의 Stock-Flow 지표모델 등)

- 효율적인 지표관리 차원에서 국가정책지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의 점검차원에서 1년에 1회 '국가정책지표 평가시스템(가칭)' 구축·운영이 요구됨. 또한 지표체계의 목적성 및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해 분기별로 '국가정책 지표 모니터링'을 실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각 지표별로 내용 구성이 체계적이고, 지표가 정책의 핵심성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방법론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정책지표매뉴얼(가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3절 향후 개발이 필요한 국가정책지표 영역과 정책지표 구축논리

1. 향후 개발이 필요한 국가정책지표

-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책지표에서 개발이 보다 필요한 국가정책지표 영역
 - 교육분야: 공교육내실화, 교육격차해소, 학교폭력방지, 다문화교육, 창의인재육성, 평생교육확대, 교육개방성, 교육경쟁력
 - 문화 및 관광분야: 관광시설관리, 문화격차해소, 문화복지, 글로벌코리아
 - 사회복지분야: 복지전달체계, 한부모가정, 노사협력, 외국인근로자, 고령화, 일가정 양립, 생산성복지
 - 보건분야: 공적의료지원, 모성보호, 의료선택권, 생명윤리, 보건의료기술개발, 의료만족도
 - 통신분야: 공영방송, 개인정보보호, 디지털융합서비스, 정보통신기술개발, 스마트사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송통신국제협력
 -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윤리, 과학기술위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융복합기술개발,
 - 환경분야: 자원재활용, 화학물질관리, 생태계복원, 환경오염방지산업, 환경기술, 환경보건수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역자원관리, 지역갈등관리, 인구구조, 안전도시, 지역균형발전
 - 에너지분야: 에너지절약, 바이오에너지, 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목표관리
 - 농림수산식품분야: 농림수산업경쟁력, 농어촌소득향상, 농림수산업개방
 - 교통 및 물류분야: 녹색교통, 지속가능물류, 수송효율성, 대중교통활성화, 물류표준화, 교통물류정보화
 -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금융건전성, 고용확대, 자본시장효율성, 지식기반산업, 미래산업, 지역경제활성화, 자유무역협정(FTA), 공정무역, 개인파산/회생, 창업활성화
 - 통일·외교분야: 동아시아공동체, 남북교류협력, 국제기구활동, 자원외교, 공적개발협력, 국제분쟁대응
 - 국방분야: 국방개혁, 국방경영, 민군갈등관리
 - 공공행정분야: 시민참여행정, 공공기관선진화, 행정간소화, 재정운용관리, 예산집행효율성, 공정과세, 공공갈등관리
 - 공공질서·안전분야: 시민의식함양, 안전관리활동, 재난관리, 외국인범죄, 법률구조, 사법공정성

- 현재 e-나라지표 환경분야(대기보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의 경우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이외 환경의 질(오염 정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보다 체계적·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
 - 이산화탄소 최종소비 배출량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방사능과 선박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 도로교통에서의 이산화탄소(CO₂), 질소산화물(Nox), 직경 10마이크로 미터 미만의 대기오염원이 되는 미립자(PM10)의 배출량
 - 서비스업에서의 이산화탄소(CO₂),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
 - 제조업에서의 이산화탄소(CO₂),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₂), 직경 10마이크로 미터 미만의 대기오염원이 되는 미립자(PM10)의 배출량
 - 공공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CO₂),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

- 현재 e-나라지표 복지(아동복지)의 '국내입양아수 및 입양비율, 아동 안전사고 현황, 아동급식지원 현황 등'의 경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아동 행복지수'와 같은 질 높은 정책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그 외 복지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지표의 개발이 필요
 -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인력, 재정, 성과 차원의) 노숙자의 수
 - (환경적 평등을 위한) 주거환경(민간부문에서의 취약한 가정)

- 현재 e-나라지표 보건분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지표의 개발이 필요
 - (질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 비만율, 성인의 비만인구 비율, 1인당 보건비용
 -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우울증 인구비율

- 현재 e-나라지표 사회분야(경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지표의 개발이 필요
 - (안전과 시민보호를 위한) 나이에 따른 자살율, 폭력예방율
 - (e-나라지표상 범죄발생건수와 검거율 등은 있으나 이외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에 따른 범죄예방율

- 현재 e-나라지표 교육분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지표의 개발이 필요
 -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15-19세 청소년 교육과정 참여율, 15-64세 교육과정 참여율, 15-64세 고등교육 참여율

- 다문화가정2세 교육현황
 -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활동 차원에서) 청년들의 교육 또는 훈련비율
 - (인적자원의 유지를 위한) 15세 청소년의 독해능력
- 현재 e-나라지표 문화분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지표의 개발이 필요
- (문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의 참여율, 문화생활(행사) 참여율
- 현재 e-나라지표 경제-분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지표의 개발이 필요
- (소득의 불평등 및 형평성 차원의) 가구당 소득 차이, 빈곤층 비율,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
 - (혁신과 경쟁의 촉진 및 경제적 효율의 증진을 위한) 평균 가처분소득, GDP 대비 투자금액, GDP 대비 저축율, 공공부채

2. 원칙에 기반한 정책지표 구축논리

- 개인·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표 개발
- 초점: 대부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를 정책지표로 설정
 - * 예: '매년 1인당 여행거리', '1인당 GDP', '1인당 생활공간'과 같은 지표
- 특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제공한 차원의 지표 개발
- 초점: 정책 현황과 자원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를 정책지표로 설정
 - * 예: '대중교통기반시설의 변화', 'GDP에서 해외부채의 비율'과 같은 지표
- 정책집행과 예산(자본)의 효과 차원의 지표 개발
- 초점: 정책집행과 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적 측면의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정책지표로 설정
 - * 예: '1인당 도로교통의 연료소비량', '신규부채'
- 투입후 산출되는 과정의 효율성과 차별성 기준 정립 차원의 지표 개발
- 초점: 정책적·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자본)과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를 정책지표로 설정
 - * 예: '100km당 평균 연료소비량', '지역별 부채의 비교'

- 사회적·정치적 방안과 관련된 측정 차원의 지표 개발
 - 초점: 사회적·정치적 방안으로써 투입과 산출의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이 국가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를 정책지표로 설정
 - * 예: '교통혼잡비용의 세입'

- 결국 상기 5가지 지표 구축논리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국가정책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 즉, 지표구성은 지표 자체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지표가 가지는 중요성, 그 지표의 현황분석을 통해 지표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제시되게끔 우리나라 국가정책지표의 개발 원칙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지표의 목적가치 없이 바로 일반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정책지표 설정에 앞서 그 목적가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
 - * 예를 들어, 분야별 정책지표의 목적가치를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불평등 완화, 사회발전, 수명, 행복, 웰빙, 환경의 발전, 자원보호 등으로 명확히 정립한 후 이와 관련된 지표를 개발·정립하는 것이 바람직

- 국가정책지표 구축을 위한 정책주제의 구축 방안: '지속가능한 개발' 사례(예)
 - 먼저, '사회적 통합(결속)'에 관련한 지표구축 원칙 차원에서 다음의 각 내용에 따른 지표개발 기본원칙과 목적가치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제시
 - * 일반원칙
 - * 객관적/주관적인 생활수준
 - * 분배의 공정성, 기회의 형평성
 - * 사회적 응집력 강화
 - * 인적자원의 개발과 유지
 - 다음, '경제적 효율성'에 관련한 지표구축 원칙 차원에서 다음의 각 내용에 따른 지표개발 기본원칙과 목적가치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제시
 - * 일반원칙
 - * 경제시스템
 - * 효율성과 경쟁성
 - * 유연성과 안정성
 - *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

- * 고용
- * 국제무역
- 마지막으로, '환경적 책무성'에 관련한 지표구축 원칙 차원에서 다음의 각 내용에 따른 지표개발 기본원칙과 목적가치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제시
 - * 일반원칙
 - * 자원의 소비
 - * 환경오염
 - * 위험
 - * 변화율
-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국가정책지표를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주제에 따른 핵심가치를 상기 -와 *과 같이 체계적·논리적으로 구축하고, 이것에 기반해 지표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 지표 개발은 이러한 체계 정립 없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많아 국가운영의 핵심을 반영하는 지표가 부재한 경우도 발생

3. 지표 구성 및 지표 설명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사례

- e-나라지표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그래프(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증가율)-통계표(그래프 내용을 추가적으로 표로 제시)-의미분석 형식으로 설명 제시
 - e-나라지표의 환경분야는 크게 1) 대기보전(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등), 2) 상하수도(상하수도 급수현황, 하수도 보급률 변화추이 등), 3) 수질보전(수질현황,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등), 4) 자연보전(국립공원 현황, 생물종의 현황 등), 5) 토지오염(토지오염도 현황), 6) 폐기물(생활,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등)로 구분되어 운영
 - * 이와 같이 지표분류체계의 구체적인 설명과 체계 없이 병렬적인 구조로 상기 내용의 통계를 그래프(연도별 추이)-통계표(그래프 내용의 수치를 포함한 추가 내용을 표로 구성)-의미분석(지표설명-지표해석-향후 전망) 순으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
 -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래프는 총배출량과 증가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표는 앞 그래프의 내용에 추가하여 부문별(에너지부문 등)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을 표로 제시하고 있음
 - * 의미분석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통계 개념을 제시하고 지표해석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동향을 전년대비 몇 % 증가 또는 감소했다는 단순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수준이며, 향후 당분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 간단한 전망을 하고 있음

- 선진국의 지표운영을 통한 바람직한 정책지표 제시(설명)방식
 - 지표의 중요성 구체적으로 기술(설명):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본 정책이 중요한 이유, 관련 문제점, 지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제시)
 - 지표내용 해석(설명):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국가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본 지표가 국가정책과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지표의 긍정적 결과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
 - 지표 평가 및 방법론 구체적으로 제시(설명)

제4절 국가정책지표 선정, 품질관리 및 진단 기준

1. 국가정책지표의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 고객이 요구하는 정책지표의 품질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합리적·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행해 나가는 모든 활동

[표 8-3]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지표품질관리 기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IMF	Eurostat	OECD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신뢰성	정확성	정확성
시의성	시의성	시의성	서비스성	시의성/정시성	시의성/정시성
관련성	관련성	관련성	무결성	관련성	관련성
접근성	접근용이성	비용효율성	접근성	접근성/명료성	접근용이성
일관성	개편크기 최소화	응답부담	방법론의 충실성	일관성	일관성
해석가능성	커버리지 포괄성			비교성	해석용이성
				완결성	신뢰성

- 우리나라 국가정책지표 품질수준과 내용: 해외 운영사례 적용
 - 국가정책지표 통계나 정보가 이용자(국민/고객)가 이용하기에 얼마나 적합하게 작성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품질기준

[표 8-4] 국가정책지표 품질관리기준 항목과 내용

국가정책지표 품질기준	내용
관련성(relevance)	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이용자 파악, 전문가 자문회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
정확성(accuracy)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근사하게 측정했는지 정도(예: 국민계정 통계는 투입자료인 다른 표본조사나 총조사자료의 오류나 포괄범위, 조사시기, 평가방법 등의 불일치 등에 의해 오차 발생 가능)
시의성/정시성 (timeliness/punctuality)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이며, 사전공표일정을 정확히 준수할수록 정시성이 높은 통계
비교성(comparability)	시간·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정도(특정 정책지표 통계 관련 타국가 또는 다른 연도의 자료와 비교 가능한지를 보는 것)
일관성(coherence)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정도(지표 관련 잠정자료와 확정자료, 연간자료와 분기자료, 각 통계조사 등은 서로 다른 자료원과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가능하나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면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
접근성/명확성 (accessibility/clarity)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통계자료 DB화, 홈페이지 게시, SMS 속보 전송, 트위터 등)이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 정도(통계작성과정, 자료이용방법 등)

2.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국가정책지표 선정기준 및 내용, 평가수준

- 부처 국가정책지표 선정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은 지표 선정기준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의 평가수준은 5가지 척도로 측정(판정)

[표 8-5] 국가정책지표 선정기준의 자체 평가표 양식

선정기준		내용	평가수준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국가정책지표명: _____							
1	국정현안 관련성	정책지표의 내용이 국정현안이나 시의적인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		
2	부서 기능의 연계성	각 부서의 핵심적·총괄적인 기능과의 연계성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서별 지표 선정과정에서 해당부서의 핵심기능과 필수적으로 연계된 항목을 선정했는지를 의미)			○		
3	국민 관심도	정책지표의 내용이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크고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			○		
4	정책개입 가능성	해당 소관부서의 정책/사업 수행을 통해 통계지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적합 수준이 높은 경우 해당 소관부서의 정책지표로 활용하는데 훨씬 용이) * 단순한 관리지표는 안되며, 정책개입과 결과수준의 변화에 따른 인과적 관계 입증			○		
5	정책환경변화 대응성	정책지표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환경의 변화가 수시로 정책지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지를 의미(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가능 정도)			△		
6	결과중심성 (결과지향성)	정책지표가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고, 정책의 성과 수준 파악이 용이하며, 과제의 난이도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고객·국민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outcome)나 효과(impact)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의미)			◎		
7	정책의 대표성	정책 성과목표의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		
8	측정가능성 (객관성)	목표 달성 여부를 쉽게 파악하고 정책성적을 객관화하기 위해 가급적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지표가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지를 의미)			△		
9	달성가능성	노력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해당조직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		

3. 국가정책지표의 개발 단계와 주요 착안사항

□ 1단계: 구체적 정책목적의 파악

- 해당 정책이 이루고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
- 정책목적은 ①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하고, ② 구체적·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③ 상위 성과목표·조직임무와 부합되어야함

□ 2단계: 추진단계별 국가정책지표 도출

- 궁극적 정책목적 확인 결과를 토대로 정책 추진단계별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를 개발하는 단계
- 해당 정책의 목적 및 활동과 연관된 각각의 국가정책지표를 최대한 많이 도출하여 실제 이용 가능한 지표 풀(pool)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정책 단계별로 다양한 지표 풀(pool)을 구축함으로써, 정책 목적 연관성이 높은 지표의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3단계: 국가정책지표 선정기준 점검 및 최종지표 선정

- 2단계에서 도출된 지표의 풀 중에서 국가정책지표 선정기준에 따라 지표를 점검한 뒤 최종 국가정책지표를 결정하는 단계
- 특히 기준 중 '① 지표가 명확할 것, ② 측정 가능할 것, ③ 정책의 성과와 관련이 있을 것, ④ 신뢰성이 있을 것, ⑤ 성과측정 시기와 맞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

[표 8-6] 측정가능성 차원의 지표 점검방법 사례

사업명	관광지 개발 사업
사업목적	220여개 지정 관광지 내 공공기관 시설조성을 통한 지역별 국민관광기반 구축
나쁜 지표	관광사업의 지역내 총생산(GRDP) 기여율(%)
측정산식	$=(\text{관광사업 총생산} / \text{지역내 총생산}) \times 100$
이유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이나 현재 지역별 총생산 및 GRDP 중 관광사업의 기여율을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 측정시 측정비용이 과다하므로 측정가능성의 문제로 인해 좋은 지표가 될 수 없음
좋은 지표	지역 관광객 증가율(%)
측정산식	$=[(\text{금년도 관광객} - \text{전년도 관광객}) / \text{전년도 관광객}] \times 100$
이유	국민관광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관광객의 방문건수는 사업목적 연관성이 높으며, 측정가능한 지표에 해당
비고	본 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 통계포털과 관련한 연계성이 높음

4. 국가정책지표 개발 방안 및 사례

□ 측정가능·결과중심적 지표(6번, 8번) 설정

- 국가정책지표는 측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도록 설정하고, 특히 정책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정책의 난이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표 8-7]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구분	계량지표(정량지표)	비계량지표(정성지표)
정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구분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으며, 반복측정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개입
특성 (예)	- 우량농지조성면적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인구 10만명당 5대범죄 발생율	- 민원인 만족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 가급적 정책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정책가치를 반영하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 등을 병행

[표 8-8] 정책내용에 따른 지표 설정 사례 : 직업훈련학교 지원사업

구분	개념(정의)	특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교육 예산집행율 = (예산집행액/예산확보액)×100]	예산집행과 정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유용
과정 지표	정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직업훈련 실시 횟수]	정책 진도 등 정책추진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유용
산출 지표	정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판단하는데 유용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정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수료자 소득증가율, 직업훈련 참가자 취업률,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 취업훈련생 교육만족도]	정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유용

□ 정책의 대표성(7번) 확보

- 국가정책지표는 해당 정책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
- 특히 '효율성 지표'의 정립이 중요한데, 이는 정책활동의 투입 대비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
- 최소한 정책분야별 1-2개 이상의 효율성 지표의 제시가 필요

[표 8-9] 효율성 지표 개발 사례

유형	국가정책지표
단속·예방	사고율 1% 감축시 소요비용
통계·조사	비용 대비 정확도 또는 조사 1건당 비용
홍보	홍보효과 1%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교육	1인당 교육비
기준 제정	건당 소요비용
시험 운영	응시생당 운영비용
시설 운영	방문객 1인당 운영비용
보상금	청구 이후 지급결정까지 소요된 평균일수

5. 국가정책지표의 관리와 검증

□ 국가정책지표 주요 기재사항 기재: 지표 측정방법 및 검증방법 중심으로

- 다음의 표 등과 같이 국가정책지표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관리하기 위해 지표측정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 및 검증방법을 함께 제시 요망

[표 8-10] 국가정책지표 주요 기재사항표 사례 : 문화 및 관광 분야

구분	내용(예시)	비고
정책분야 대분류 체계	사회	
정책분야 중분류 체계	문화 및 관광	
정책명	게임산업 육성	
정책목표	- 게임산업의 기술개발 - 수출증대 및 게임전문 인력 양성	
국가정책지표명	- 국내게임산업 성장률(%) - 세계게임시장 점유율(%)	
지표 정의	- 국내게임산업 성장비율과 세계게임시장의 점유비율 측정	
지표 설명	- 국내게임산업 전체 성장 규모 - 세계게임시장 전체 점유 규모	
측정산식	-	
측정기간	-	
측정범위	-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지자체 지표와의 연관성	○	
통계자료 출처	문화관광체육부통계연보	

[표 8-11] 국가정책지표 주요 기재사항표 사례 : 보건 분야

구분	내용(예시)	비고
정책분야 대분류 체계	사회	
정책분야 중분류 체계	보건	
정책명	돼지콜레라 예방력 강화	
정책목표	- 돼지콜레라 면역 형성 강화	
국가정책지표명	-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율(%)	
지표 정의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결과 면역형성 비율 측정	
지표 설명	- 본 지표는 질병에 대한 면역항체 검사로 질병발생동향을 조기 파악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에 활용 가능	
측정산식	- 면역형성률 = (면역형성두수/검사두수)×100	
측정기간	- 2012년 0월 0일 - 2012년 0월 0일	
측정범위	- 청정농장인증 대상농가 (전국 000개 농가)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돼지콜레라는 개체 단위에서 면역형성 여부를 판정하게 되므로 검사두수 대비 면역형성두수로 산출	
지자체 지표와의 연관성	○	
통계자료 출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분기별 보고	

제9장

결론: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9장 결론 :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 앞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정책지표체계를 실제로 구축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

- 로드맵의 작성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이나 제도, 프로그램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유자원 및 역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이 국가정책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음
 - 첫째, 국가정책지표체계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공감 부족의 부분이며,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에서조차 국가정책지표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
 - 둘째, 통계청이 정부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의 문제이며, 국가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지표의 개발 및 관리, 활용에 대한 업무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집중화하고 조정할 수 있을 만큼 통계청의 위상이 높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
 - 셋째,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및 조직, 인력의 확보 부분이며, 국가정책지표체계가 완벽한 정책지원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관련 지표개발 및 관리를 위해 상당 규모의 예산과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자원동원 능력 부족
 - 넷째, 국가정책과정에서의 통계지표 활용을 위한 통계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의 부분이며, 개발된 국가정책지표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충분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인정이 필요하며, 승인통계가 아닌 다양한 정책지표의 수준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지표를 통계청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예상

- 그러나 한편으로 통계청이 국가정책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유자원 및 역량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음
 - 첫째,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의 부분이며, 통계청이 기존에 수행해 온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설정과 가이드라인의 제공 등은 향후 국가정책지표의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둘째, 통계진단사업의 수행역량과 경험의 부분이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기

존에 각 부처의 통계작성 등에 대한 진단사업을 통해 컨설팅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정책지표의 진단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셋째, 자체 통계개발 예산 및 인력의 보유 부분이며, 신규통계 개발사업이나 통계작성대행사업과 같이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에 비해 통계작성을 위한 예산 및 조직,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책지표의 관리 역량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됨
- 넷째, 통계청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부분이며, 다른 정책부서와 달리 특정 정책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통계행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국가정책지표의 관리와 관련해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음
- 다섯째, 통계기반 정책관리를 포함한 제도적 환경 변화의 부분이며, 전반적으로 통계청의 위상이 아직 낮은 편이지만, 통계기반 정책관리를 포함해 정책활동에서 통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통계청을 포함한 통계관련 행정조직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도적 여건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국가정책지표 체계 구축과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보유자원 및 역량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로드맵을 작성

- ① 단기(2012-2013) 계획으로, 국가정책지표체계 필요성의 공감을 통한 기반자원의 확보를 목표로 하며, 국가정책지표체계 필요성에 대한 논리 및 구체적 사례개발을 통한 공감 확보 및 전문가집단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지원그룹을 구성하는 추진전략을 채택
- ② 중기(2014-2015) 계획으로, 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국가정책지표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며, 국가정책지표의 선제적 서비스 개시 및 대국민·대정부 홍보활동을 통한 관심증대 및 지표개발과 관리를 위한 부처간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긴밀한 공조체계 형성의 추진전략을 채택
- ③ 장기(2016-) 계획으로,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커버리지 확대 및 정책과정에서의 제도적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며,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정책지표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확보 및 제도화와 정보화 수준의 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표체계 구축의 추진전략을 채택

[표 9-1]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로드맵

	단기 (기반구축)	중기 (체계구축)	장기 (체계활성화)
추진목표	국가정책지표체계 필요성 공유를 통한 기반자원 확보	이해관계집단의 적극적 협력과 국가정책지표 서비스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커버리지 확대 및 정책과정에서의 제도적 활용 강화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지표 추진위원회 발족 ▪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대국민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위원회 산하 국가정책지표위원회 구성 및 지원기구 마련 ▪ 관계 정부 부처와의 공식적 공조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정책지표위원회의 위상 강화 ▪ 국가정책지표체계 운영을 위한 법제화
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e-나라지표 시스템 진단 ▪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지표의 전면적 개선을 통한 정책지표 웹페이지로의 전환 ▪ SNS, GIS, OLAP 서비스의 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간 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한 자동적 지표관리 및 지표활용 방식 적용 ▪ 사용자 평가를 통한 신규 서비스 제공
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기본방향 논의 ▪ 분류체계 초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확정 ▪ e-나라지표와의 분류체계 통합 및 조정 ▪ 지표 분류체계 점검 기준 및 주기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지표 분류체계 적합성 진단 ▪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지표 분류체계 개발 및 보완
정책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분야별 필요 통계 지표 진단 ▪ 정책지표 수요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분류별 핵심지표, 보조 지표 등 발굴 ▪ 개별 지표의 측정과 분석방법, 정책적 함의에 대한 상세 설명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정책지표 진단을 통한 관리의 제도화 ▪ 정책지표 작성 및 관리, 활용을 위한 연구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지표체계 필요성에 대한 논리 및 구체적 사례개발을 통한 공감 확보 ▪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지원그룹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지표체계의 선제적 서비스 개시 및 대국민·대정부 홍보를 통한 관심 증대 ▪ 지표개발 및 관리를 위한 부처간 실무협의회의 구성을 통한 긴밀한 공조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지표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확보 ▪ 제도화 및 정보화 수준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표체계의 구축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동석·유시형. (2009). “공공정보시스템 효과성 측정지표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연구: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16(3).
- 공동성. (2006). “국정성과측정에 관한 연구의 동향” 『국정관리연구』 성균관대 국정관리연구소.
- 김기환 외. (2009).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 현황 비교분석 연구』, 통계개발원
- 김명수. (2000). 『정책평가론』, 전정관, 박영사.
- 김설희 외 (2005), 『국가통계 바로알기』, 통계청
- 김인식 (2009), “제 4장 공식 통계 분야의 국제협력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통계청
- 남궁근. (2001). “정책지표 개발의 이론 및 방법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학술논문.
- 남궁근. (1998).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 남궁근. (2001). “정책지표개발의 이론과 방법”, 정책과학분석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 노화준. (2001). 정책분석론, 박영사.
- 노화준·남궁근. (1990). 『통일정책관련 사회지표개발기초연구』. 국토통일원 연구보고서.
- 대통령비서실 편. (2007).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서울: 지식공작소.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 『희망한국을 향한 성찰의 기록』 서울: 미다스북스.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7). 『미래를 향한 도전,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서울: 아렌트.
- 류제복 (2003). “통계품질평가지표 개발”, 통계청
- 박광덕. (2001). “복지정책 지표의 개발과 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학술논문.
- 박성복. (1999). “삶의 질의 개념 형성과 정책지표체계의 예시적 구성 - Sen의 capability 개념의 비판적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총』 11(4) 835-856.
- 박성현·박진우 (2004),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응용통계연구, 제17권 3호
- 박희봉. (2011). 정부신뢰와 소통제고를 위한 Public Relations 시스템 구축: 국정소통

- 증진을 위한 정부 PR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소방방재청 (2010), 『2010 소방방재 주요통계 및 자료』
- 옥동석. (2001). “재정정책지표의 개발과 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학술논문.
- 윤태범 · 홍준현 · 김태일. (2001). “인사지표의 개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
대회 학술논문.
- 이광희. (2007). 『거버넌스지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 이광희. (2008). “국정평가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정관리연구』 3(2) 5-31
- 이기재 · 김영원 · 박진우 · 김설희 · 박은영 (2005), “보고통계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평
가지표 개발”, 조사연구 7권 1호
- 이시원. (2001). “고등교육 정책지표의 개발과 적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
대회 학술논문.
- 이인실(2012). “한국의 국가통계체계에 대한 소고”,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3).
- 이재형 (2004),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서울: 부키.
- 전라북도 (2010). “도정 대표 통계지표 실행 계획”
- 전북발전연구원 (2009), 『내부행정자료의 일반통계 활용방안』
- 정영근. (2001).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 환경
정책·평가연구원.
- 정영근. (2005).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정용덕. (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용덕. (2006). “거버넌스와 국가역량” 『국정관리연구』 1(1) 9-35.
- 최영훈 · 신열. (2001). “과학기술정책지표의 개발과 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
계학술대회 학술논문.
- 최정수 (2005), “국가통계의 발전방향”, 통계청
- 최호진·정지범·박경돈·임동진. (2008). 『미래 선진한국의 행정연구』 서울: 법문사.
- 통계개발원 (2007), 『국가통계제도 비교를 위한 국제(UN)공동연구』
- 통계개발원 (2009),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연구』
- 통계개발원 (2009), 『삶의 질과 지표체계 개선연구』
- 통계청 (2003),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학술연구”, 통계청

- 통계청 (2007), 『2007년 인구이동통계연보(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 통계청 (2007), 『국가통계 조사표 설계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 통계청 (2007), 『통계자료 공표 매뉴얼』
- 통계청 (2007), 『표본 품질관리 매뉴얼』
- 통계청 (2008), 『통계행정편람』
- 통계청 (2010),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지침”
- 통계청 (2010),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고찰』
- 하혜수·최영출·홍준현. (2001). “지방분권화 정책지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학술논문.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0),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고찰』
- 한영환(2000). “국가발전의 개념: 목표론적 접근과 기능론적 접근”, 중앙행정논집, 14(1).
- 황혜신·류현숙·박경돈·서용석·이재호(2009).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원
- Bauer, Raymond A. 1966. "Defini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The Nature of the Task," Chapter 1 in Raymond A. Bauer (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 Duncan MacRae, Jr. 1985.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Duncan MacRae, Jr. 1986. "Democratic Information System," in W. N. Dunn (ed.), Policy Analysis: Perspectives, Concepts, and Methods, Greenwich, Connecticut: JAI Press, 131-163.
- Dunnell, Karen (2007), "Guidelines for Measuring Statistical Quality",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GAO(2011). Key Indicator Systems: Experience of Other National and Subnational Systems Offer Insights for the United States, GAO-11-396.
- GAO. (2003). Forum on Key National Indicators - Assessing the Nation's Position and Progress.

- Gross, Bertram M. 1966. "The State of the Nation: Social System Accounting," Chapter 3 in Raymond A. Bauer (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 Kaufmann, D., Kraay, A., & P. Ziodo-Lobaton. (1999). "Aggregating Governance Indicator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Kaufmann, D., Kraay, A., & P. Ziodo-Lobaton. (1999). "Governance Matter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MacRae, Duncan Jr. (1985).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MacRae, Jr., Duncan(1985).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OECD (2007), "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
- OECD (2007), "Towards Better Measurement of Government",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1
- OECD. (1998).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Indicators"
- OECD. (2001). "Sustainable Development Critical Issues"
- OECD. (2005). "2005 Annual Repo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ork at the OECD"
- Perez, Teresita and Rushing, Reece. (2007). *The CitiStat Model: How Data-Driven Government Can Increas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Skowronek, S. (1982). Building a New American Sate: The Expansion of National Administration Capacities, 1877~1920.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TBS. (2012). Canada's Performance
- UN Statistical Commission (2010), "Statistics Canada : National Quality Assurance Framework", UN Statistical Commission Forty First Session.
- UNCSD. (1996).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 and Methodologies."

UNDP. (2004). "Governance Indicators: A User's Guide."

World Bank. (1997). The State in a Changing World. World Bank Report.

Young, R. D. (2004). An Overview of the GAO Report on Key National Indicators.